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총서 28

2013

동아시아

평화와 협력을

위한 대화

제주평화연구원 편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총서 28

JPI PeaceNet 시리즈

2013 동아시아

평화와 협력을 위한 대화

인 쇄 2013년 12월 27일

발 행 2013년 12월 31일

역은이 제주평화연구원

발행인 전미정

발행처 (주)늘품플러스

주 소 서울 중구 필동 1가 39-1 국제빌딩 607호

전 화 070-7090-1177

ISBN 978-89-93324-63-1 03300

정가 12,000원

© 제주평화연구원, 2013

※ 잘못된 책은 교환해 드립니다.

JPI PeaceNet 시리즈

2013 동아시아 평화와 협력을 위한 대화

JPI PeaceNet에 게재된 의견은 저자개인의 의견으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제주평화연구원은 갈등요인이 산재한 한반도와 동아시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이론과 정책대안의 산실이 되고자 2006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설립 이래로 저희 연구원은 평화와 협력을 위한 논의를 촉진하여 세계 평화의 섬 제주가 명실상부하게 평화담론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왔습니다.

오늘날 동아시아에는 북한의 핵무기부터 역사와 영토분쟁까지 평화와 협력을 위협하는 크고 작은 위험요소들이 산적하여 있습니다. 특히 2013년에는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동아시아 회귀에 더하여 북한의 핵전력 증강, 일본의 보수화 현상이 강화되어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요인이 급증하였습니다. 한반도와 동아시아에서 크고 작은 위험요소가 산재한 이러한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 갈등을 해결하고 평화를 정착시키는 구상과 대안이 절실합니다.

JPI PeaceNet은 국제평화와 번영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현안에 대한 동아시아 각국의 다양한 의견이 대변되고 실시간으로 교환하는 장으로서 2009년에 출범한 후 올해로 5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고 실시간으로 교환되는 ‘가상 공간’으로서 JPI PeaceNet은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첫째,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서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주요 현안에 대해서 다양한 국적의 저자들에게 의견을 요청함으로써 가능한 한 균형 잡힌 시각으로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둘째, 국문, 영문, 중문으로 출간됨으로써 국내 전문가 간의 의견소통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의견소통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셋째,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전자메일을 통해 신속하게 배포함으로써 실시간으로 의견이 대변되

고 교환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13년 JPI PeaceNet은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 ‘안보와 협력의 새로운 영역,’ ‘변화 속의 세계정치’ 라는 세 가지 대주제 아래 다양한 현안에 대한 국내외 정책결정자, 전문가, 오피니언 리더들의 견해와 생각을 담았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저자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기고를 해주셨고, 출판된 원고에 대해서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2013년 한해 동안 논의되고 교환된 생각들을 모아서 ‘JPI PeaceNet 시리즈: 2013 동아시아 평화와 협력을 위한 대화’라는 제목 아래 단행본으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논의들을 한 권의 책 안에 일관된 구성을 통해 정리하는 것은 그간 고견을 주신 여러분의 지혜를 널리 알리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JPI PeaceNet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과 제주평화연구원의 발전을 위해 충고와 조언을 아끼지 않고 보내주신 분들에게 지면을 통해서 다시 한 번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JPI PeaceNet이 소통과 교류를 통해 제주도를 세계 평화담론의 중심으로 발전시키려는 원대한 목표에 작은 보탬이 되었기를 희망합니다. 끝으로 저희 연구원의 연구 성과를 출판하도록 도와주신 출판사 늘품플러스의 전미정 대표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3년 12월

제주평화연구원장 문 태 영

CONTENTS

제1부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 I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3
유현석
- 如何理解韩半岛信任进程 10
柳现锡
- Understanding the ‘Korean Peninsula Trust Process’ 16
YU Hyun-seok
- Dealing with North Korea and Its Nuclear Threat 22
CHO Taeyong
-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의 신험력 시대 28
주철기
- 동아시아 세력전환과 한국외교 34
신각수
- 동아시아 강대국 정치와 한국의 좌표 39
김성한
- 评朴槿惠总统访华 44
金中燮
- South Korea–European Union Security Cooperation:
A South Korean Perspective 52
HAN Intaek

제2부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 II

- The European Union and a Nuclear-free Korean
Peninsula: An European Perspective 61
Ian ANTHONY

2013 동아시아 평화와 협력을 위한 대화

- 중국의 시진핑 시대 개막과 한중관계 전망 66
방수옥
- 중국의 대북 전략논쟁과 한국 주도외교의 방향 72
황병무
- 북한의 핵실험과 한중 양국의 공조방안 77
진행남
- Japan's North Korea Adventure 86
PARK Cheol Hee
- Currency Swaps Move South Korea Closer to China,
away from Japan 90
HAN Intaek
- 일본의 군사적 보통국가화와 동북아 안보환경 94
조양현
- 2013년 동아시아 지역 정상회의 결산:
한-아세안 안보 대화와 미-중 경쟁 101
이재현
- 몽골과 일본의 북한정책 106
Julian DIERKES & Otgonbaatar BYAMBAA

제3부 안보와 협력의 새로운 영역

- 사이버 시대의 국가 안보 113
한인택
- 사이버 안보와 미중관계 118
장노순
- Sport and Corporate Diplomacy 127
Steven J. JACKS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이버 안보 국제협력과 국가전략 김소정 ■ 「DMZ세계평화공원」 추진방향 손기웅 	<p>132</p> <p>140</p>
---	-----------------------

제4부 변화속의 세계정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ussian-Chinese Political Relations: General Overview Vladimir PARAMONOV & Aleksey STROKOV ■ 시리아 사태와 중견국가 한국의 전략 장지향 ■ 이란 신정부의 과제와 전망 이상철 ■ Korea-Middle East Cooperation: Comprehensive Partnership towards a New Horizon YUN Byung-se ■ 한중동 협력: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포괄적 파트너십 윤병세 ■ 이란 핵 협상 타결과 전망 유흥태 ■ 미중 '신형 대국관계'로 가는 길 Patrick CRONIN ■ 한·중관계의 미래 송민순 	<p>147</p> <p>152</p> <p>157</p> <p>163</p> <p>169</p> <p>174</p> <p>180</p> <p>186</p>
---	---

저자 프로필	192
--------	-----

제1부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 I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 如何理解韩半岛信任进程
- Understanding the ‘Korean Peninsula Trust Process’
 - Dealing with North Korea and Its Nuclear Threat
 -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의 신협력 시대
 - 동아시아 세력전환과 한국외교
 - 동아시아 강대국 정치와 한국의 좌표
 - 评朴槿惠总统访华
- South Korea–European Union Security Cooperation:
A South Korean Perspective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유현석

한국국제교류재단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박근혜 정부 한반도 정책의 뼈대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의 3차 핵실험과 일련의 도발행위, 개성공단 근로자 철수 등으로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때도 우리 정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계속 추진될 것을 거듭 밝혔다. 올해 현충일 추념사에서조차 북한에게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받아들이는 것이 북한이 선택해야할 변화의 길임을 강조했다. 이러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4개월이 다 되어 가는 현 시점에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 것 같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배경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라는 한반도 정책은 과거 정부들의 대북정책들이 북한의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그 동안 다양한, 때로는 상반된 정책들이 추진되었지만 북한의 변화나 남북관계의 진정한 진전을 만들지는 못했다. 남북관계에서 북한의 약속 위반과 도발, 그에 대한 제재 그리고 타협 그리고 또 다른 약속 위반과 도발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반드시 끊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이미 존재했지만 북한의 약속 위반을 비판하는 것이 근본적 해결이 될 수는 없다. 이러한 악순환의 반복을 막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며 신뢰의 구축이 핵심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기본 인식이다. 또 하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보다 진전된 생각을 담고 있다. 즉, 남북 간의 평화로운 관계는 단순히 힘의 우세로 얻어질 수는 없으며 힘의 우위를 유지하는 것은 평화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따라서 힘에 기초한 안보라는 현실주의적 접근과 함께 신뢰를 통해 보다 근본적인 남북관계의 변화를 이끌어 지속가능한 평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단순히 지키는 평화가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기본 인식이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성격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 해보자.

우선 신뢰프로세스는 유화정책이 아니다. 확고한 안보는 한반도 신

뢰프로세스의 전제 조건이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평화 지키기” 부분과 “평화 만들기” 부분으로 구성되고 “평화 지키기” 부분은 평화만들기의 토대가 된다. 신뢰프로세스가 무조건적으로 상대방을 믿는 것이 아니며 안보에 대해서는 확고한 태세를 갖추고 평화를 깨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약속을 지킬 경우에는 그에 상응해 관계를 진전시킴으로써 북한의 행동패턴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정책이다.

둘째, 신뢰프로세스는 특정 상황이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아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남북관계의 큰 방향과 원칙을 제시하는 정책 가이드라인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북한 핵 문제와 같은 구체적 문제라든지 통일정책, 급변사태 관련한 정책 등과는 차원이 다른 남북관계의 근본적 변화를 위한 정책 가이드라인이다.

셋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남북관계가 좋을 때에만 가능한 정책이 아니다. 오히려 남북 관계가 나쁜 상황에서 더욱 필요한 정책이다. 현재의 남북 간의 긴장으로 인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추진하기 어렵다던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추진해보기도 전에 좌초했다 등의 평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다.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한 응징을 분명히 하면서도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하는 현재의 상황은 바로 신뢰프로세스가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다만 현재는 안보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평화 지키기” 부분에 정책의

방점이 갈 수밖에 없고 “평화 만들기” 부분이 본격적으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조건을 걸고 하는 정책이 아니다. 이 부분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차별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비핵화와 같은 조건을 걸고 그것에 진전이 없으면 모든 교류를 중단하는 정책이 아니라 일단 실천 가능한 신뢰구축 노력을 선행하는 적극적인 정책이다. 또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유연한 전략이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상황변화에 따라 억지와 대화, 안보와 교류협력간의 상대적 중요성을 조정해 나가는 전략이다. 따라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압박 일변도나 교류 일변도의 접근이 아니라 항상 두 가지를 병행 추진하는 전략이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한반도를 넘어서서 동북아 차원의 노력과 연결되어 있다. 신뢰프로세스가 가동될 수 있는 국제적 환경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동북아 차원의 신뢰구축 노력과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동북아의 국제관계가 협력적일 때 지지를 확보할 수 있고 또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동시에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함으로써 동북아의 평화·안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은 상호추동하는 관계라고 할 수 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가장 큰 비판은 과연 북한과 같은 상대와 어떻게 신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느냐는 실현가능성에 대한 것이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현실에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를 논의하기 위해 방법론과 수단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첫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추진을 위한 과정적 접근이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신뢰구축 과정 속에서 남북 간 신뢰가 구축되고 그를 통해 더 높은 단계의 협력과 관계의 진전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구축된 신뢰 수준에 맞는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고 이러한 교류·협력이 또 신뢰를 증진시키는 상호강화 과정이다. 여기서 명심할 점은 신뢰구축 수준에 맞지 않는 과도한 또는 높은 수준의 교류 협력은 결코 지속적일 수 없으며 쉽게 역전될 수 있다는 역사적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구체적으로는 신뢰프로세스는 단계적 접근을 상정하고 있다. 신뢰가 완전히 구축되지 않았더라도 구축된 신뢰 수준에 맞는 지원, 교류·협력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신뢰구축과 교류협력의 단계를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 초기 단계에서는 비핵화와 같은 조건을 걸지 않고 남북한의 기존 합의를 존중하고 실천 가능한 합의부터 이행 그리고 조건 없는 인도적 지원을 통해 상호간의 기초적 신뢰를 쌓는 단계이다(약속에 기초한 신뢰 쌓기 단계). 두 번째 단계에서는 신뢰

의 진전에 따라 서로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남북간의 호혜적 경제·사회문화 교류를 추진하여 더 높은 단계의 신뢰를 구축하게 된다(상호이익에 기초한 신뢰쌓기 단계). 남북한의 본격적인 교류·협력은 비핵화에 명확한 진전이 있는 경우 한반도 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 추진(공동체 비전 공유를 통한 신뢰쌓기 단계)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방법론과 함께 구체적인 수단들에 대한 언급이 필요하다.

신뢰구축의 첫 시작은 기존의 약속을 지키는 것을 통해 기초적인 신뢰를 쌓는 것이다. 북한이 국제사회와 남한과 맺은 약속들 그리고 국제규범을 지키는 것이 신뢰를 쌓는 첫 걸음이다. 우리는 약속을 지키는 것과 같은 북한의 선한 행동에 대해서는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약속 이행의 동기를 제공해야 한다. 인도적 지원 역시 기초적 신뢰구축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둘째는 다각적 대화의 추진이다. 남북 간의 양자대회와 함께 다양한 양자회담, 3자 회담(한미중, 남북미, 남북중 등), 6자회담 등을 활용해 신뢰구축을 위한 노력을 지원해야 한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과 같은 다자대화체 역시 한반도에서 신뢰구축을 지원하는 메커니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의미있는 진전이 있지 않으면 신뢰프로세스

는 평화지키기 단계와 기초적인 신뢰쌓기 단계(인도적 지원 유지, 대화의 문을 열어 놓는 것) 이상의 추진이 어렵다. 현재 남북관계에서 필요한 것은 억지력 강화를 포함한 안보를 확고히 하는 일과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의미 있는 행동을 취하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을 계속하는 일이다. 그와 동시에 북한이 의미 있는 대화의 장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보다 창의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如何理解韩半岛信任进程



柳现锡

韩国国际交流财团

“韩半岛信任进程”可称为朴槿惠政府提出的韩半岛政策骨干。北韩进行的第三次核试验、一系列挑衅行为及撤走开城工业园区的北方劳动者等，即使南北关系极度恶化的情况下，韩国政府还是一再阐明要继续推动韩半岛信任进程。在今年举行的显忠日悼念式上，朴总统仍然强调北韩积极接受韩半岛信任进程才是北韩应选择的变化之路。韩半岛信任进程如此重要，但是，眼下朴槿惠政府上台已近四个月，对韩半岛信任进程的误解和争论似乎依然存在。

韩半岛信任进程出台的背景

出台“韩半岛信任进程”的韩半岛政策，主要基于历届政府實施的對北政策并未帶來北韩有意義的变化。虽然期间實行了各种多樣化的，有時甚至相反的政策，但是并未帶來北韩的变化，也未能真正促进南北關係。在南北關係中北韩不斷违约发起挑衅，對此時而制裁、時而妥协，最终又演变成新一轮的违约和挑衅。必須切斷这种惡性循环的共识已经存在，但是單靠批判北韩违约不可能從根本上解决问题。爲了阻止惡性循环的重复出现我们需要深入思考并构筑信任可成爲其核心要素，这就是韩半岛信任进程的基本认识。另外，韩半岛信任进程對韩半岛和平还包含着更进一步的想。那就是單靠力量优势无法建立南北和平關係，维持力量优势是和平的必要條件，但并非充分條件。因此，從現實主義角度，需要靠力量维持安全，同時通过信任，從根本上促使南北關係发生变化，從而创造可持續的和平。也就是說，韩半岛信任进程的基本认识不仅仅是守护和平，而是更加积极创造和平。

下面谈谈韩半岛信任进程的性質。

首先，信任进程并非是绥靖政策。坚固的安全是韩半岛信任进程的前提條件。再明确一点，就是韩半岛信任进程由“守护和平”和“创造和平”两个部分组成，“守护和平”是“创造和平”的基础。信任进程并非无條件地相信對方，而是對於安全要有坚固的應對态势，使那些破坏和平的行爲必须付出代价，而守约時要相应的促

進關係，從而從根本上改變北韓的行動模式。

第二，信任進程並非是為解決特定情況和問題而設定的政策。將韓半島信任進程視為為南北關係提出大方向和原則的政策指針更加恰當。因此，韓半島信任進程作為從根本上為南北關係帶來變化的政策指針，同一些具體問題和政策不屬於一個層次，如北韓國核問題、統一政策、有關突發事件的政策等。

第三，韓半島信任進程並非是只南北關係好轉時才可行的政策。反而，南北關係惡化時更需要的政策。有些觀點認為目前由於南北關係緊張，很難推動韓半島信任進程，或認為韓半島信任進程尚未啟動就觸礁。出現這些評價的原因在於對韓半島信任進程存在認識錯誤。對於北韓的挑釁，加強遏制力，對於挑釁，既要強烈應對，還要敞開對話窗口，促使北韓坐到談判桌上。目前所進行的一系列努力就是在踐行信任進程。只是，目前安全形勢嚴峻，政策更導向“守護和平”部分，而“創造和平”部分無法積極踐行。

第四，韓半島信任進程並非是拿條件做籌碼的政策。這一點是韓半島信任進程區別於李明博政府的對北政策的部分。韓半島信任進程並非是以無核化為條件籌碼，如果看不到進展就中斷所有交流的政策。而是以努力構築可踐行的信任為先的積極政策。而且，韓半島信任進程是富有彈性的戰略。它可以根據形勢變化隨時調整政策的相對重要性，如遏制與對話之間、安全與交流合作之間。因此，韓半島信任進程並非是使用施壓一邊倒或交流一邊

倒的接近方式，而是以同時并行的方式推动的戰略。

最后，韩半岛信任进程超越韩半岛，与在东北亞高度上开展的努力连结。爲了營造能够實施信任进程的國際环境，需要与從东北亞高度上构筑信任的努力并行。而且，韩半岛信任进程只有在东北亞的國際關係趋于缓和時才能贏得支持，才能穩步推进。同時，韩半岛信任进程對韩半岛和平与穩定做出貢獻，對东北亞的和平与穩定发挥积极作用。在这种意義上，可以說韩半岛信任进程与东北亞合作构想是能够相互促进的關係。

如何推进韩半岛信任进程？

對信任进程批判最多的是，如何与北韩构筑信任關係，其可能性有多大？下面谈谈在現實中推动韩半岛信任进程的方法论和手段。

第一，爲了推进韩半岛信任进程，需要一种过程性接近方式。韩半岛信任进程应理解爲一种过程，即在建立信任过程中南北间积累信任，并通过这种信任，將南北關係发展成相互合作的更高阶段。再具体一点，推进南北间交流時需要符合南北间已构筑的信任水平，而且这种交流与合作又进一步增进相互信任。但需要铭记的是，历史經驗证明，不符合构筑信任水平的过高水平的交流与合作不可能持續，也容易逆轉。

第二，具体地說，信任进程意味着阶段性接近方式。即使无法完

全构筑信任，爲了推进符合信任水平的支援、交流、合作，需要將信任进程分成建立信任和交流合作两个阶段。初期阶段，先不提无核化等條件，尊重过去南北间達成的协议，履行可實踐的协议，然后通过无條件的人道主義援助，建立相互间基础性的信任。(以约定爲基础的积累信任阶段) 第二阶段，根据信任的进展情况，开展對南北能帶來實質性帮助的互惠經濟、社會文化交流，從而构筑更高阶段的信任。(基于互惠互利的积累信任阶段) 只有在无核化目标上確實有进展時，真正意義上的南北交流与合作可以通过推进“VISION KOREA PROJECT”來實現。“VISION KOREA PROJECT”是爲了建设韩半岛共同体而制定的。(通过共享共同体愿景的积累信任阶段)。

根据上述的方法论，需要阐明具体手段。

构筑信任的第一阶段，就是通过遵守已约定的协议，构筑基础性信任。北韓遵守与國際社會和南韩签订的协议以及國際规范，是构筑信任的第一步。對於北韓守约的善舉，我们要提供补偿，赋予履行约定的动机。人道主義援助也可以稱爲建立基础性信任的手段。

第二，推动多边對話。除了南北间双边對話以外需要开展各种双边會谈、三方會谈（韩美中、南北美、南北中等）、六方會谈等，支援爲建立信任所做的努力。就如“东北亞和平合作构想”的多边對話体制也將成爲构筑韩半岛信任的支援机制。

假如在北韩无核化问题上无法取得有意義的进展，那么信任进程无法期待超越守护和平阶段和建立基础性信任阶段（维持人道主義援助、敞开對話窗口）。目前，在南北關係上需要促进兩件事，即切實巩固包括加强遏制力在內的國家安全和爲了促使北韩在无核化问题上做出有意義的行動，与國際社會一道繼續做出努力。于此同時，爲了使北韩坐到有意義的談判桌上，需要做出更有创意的努力。



Understanding the ‘Korean Peninsula Trust Process’



YU Hyun-seok

Korea Foundation

The ‘Korean Peninsula trust process’ is arguably the backbone of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s North Korea policy. Even amid North Korea’s third nuclear test, the closure of the Gaesung Industrial Complex, and its continued provocative behavior, the administration has repeatedly indicated that it will steadfastly pursue the Korean Peninsula trust process. In her Memorial Day speech, for instance, President Park once again stated that accepting the Korean Peninsula trust process was the way forward for North Korea. Despite its significance, misconceptions and controversy over the trust process continue to exist.

Background

The trust process starts from the recognition that previous administrations failed to make lasting progress in their relations with North Korea. While they pursued diverse, sometimes contradictory policies, none of them succeeded in changing North Korea's behavior or improving inter-Korean relations in any meaningful sense. Though there was already a consensus that the vicious cycle of North Korean provocations followed by sanctions and eventual compromise must stop, simply criticizing North Korea for its provocations does not fundamentally resolve the problem. The trust process was thus devised in the beliefs that efforts to end the vicious cycle were necessary, and that confidence-building measures may be essential.

Also important, the trust process involves a more progressive thinking about peaceful conditions in the Korean Peninsula. The administration recognizes that peaceful relations cannot be achieved nor maintained through superior power alone; superior power is a necessary but not sufficient condition for peace. Therefore, in addition to taking a realist approach based on the idea of 'security through power,' we must also bring about fundamental changes in inter-Korean relations through trust-building in order for a sustainable peace. Rather than simply 'keeping peace,' we should actively make peace. This is the fundamental idea behind the trust process.

Let's discuss the trust process in greater detail. First, it is not a policy of appeasement; rather, strong national security is a prerequisite for the trust process. Specifically, the trust process is composed of two parts:

keeping peace and making peace. The former is the foundation for the latter. It is not about unconditionally trusting North Korea; it is about having a strong stance on security issues and seeking retribution for actions disrupting the peace, but at the same time improving relations and essentially altering North Korea's behavior when they keep their promises.

Second, it is not a situation-specific or a problem-solving policy. Rather, the trust process is best understood as a policy guideline that suggests the basic principles and general direction for inter-Korean relations. In other words, it is a policy guideline intended to fundamentally change relations between two Koreas; it is different from unification policy, contingency plans, or policies to deal specific issues such as the nuclear problem in its nature.

Third, it is not only for when South-North relations are good. On the contrary, the trust process is most needed when relations deteriorate. Criticism that the trust process is difficult to implement due to current tensions or that it failed before it was even implemented stem from a misunderstanding of the trust process. In fact, the administration's current strategy—enhancing deterrent capabilities, pushing for tougher responses against aggressions, all the while leaving the door open for talks—shows that the trust process is actually at work. It is just that because of the current tensions, more weight is being put on “keeping peace” rather than “making peace.”

Fourth, it is not conditional. This is the biggest difference from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s North Korea policy. The trust process

does not call for a complete halt in exchanges because certain conditions like denuclearization are not met. Instead, it is about actively searching for practical confidence-building efforts. Also, the process is flexible in that it alternates between deterrence and negotiations, and between security and exchanges, depending on the situation. Therefore, the process leans to neither absolute deterrence nor absolute exchange, but always a combination of the two.

Lastly, it is not limited to the Korean Peninsula, but instead it encompasses Northeast Asia. To implement the trust process in an international environment where it can operate, we need to simultaneously promote confidence-building measures in Northeast Asia. The trust process can earn support and run smoothly when Northeast Asians work together. Reversely, the trust process can also contribute to peace and stability in Northeast Asia by promoting peace and stability on the Peninsula. In this sense, the trust process and President Park's Northeast Asia Peace Initiative are mutually-reinforcing initiatives.

How to Implement the 'Korean Peninsula Trust Process'

Perhaps the strongest criticism against the trust process is the viability of building trust with a country like North Korea. This section discusses approaches and steps to implement the trust process in reality.

First, the trust process takes a 'process' approach for implementation. The trust process should be understood as a process in which steady progress on confidence-building measures incrementally raises the degree of trust between the two sides, which, in turn, leads to higher

levels of cooperation and improved relations. Specifically, this is the mutually reinforcing process in which according to the level of trust,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are increased, and as a result, trust is further expanded. However, as history teaches us, high levels of exchange exceeding the confidence-building levels may be difficult to maintain; they can be easily reversed. We must not forget the teachings of history.

Second, the trust process assumes a phased approach. Even if confidence is not completely established, in order to provide aid, exchange, or cooperate according to the level of trust, it is necessary to distinguish between different stages of confidence-building, exchange and cooperation. The initial phase requires respect for past agreements but should not require conditions like denuclearization. In this phase, we implement practical agreements and give unconditional humanitarian aid to the North, thereby building a base level of trust between the two sides (trust-building through agreements).

In the later phase, as more trust is built, the two sides can provide actual help to each other. With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exchanges, a higher level of trust can be reached (trust-building through mutual benefits). When there is clear progress on denuclearization, exchange and cooperation will begin in earnest through the “Vision Korea Project” intended to create a Korean Peninsula economic community (trust-building through a common vision of community).

In addition to the approaches discussed above, specific steps need to be discussed.

The first step in confidence-building is to keep promises, creating a basic foundation of trust. North Korea must comply with international norms and fulfill its agreements with South Korea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e must provide incentives for North Korea to comply by compensating it when they have fulfilled their promise. Humanitarian aid may also be a means of basic confidence-building.

The second step is to promote multilateral negotiations. Along with two-party talks between the two Koreas, we should make use of various other two-party and three-party talks (South Korea-United States-China, South/North-United States, South/North-China, etc.) and six-party talks for confidence-building. Multilateral initiatives such as the 'Northeast Asian Peace and Cooperation Initiative' can act as a mechanism for confidence-building on the Korean Peninsula.

Without meaningful progress on denuclearization, however, it will remain difficult to advance beyond the 'keeping peace' and 'basic trust-building' stages (continuing humanitarian aid and leaving doors open for talks). At present, it is necessary to reinforce security, by, for instance, enhancing South Korea's deterrent power, while at the same time continuing to work with international community in order to get North Korea to take meaningful steps towards denuclearization. At the same time, more creative efforts to bring North Korea to meaningful talks are needed.



Dealing with North Korea and Its Nuclear Threat



CHO Taeyong

Special Representative for Korean Peninsula Peace and Security Affairs
Republic of Korea

The ROK's Policy

My government firmly believes that the only viable way to resolve the nuclear issue through diplomacy is for North Korea to make a strategic decision to give up its nuclear weapons. It is indeed a tall order, but ultimately there is no other way. So our efforts must be focused on creating an environment in which North Korea has no other option but to make a fundamental change.

Based on a firm principle of no tolerance of nuclear weapons, Korea is

pursuing a policy of stronger pressure and more robust diplomacy in close cooperation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irst of all, Korea maintains strong deterrence based on its alliance with the US so that we can prevent provocations and maintain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To cope with North Korea's WMD threat, Korea and the US adopted a tailored deterrence strategy at the recent SCM.

In response to North Korea's third nuclear test, the UN Security Council adopted the fourth sanctions resolution on North Korea,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China, is implementing the sanctions more effectively. These sanctions ratcheted up pressure on North Korea and perhaps played a part in North Korea's switch to a dialogue mode this May.

China may be the only country capable of influencing North Korea's strategic thinking in a meaningful way. Korea and the US place emphasis on fostering strategic collaboration, stressing coinciding strategic interests in denuclearization. Recently, China seems to put more emphasis on denuclearization in its Korean Peninsula policy. For example, China made public a long list of export control items listing over 900 WMD-related dual use items. This is worthy of note as China officially reaffirmed that it would exercise its full responsibilities as a permanent member of the UN Security Council.

Korea believes that strengthened strategic cooperation among Korea,

the US and China can play a central role not only in building sustainabl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but also embarking on the road to a peaceful reunification.

Korea is working closely with Japan and Russia as both countries firmly oppose North Korea's nuclear ambitions. Korea is also making efforts to work more closely with ASEAN, EU and many other member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ll in all, North Korea finds itself in an increasingly isolated position because of its nuclear weapons program. Our aim is to create a situation where the cost of pursuing nuclear ambitions is becoming unsustainable. We must create a situation where North Korea has no choice but to admit that nuclear weapons are after all no strategic asset but strategic liability that prevents North Korea from pursuing economic development and closer ties with China and other countries.

Korea keeps the door open to dialogue. But, Korea believes that dialogue must be conducive to progress in denuclearization and North Korea must not be allowed to increase its nuclear threat while the talks are under way.

North Korea says these days that it calls for the resumption of talks without any preconditions. But, given North Korea's dismal track record, should we resume dialogue without robust preparations, it would prove a recipe for failure and can inflict a mortal damage on the Six Party Talks.

More specifically, we must first make sure that the goal of the talks is denuclearization.

Second, robust steps need to be taken to prevent North Korea from abusing the time for dialogue as a window of opportunity to strengthen its nuclear weapons capability.

Third, once talks are resumed, accelerated negotiations must be conducted to secure agreement for a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ismantlement.

Outlook for Negotiations and Policy Options

If we look back at the history of nuclear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every agreement including the Agreed Framework in 1994 and September 19 Joint Statement of 2005 only progressed so far to the stage of freeze, but never made it beyond the point of “the moment of truth”, that is complete declaration and verification.

North Korea was eager to prolong both the negotiation and implementation process using salami tactics and brinkmanship, while always evading to take irreversible steps.

That has to change. The only effective way is to fundamentally change the way North Korea calculates.

For this to happe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needs to exert more pressure strong enough to force North Korea’s strategic calculations.

Second, we have to make it clear that once North Korea chooses to come on the desirable path, it will be able to enjoy full opportunities to engage economically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close cooperation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five parties have to come up with a convincing substantive strategic message for North Korea.

Third, once negotiations resume, we have to avoid repeating familiar patterns. It is crucial that North Korea's seriousness for denuclearization is established at the early stages of the process. We must demand bold steps from North Korea. Patience wears thin because of the accumulated frustration. If negotiations yield no outcome, the momentum for talks will be lost fairly quickly.

Last, based on a strong sense of ownership, Korea must play a central role in the whole process.

Concluding Remarks


The strategic landscape in Northeast Asia is currently shifting in a significant way. In its midst,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has reached a serious stage and calls for collective efforts and wisdom if we are to find a solution.

20 years of experience where successes were few and far between, and failures abound naturally have made pessimists out of many of us. My presentation today may not help lift our spirits either.

One consolation is that North Korea's strategic position has not improved with its increasingly stronger nuclear weapons capability.

Nuclear weapons made North Korea pay a huge opportunity cost in economic development, posing a long-term threat to the regime survival. As it has become isolated, North Korea's dependence on China rose to a high level.

In conclusion, in spite of everything, Korea cannot afford to remain frustrated, sarcastic or just complaining. For Korea, it has no option to walk away. So, with my team, I will continue to spend hours trying to find a way to put more pressure and effect change on North Korea, identify openings and opportunities, and refine and sharpen our messages.

 * Excerpts from Ambassador Cho Taeyong's Keynote Speech delivered at the 8th JPI-FNF Joint Workshop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의 신흥력 시대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 아시아, 변방에서 중심으로

오늘날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는 끊임없이 성장하며, 세계의 중심으로 도약하고 있다. 세계 제2·제3의 경제대국을 포함한 동북아 지역은 세계경제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지역의 글로벌 영향력은 날로 증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인접한 아세안(ASEAN) 국가들도 번영하는 경제를 바탕으로 그 비중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동아시아 국가 간 이해와 협력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으며, 21세기 국제사회의 신질서 확립과정에도 동아시아국가들의 신장된 위치에 상응하는 기여가 필요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진정한 ‘아시아의 새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지역이 당면한 세 가지 안보상의 도전 과제를 극복해내야 한다. 먼저,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 문제이며 둘째, 역내 국가 간 역사인식의 차이와 일부 영토 문제로 인한 긴장 악화이고, 셋째, 미국이 추구하는 ‘아시아 재균형’ 정책과 중국의 ‘신형대국관계’의 조화이다. 이러한 안보적 과제를 잘 조율하고 서로의 힘을 모을 때, 아시아 국가들은 국제 정치·경제의 신질서 수립과정에서 새로운 물결을 가르며 성장해 갈 줄 믿는다.

■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현재 이 지역에서 북한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위협과 도발을 지속하고 있으며, 남북경제협력의 상징이었던 개성공단마저 중단시켰다. 우리 정부와 국민 모두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으나, 북한은 끝내 지난 10년간 쌓아온 협력관계를 무너뜨린 것이다. 또한, 북한은 ‘핵보유와 경제발전’의 동시 달성이란 실현 불가능한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국제사회의 그 어느 누구도 협력과 지원을 약속하는 일은 없을 것이며, 이는 스스로를 더욱 고립시킬 뿐 만 아니라,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카자흐스탄은 핵을 포기하는 대신, 대규모 경제지원과 안전보장을 약속 받았고, 이후 중앙아시아 제일의 경제성장을 이룩해 국제사회의 당당한 일원이 될 수 있었다. 우크라이나도 핵무기 포기로 경제보상을 받은 성공모델이며, 최근 체제변화와 개방을 선택한 미얀마

역시 북한이 주목해야할 사례이다. 앞서 제시한 국가들처럼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무익한 도발을 중단하며 변화의 길을 선택한다면, 한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한 경제적 협력과 지원을 다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남북관계 현안에 있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일관되게 가동하며, 의연하고 냉철하게 대응해 왔다. 또한, 지금의 위기를 남북관계의 끝이 아닌 시작으로,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는 기회로 삼기를 희망한다. 북한이 도발로 위기를 조성하면 일정기간 제재를 하다가 타협과 보상을 해주던 악순환의 고리를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신뢰와 원칙의 ‘새 틀’을 구축해 나갈 것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하게 대응하면서도, ‘대화의 창’은 열어놓을 것이다. 이와 함께, 작은 협력들을 꾸준히 증대시켜 더 큰 교류협력을 이끌어내고,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지속해 삶의 질을 높이는 일에 기여할 것이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말 그대로 과정(Process)을 의미하는 만큼, 남북한 간 일시적 상황전개에 흔들리지 않고 현 정부 5년 임기 내내 지속적으로 가동할 것이다. 이를 통해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핵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남과 북 모두가 잘 사는 행복한 통일, 국제사회가 지지하는 통일, 동북아의 안정과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통일시대를 열어갈 것이다.

■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통일은 동북아의 안정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역내 국가들의 긴밀한 협력과 공조가 뒷받침 될 때,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현재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적 역량과 상호의존성은 증대되고 있으나, 역사인식의 갈등을 포함한 정치·안보적 협력은 상대적으로 역행하는 이른바, ‘아시아 패러독스(Asia Paradox)’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아시아 국가들의 상생과 발전을 저해하는 양면성을 극복하고, ‘새로운 협력의 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역내 국가들이 올바른 역사인식과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한 대화와 협력을 시작해야 한다.

이를 위해 박근혜 정부는 역내 국가들 간의 연성 이슈, 예를 들어 핵안전이나 기후변화, 사이버테러, 질병 대응 등과 같은 문제부터 우선적으로 대화를 촉진하고자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안보협력까지 점차 확대하는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을 국제사회에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동북아에서 발생하는 지진, 쓰나미와 같은 자연재해 문제는 역내 국가들이 공동으로 대처해야 할 사안이다. 특히, 핵안전과 관련하여 현재 한국에만 23개의 원전이 있으며, 일본에는 50여개 중국에는 앞으로 60여개의 원전이 건설될 예정이다. 이러한 여건에서 후쿠시마 사태와 같은 일이 반복될 경우 역내 피해는 상상하기조차 힘들 것이다. 그 만큼 핵사고의 위험에 대해 역내 대응 체제를 만드는 일은 우리 모두의 시급한 문제이다.

동북아 국가들이 공동의 과제에 대응하며 문제를 해결해나가다 보

면, 평화 달성과 공동체 구성이라는 목표를 성취하게 될 것이다. 이는 유엔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의 추진, 녹색성장, 녹색개발, 후진지역의 개발 지원을 위한 기폭제가 될 것이다. 현재는 연성 및 경성안보 현안들에 대한 공동대응의 메커니즘이 없지만, 우리는 이것이 앞으로 꼭 필요하고, 또 이뤄질 수 있다고 믿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를 ‘서울프로세스’라고 이름 짓고, 추진 중이다.

‘서울 프로세스’는 우선적으로 동북아 국가들, 즉 미국·중국·일본·러시아와 남·북한을 중심으로 시작될 것이다. 이는 기존에 발전되고 있는 한·중·일 정상차원의 삼각협력 체제와도 병행 추진될 것이다. 장기적으로 동북아 협력체제는 기존 아세안(ASEAN) 국가들과 연계되어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의 실현과 아시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의 조화로운 균형이 절실하다. 미·중의 대외정책(아시아 재균형과 신형대국관계)은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건설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이 크다고 생각한다. 21세기 국제질서 유지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미국과 중국, 그리고 동아시아 국가들이 신뢰를 기초로 협력해 나갈 때, ‘아시아의 새 시대’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국민중심의 국정운영 철학에 따라 사회 대통합을 먼저 이루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과 국제사회와의 신뢰외교를 추진해, 동

북아와 세계의 건강한 평화와 행복한 지구촌 건설을 위해 기여할 것이다.

* 이 글은 제8회 제주포럼 만찬 기초연설 발췌문이며, 이 글에 포함된 의견은 저자 개인의 의견으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하다.



동아시아 세력전환과 한국외교



신각수

前 주일대사

중국의 대두와 일본의 침체가 교차하고, 미국과 중국의 격차가 축소되면서, 동아시아에는 세력전환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200년간의 세계사를 보면 특정 국가가 부상하면서 기존 질서에 대한 변화를 추구할 경우 국제질서에 불안정이 야기되어 왔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독일의 부상이다. 19세기 후반 신흥 산업국 독일이 1815년 비엔나 회의에 의해 구축된 유럽의 세력균형질서에 도전한 결과 1차 세계대전이 촉발되었다. 다시 전후 베르사이유 체제에 대한 재도전은 2차 세계대전으로까지 이어졌다. 따라서 부상하는 중국이 평화와 대립 가운데 어느 길로 갈지, 미국과 주변국들의 대응이 어떻게 될지가 향후 동아시아질서의 향방에 매우 중요한 결정적 변수다.

동아시아 지역은 안보 면에서의 불안정성과 달리, 경제는 어느 때보다도 상호의존도가 높아졌다. 세계의 제조업기지로써 복잡한 공급체인이 이 지역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국가의 경제문제는 쉽게 지역 전체의 문제로 연결된다. 이는 3.11 동일본대지진, 태국 홍수 등에서 여실히 증명되었다. 또한 중국경제에의 높은 의존도로 인하여 중국경제의 침체우려가 현실화될 경우 동아시아 전체가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렇듯이 경제적으로는 상호의존도 증가에 따라 협력 요소가 증가하는데 반하여, 안보적으로는 대립과 갈등 요소가 지배하고 있다는 점이 바로 우리가 당면한 ‘아시아 모순(Asia Paradox)’이다. 안보와 경제가 상반된 2중구조의 동아시아 질서를 어떻게 안정시킬 것인가가 주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한국에 있어서 동북아의 세력전환의 의미는 이중적이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우리에게서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다. 그러나 역으로 우리의 역할 여하에 따라서 미중 양국이 우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는 상황을 만들 수도 있다고 본다. 또한 한국이 중국에 경사되는 입장을 취하게 될 경우 이는 일본의 우경화 동인이 된다는 점에서 한일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일중관계가 당분간 경색국면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동북아 지역협력에도 좋지 않은 영향이 예상된다.

한반도와 동아시아에 복잡한 전략 환경을 만들어내고 있는 세력전환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첫째, 세력전환이 일어나는 가운데 항상 균형감을 가지고 변화하는 상황에 대응하는 것이 중

요하다. 우리로서는 전환의 과정에서 우리의 운용공간을 확보해야 하므로 가급적 어느 한 쪽에 완전히 경사되는 상황을 피해야 한다. 동아시아 질서가 일극 중심체제로 변모되는 것을 경계해야 하며, 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한다.

둘째, 동북아 세력전환은 행위자의 수나 고려요소의 다양성 면에서 사안 자체가 매우 복잡하다. 복잡한 사안은 겹눈의 시각으로 상관관계를 주도면밀하게 보고, 전체적 맥락에서 상응하는 대응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단순한 해결책이나 대응책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한데 이로 인한 오류를 피해야 한다. 더군다나 한국은 주변국들에 비해 상황지배력 면에서 뒤떨어지는 현실을 감안할 때 복합적인 사고와 신중한 행동이 필요하다.

셋째, 동북아의 세력전환에 대처함에 있어서는 동북아에 함몰되지 말고 시야를 넓혀 이를 넘어서는 능동적 자세가 필요하다. 21세기는 네트워크 시대라는 점에서 세계를 대상으로 한 복합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동북아에서의 제약을 뛰어넘는데 활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힘이 우월한 상대와의 양국관계에서 오는 불리함을 넘어서기 위해 동북아 또는 동아시아에서 다자주의를 통한 협력의 틀을 만드는 데 적극적이어야 한다. 다자적 협력주의는 세력전환을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데 유용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넷째, 동북아 세력전환에 있어서 강대국 사이의 담합(collusion)의

위험을 언제나 경계해야 한다. 우리는 20세기 초 일본과 영국, 미국 사이의 담합이었던 영일동맹과 태프트-카쓰라 밀약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제국에 얼마나 큰 희생을 강요하였는지 잘 안다. 역사는 강대국들이 세력전환의 안정화를 위해 큰 틀에서의 합의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역내 중소국가들의 이익이 사상(捨象)되는 사례를 증언하고 있으며 21세기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세력전환 과정에서 우리 국익이 반영되지 않는 타협이 성립될 가능성을 늘 경계하면서 대처해야 한다.

다섯째,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변화하는 상황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 전략적 일관성과 전술적 유연성을 적절히 배합한 스마트 외교를 구사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안의 본질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이에 대처하는 실용적 자세가 요구된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 시야를 가지고 국익을 재단해야 한다. 외교란 기본적으로 상대가 있고 상대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레버리지를 축적하여, 외교적 목표달성에 필요할 때 써야 한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장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함으로써 외교자산을 축적하는 인내와 지혜도 필요하다.

여섯째, 우리가 중견국가라는 점을 전제로 우리 특색과 강점을 살리는 외교를 해야 한다. 중견국가의 이점은 강대국에 비해 기민한 행동이 가능하고 하드 파워 면에서의 부족한 점을 소프트 파워로 메울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강대국 간의 가교 역할을 통해 외교력을 키울 수도 있다. 물론 이러한 장점을 살리기 위해

서는 앞서가는 정보력과 날카로운 분석력을 길러야 한다. 우리 힘이 상대적으로 약한 만큼 ‘머리로 하는 외교’에 힘써야 한다. 중동의 이스라엘, 동남아의 싱가포르와 같이 역내 동향에 관한 정보 집산지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역내에서 우리의 가치를 높이고 국익을 확보해야 한다.

* 이 글은 2013년 10월 4일 JPI-제주대 평화연구소 공동학술회의 기조강연 발췌문이며, 이 글에 포함된 의견은 저자 개인의 의견으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하다.



동아시아 강대국 정치와 한국의 좌표



김성한

고려대학교
前 외교통상부 차관

1. 중국의 부상 지속

중국의 부상은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군사적 측면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중국의 대외전략은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에 도전하는 모습을 가급적 삼가면서 경제발전을 통해 축적한 힘을 중장기적 차원에서 정치 및 군사적 영향력 확대로 연결시키는 것이다. 경제적 측면에 비해 정치적 측면에서 중국의 부상은 다소 뒤지는 양상이 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국제적 인정을 받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중국은 ‘책임감 있는 대국외교’, ‘평화굴기’, ‘평화발전’, ‘조화세계’ 등 자신의 외교정책 기조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2008~2010년 미국

발 금융위기 직후 공세적 외교행태로 인한 국제사회와 주변국의 대중국 견제가 강화되었다. 이에 대한 자성으로 2011년엔 중국이 비교적 신중한 대외정책 기조로 전환하였다.

이는 금융위기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 미국이 중동에서 아시아로 전략의 중심축을 옮기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아시아 재균형(Rebalancing toward Asia)’ 전략이란 기치 아래 동맹을 강화하고, 동남아에 대한 구애(求愛)작전에 돌입했으며, 서태평양 지역의 제해권(制海權) 수호를 위해 해·공군 전력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때 2013년 6월 7~8일 미중정상회담을 통해 나타난 중국의 ‘신형대국관계론’은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에 대한 고차원적 대응이다. 각자의 핵심이익을 건드리지 않는 가운데 건설적 경쟁을 하고 지역 및 범세계적 이슈에 관해 협력을 해나가자는 것이다.

2. 강대국정치의 등장

그러나 바다에 대한 통제력, 즉 제해권(制海權) 문제는 서태평양 바다를 ‘지배’하고 있는 미국과 이에 대한 ‘도전’을 모색하고 있는 중국 간에 치열한 각축전을 예고하고 있다. 미국으로서는 영토분쟁의 대상이 되어 있는 남중국해의 섬들에 대한 국제법적 지위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분쟁 당사자들 간의 중장기적 해법을 모색해야 할 상황이다. 하지만 미국이 반세기 이상 누려온 서태평양 바다에 대한 절대적 힘의 우위에 중국이 도전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이상 ‘차분한’ 접근이 힘들 수 있다.

일본에게 있어서 중국의 부상은 아시아 지역의 리더십 향배와 관련이 있다. 과거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기치 아래 제국주의적 야욕을 드러낸 일본은 오랫동안 역내 국가들에게 경계의 대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경제력을 앞세워 동아시아에서 나름대로 리더십 확립에 성공하였으나,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 시 수동적인 모습이 중국의 적극적 행보와 대비되면서 서서히 영향력을 잃어갔다. 국내정치의 유동성 증가 속에 역내 외교력 발휘가 꿈만 같은 일본으로서는 미국과 함께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차단해야 할 처지다.

중국의 부상을 바라보는 러시아의 계산은 복잡하다. 유라시아 국가로서 유럽과 중앙아시아 문제에 집중해 왔던 러시아는 ‘아시아의 시대’를 맞아 아시아 외교 구상에 몰두하고 있다. 미국의 기득권적 질서에 편승하거나 저항하기 보다는 수정주의적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은 중국을 활용하고 싶어 한다. 중국이 아시아에 대한 영향력을 러시아와 공유하려 할지는 미지수이나, 러시아로서는 중국과 힘을 합쳐 미국의 기득권적 질서를 흔드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이는 양자외교 차원보다는 동아시아정상회의(EAS)나 아태경제협력체(APEC)와 같은 다자외교 틀 속에서 생각할 수 있는 시나리오다.

아무튼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중국·러시아·일본 등 주요 강대국들의 관계는 ‘강대국 정치(great power politics)’를 연상시킨다. 현재의 국제질서가 그나마 안정적일 수 있는 것은 불안정한 다극체제의 성격을 지닌 유럽과 동아시아에서 미국이 군사적으로 주둔하며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 지역에서

미군이 철수하게 된다면 불안정한 다극체제로 변모할 것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강대국들은 경쟁 국가들을 제치고 힘의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끝없이 경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국제 무질서를 초래할 것이다.

3. 한국의 좌표

과연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강대국들 간의 역학관계가 중장기적으로 동아시아 강대국 협조체제로 갈 지 불안정한 다극체제로 갈 지는 알 수 없으나, 우리가 해답에 접근하기 위해선 동아시아 강대국 역학구도의 최대 변수로 떠오른 중국에 대한 여타 강대국의 인식과 전략을 잘 파악할 필요가 있다. 중국에 대한 여타 강대국들의 인식이 불신과 우려에 기초하고 있다면 강대국 협조체제의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미국의 역할이 중요한 바, 미국이 지속적으로 강대국들 간의 역학관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한미동맹을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 지역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중 국력격차가 상당히 좁혀져 10년 정도 후엔 미중관계가 상당히 불안해 질 수 있다는 전제 하에 국가 전략을 짜야 한다. 미중이 경쟁 속에서도 협력의 틀을 유지하는 향후 10년간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정착에 결정적 진전을 이뤄내야 한다. 미국과의 동맹을 견고히 유지하면서 한반도 통일에 기여할 수 있게 운용해 나가야 한다. 한·중 경제협력과 정치군사협력 간에 균형을 도모하고, 통일한국이 중국에게 득이 된다는 점을 지

속적으로 설득해 가야 한다. 결국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한미관계와 한중관계를 조화 발전시켜 나가는데 한국외교의 좌표를 설정해야 할 것이다.

* 이 글은 2013년 9월 2일, 평화아카데미 강연 발췌문이며, 이 글에 포함된 의견은 저자 개인의 의견으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하다.



评朴槿惠總統访华



金中燮

济州大学校

韩国總統朴槿惠于6月27日至6月30日进行了為期4天的對中國國事访问。

朴總統这次访问中國的主要任务可以整理為兩大項：第一是在區域安全方面，特別是北韩核武问题上爭取中國的支持；第二是經濟合作方面，特別是繼續推动韩中自由贸易协定。這兩項议题是維持區域穩定和韩国經濟成長的關鍵，同時也是韩中關係的主要核心。

從結果來看，首先在北韩核武问题方面，朴總統得到中國方面對

“韩半岛信任进程”的支持，同時也在兩國《聯合聲明》中明文宣示“韩半岛无核化”。“韩半岛信任进程”是朴總統對北韩政策的基調，在5月访问美國時已獲得美國方面的支持，透過这次韩中首腦會談，又再次獲得中國方面的肯定，使得朴總統在未來推動對北韩政策時，有了更大的施展空間。

但從这次峰會同時也能看出兩國在北韩問題上仍存在着許多立場差異。韓國所希望的“北韩放棄核武”字句並沒有出現在《聯合聲明》之中，取而代之的是中國所主張的“韩半岛无核化”。《聯合聲明》僅表明：韩方明確表示在任何情況下都不承認北韩拥核；雙方確認實現韩半岛无核化、保持半岛和平與穩定符合各方共同利益。由字里行間，可以看出中方不願直接刺激北韩的用心。對於威脅韩半岛和平穩定的因素，韓國所希望的“北韩核武器”也沒有出現，取而代之的是中方所主張的“有關核開發”。

在《聯合聲明》中，雙方一致認為“包括安理會有關決議和9.19共同聲明在內的國際義務和承諾應予切實履行”。所謂“9.19共同聲明”是指2005年六方會談時簽署的聲明，內容為北韩放棄核武，其餘國家給予北韩能源及安全保障。但熟悉六方會談歷史的人都知道，類似協議一直都是卡在先棄核還是先保障安全等問題上，而延宕至今。

因此，可以說，雖然兩國對於“韩半岛（當然包括北韩）”的无核化達成了共識，但對於无核化的方法、順序等問題，仍然存在着

爭議。如何克服這種差異，與中國協調合作以促使北韓發生變化，將是韓國政府所必須面對的課題。

在經貿方面，兩國在貿易與投資等領域簽署了多項的協議，並延長了貨幣互換協議，同時還表示將以2015年貿易額達到3000億美元為目標共同努力。因此一名韓國政府官員表示，這次訪中的經濟成果要大於5月的訪美。

另外，廣受關注的是，兩國在《共同聲明》中表示將以“包含實質性自由化、廣泛領域的高水平、全面的自由貿易協定”為目標，重新啟動自由貿易談判進程。韓國在過去幾年已經先後與美國、歐盟簽署自由貿易協定，原本計劃推動韓中日三國間的自由貿易協定，但由於日本與韓、中兩國之間出現的歷史領土等問題而中斷，因而暫時擱置日本，積極推動韓中兩國的自由貿易協定。

這次的訪華是朴槿惠總統就任以來首次訪問中國，並且打破韓國新任總統慣例，繼美國之後不是先訪問日本，而是出訪中國，這本身就十分具有象徵意義。這一方面顯示由於日本政府的諸多行為導致韓日關係後退，同時也顯示朴槿惠總統對於韓中關係的重視。這也使得日本方面開始擔心是否會形成韓中兩國聯合起來排擠日本的格局。雖然韓中兩國在《聯合聲明》中多次強調要促進韓中日三國的合作，給日本留下改善關係的空間，但如果韓中兩國在自由貿易協定談判上也進展迅速，勢必會對日本帶來不小的

震撼。

在这次朴總統的出訪中，在政治經濟議題之外，最為媒體津津樂道的應該是朴總統與中國文化的淵源。在出訪之前，媒體就以“是否全程用中文演說”等話題強化總統的“中國通”形象，在訪中期間，朴總統透過在清華大學的演講以及許多其他的場合，引經據典，展現出她對於中國文化的素養，而中國方面也給予朴總統高度的禮遇，媒體也做了大幅的報導，可以說成功地營造了文化外交的氛圍。

這次朴總統訪中的成果，其實見仁見智。例如北韓核武問題，批評者會認為雙方只是重申既有的立場，了無新意；更何況，韓半島無核化的關鍵在於難以預測的北韓的態度，如果無法得到北韓的配合，韓半島無核化也將會流為空談。至於自由貿易協定的問題，韓國國內仍然存在許多反對的聲音，往後隨著談判的進展，勢必面臨許多陣痛，這些恐怕都是在評價訪問成果時，必須思考的問題。

韓半島的周邊局勢仍然變幻莫測，世界經濟也仍然存在不穩定因素，許多難以預測的變化都可能讓外交成果大打折扣。不過，即使如此，朴槿惠總統透過這次訪問所展現的文化形象，讓中國人民所感受到的親切感，應該不會受到影響。連韓國在野黨也承認，朴總統的訪問，大大拉近了兩國的關係，這也許就是朴總統此次訪問的最大成果了。

박근혜 대통령 중국방문의 평가

박대통령의 이번 중국 방문의 주요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지역안보인데, 특히 북핵문제에서 중국의 지지를 구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경제협력인데, 특히 한중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재가동 하는 것이다. 이 두 사항은 지역안정 유지와 한국 경제성장의 관건이고, 동시에 한중관계의 주요 핵심이다.

결과로 본다면, 우선 북핵문제에 있어서, 박대통령은 중국 측으로부터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얻었고, 또 <공동성명>에 “한반도비핵화”를 명문화하였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박대통령의 대 북한정책의 기초로서 5월 미국 방문 시 이미 미국 측의 지지를 얻었고, 이번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의 지지를 얻게 되어 향후 대 북한 정책을 펼칠 때 운신 폭이 훨씬 넓어졌다.

하지만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이 북핵문제에 대해 아직 많은 입장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한국 측이 희망하는 “북한 핵포기” 문구는 <공동성명>에 나오지 않았고, 대신 중국이 주장하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었다. <공동성명>의 “한국 측은 어떤 상황에서도 북한의 핵보유를 용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양측은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공동이익에 부합함을 확인하였다”는 등 문구를 보면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중국 측의 고심을 볼 수 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요소도 한국 측이 희망하는 “북한 핵무기”라는 문구

대신 “유관 핵개발”이라는 문구를 채택하였다.

<공동성명>에서 양측은 “안보리의 결의와 9.19 공동성명을 포함한 국제 의무와 약속은 성실히 지켜져야 한다”고 합의하였다. “9.19 공동성명”은 2005년 6자회담 때 채택된 문건인데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나머지 국가가 에너지 및 안전을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6자회담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은 알겠지만, 이러한 합의는 “핵포기가 먼저냐, 안전보장이 먼저냐” 등 논쟁 때문에 지금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비록 양국은 “한반도(물론 북한도 포함) 비핵화”에 대해서 합의를 이루었지만, 비핵화의 방법이나 절차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이 있다. 어떻게 이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중국과 협력하여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지가 한국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다.

경제 무역 분야를 보면 양국은 무역 및 투자 영역에서 다수의 협약을 체결하였고, 또 통화스와프 협정을 연장하였으며, 2015년 무역액 3천억 달러를 목표로 공동 노력하기로 하였다. 한 한국정부 인사는 이번 중국 방문의 경제성과는 5월 달의 미국 방문보다 더 크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또한, 주목할 만한 것은 양국은 공동성명에서 “실질적인 자유화와 폭넓은 범위를 포괄하는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한중 FTA 체결을 목표로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재개하기로

하였다는 것이다. 한국은 지난 몇 년 동안 미국, 유럽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고, 원래 계획은 한중일 3국의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는 것이었으나, 일본과 한중 사이에 발생한 분쟁으로 인해 중단되었다. 따라서 일본에 앞서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번 중국 방문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한 것이고, 또 신임 대통령이 미국 다음으로 일본을 먼저 방문하는 관례를 깨고, 중국을 먼저 방문한 것으로 그 자체로서 상징적 의미가 매우 크다. 이것은 한 편으로는 일본 정부의 여러 행동으로 인해 한일 관계가 후퇴하였기 때문이고, 동시에 박대통령이 한중 관계를 중시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일본에서는 한중 양국이 연합하여 일본을 배척하는 구도를 형성하지 않을까 우려해야 할 상황이 되었다. 비록 한중 양국은 <공동성명>에서 누차 한중일 3국의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혀 일본과의 관계 개선의 여지를 남겨두었지만, 만약 한중 양국이 자유무역협정 협상에서 빠른 진전을 보인다면, 일본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줄 것이다.

이번 박대통령의 중국 방문에서 정치, 경제 의제 외에 언론에 가장 많이 보도된 것은 박대통령의 중국문화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다. 출국 이전에 언론은 이미 “중국어로 연설할 것인가” 등을 화제로 박대통령의 중국통 이미지를 부각시켰고, 중국 방문 기간 동안 박대통령은 청화대 연설을 비롯한 많은 장소에서 중국 고전을 인용하여 자신의 중국문화에 대한 소양을 과시했다. 중국 측도 그에 대해 높은 예

우를 했고 중국 언론도 대대적으로 그 행보를 보도하여 문화외교의 분위기를 성공적으로 조성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박대통령의 중국 방문의 성과에 대해서 견해가 다양하다. 예를 들면 북핵 문제에 대해서 혹자는 양측이 기존의 입장만 되풀이한 것 뿐이지 새로운 진전이 없었다고 비판한다. 또 한반도 비핵화의 관건은 예측하기 어려운 북한의 태도인데, 만약 북한의 협조를 얻을 수 없다면 비핵화도 공염불에 불과하게 된다. 자유무역협정에 대해서도 한국 국내에 아직도 반대의 목소리가 많아 협상 진전에 따라 많은 진통이 예상된다. 이러한 문제들은 모두 방중 성과를 평가할 때 고려해야 할 점들이다.

한반도 주변 정세는 여전히 예측하기 어렵고, 세계 경제에도 여전히 불안정 요소가 남아있다. 이러한 예기치 못한 변화들이 외교적 성과를 무색하게 할 수 있다. 하지만 비록 상황이 변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방문을 통해서 보여준 문화적 이미지와 중국인들이 박대통령에 대해 느낀 친근감은 남아있을 것이다. 이것이 이번 방문의 가장 큰 성과가 아닌가 생각한다.



South Korea–European Union Security Cooperation: A South Korean Perspective



HAN Intaek

Jeju Peace Institute

This year marks the 50th anniversary of Korea-EU diplomatic relations. With the decline of South Korea's traditional security partner, the United States, in the middle of increasing tensions in the Korean peninsula, the time has finally come for South Korea to re-orient its relations with the EU with a view to increase cooperation with the EU not only for her own security but also for peace and stability worldwide. 'Forward Together,' a slogan chosen to celebrate the 50th anniversary, is more apt and relevant than ever.

The truth is, however, that relations between South Korea and the European Union have been predominantly economic and cultural. The

EU has rarely been perceived as partner in security cooperation by South Korea, and recent EU-South Korea FTA has only reinforced the already strong image of the EU as economic partner.

Korea-EU security partnership, if strengthened, will not only contribute to the peace and stability in the Korean peninsula but also help South Korea to achieve its ambition as a global middle power. This is, of course, not to suggest that Korea-EU security partnership is an unexpected panacea. There are limits to strategic cooperation as much as there is high potential for security partnership, as discussed below.

Nuclear Deterrence

At this moment, the single most important motivation for South Korea's security cooperation is nuclear deterrence against North Korea. Since only the United States can offer nuclear umbrella for South Korea, the latter's efforts to strengthen nuclear deterrence has been largely focused on maintaining and strengthening Korea-US security cooperation in the form of bilateral military alliance. The European Union, while potentially an important security partner for South Korea, has very little to offer in terms of extended nuclear deterrence.

Because of the development and testing of long-range missiles and nuclear weapons by North Korea in recent years, there is now a growing awareness that US extended deterrence may become less credible if it is not already. If nuclear-tipped North Korean missiles can reach US territory one day, North Korea may threaten to attack the United States

if the US intervenes in the Korean peninsula for South Korea. In fact, North Korea has hinted such possibility in one of its Youtube videos, where North Korea missiles destroy New York. Maintaining the credibility of U.S. extended deterrence in the face of North Korea's growing nuclear and missile capability is likely to be the most important challenge that Korea-US alliance will face in the future.

While the European Union itself has little to offer to help maintain or enhance the credibility of US nuclear umbrella for South Korea in time of weakening credibility, its past experience in dealing with a similar credibility crisis during the Cold War can offer useful guidance for the future of Korea-US alliance, and it is through the sharing of knowledge and experience in the area of nuclear policy coordination between allies that fruitful security cooperation between the EU and South Korea can take place in the future.

Recent calls for the redeployment of U.S. tactical nuclear weapons in South Korea, made both in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are responses to declining credibility of US nuclear umbrella for South Korea. There are also voices in South Korea calling for independent nuclear force, especially after North Korea's nuclear tests. The history of strong anti-nuclear movements in Europe can be a useful reference point for South Korea as she tries to resist the pressure, domestic or otherwise, to go nuclear.

Nuclear Non-Proliferation, Counter-Proliferation, and Disarmament

Compared with nuclear deterrence against and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nuclear non-proliferation and counter-proliferation are presently goals of lesser importance for South Korea. Needless to say, nuclear non-proliferation and counter-proliferation are important regionally and globally but with the North already being nuclear, they cannot receive as much attention from South Korea as nuclear deterrence and denuclearization.

South Korea's stance towards nuclear disarmament is rather complex or ambivalent. While she supports nuclear disarmament in general, she is also apprehensive of the United States' plans to reduce its nuclear arsenal. The reason is simple: South Korea believes that the United States needs to maintain strong nuclear capability to be able to deter North Korea credibly. Reducing US nuclear weapons, especially those needed for extended deterrence such as Tomahawk missiles, is worrisome to South Korea, as it further weakens the credibility of US nuclear umbrella.

While South Korea, independently, may not have a strong reason to support nuclear non-proliferation, counter-proliferation, and disarmament at the regional and global level, it can certainly participate in and contribute to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nuclear non-proliferation, counter-proliferation, and even disarmament. The EU has a long history of promoting nuclear non-proliferation, counter-proliferation, and disarmament; it is in a uniquely good position to persuade South Korea


to be more actively involved in the global efforts against nuclear weapons.

Nuclear Security

South Korea was the host of the 2nd Global Nuclear Security Summit, recently held in Seoul. Consistent with her role as the host of the global summit, South Korea has been a vocal advocate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nuclear security. What drives her activism for nuclear security cooperation is less security concern but more diplomatic ambition. If nuclear security cooperation is about dealing with nuclear attacks by terrorists through international cooperation, it cannot be South Korea's priority for the simple reasons that South Korea is an unlikely target of nuclear terrorism and that a nuclear attack by the North is a bigger and far more realistic threat to her. Compared with more impending goals of nuclear deterrence and denuclearization, nuclear security is a lesser priority.

This does not mean, however, that South Korea is not interested in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nuclear security, especially with the EU. While nuclear security may be a lesser priority for South Korea from a security perspective,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nuclear security is an important priority from a diplomatic perspective. South Korea conceives itself as a middle power, and she considers contributing to the international society as one of her important responsibilities. South Korea and the EU can find areas in nuclear security where they can work together.

To conclude, South Korea's stance towards security cooperation is fundamentally shaped by the fact that its Northern neighbor poses an increasing nuclear threat. Her role as the host of the 2nd Global Nuclear Summit and more generally, her status as a middle power also influence her stance towards international security cooperation. While the EU cannot do much in terms of nuclear deterrence, which South Korea critically needs, the EU can help South Korea as the latter seeks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by participating in the form of "Six-plus-EU" talks. With the encouragement of the EU, South Korea can be also more actively involved in the global efforts against nuclear weapons. Nuclear security is also a promising area for the EU-South Korea cooperation, and deserves attention from both sides.



* An earlier version of this essay was presented at the EU-Korea Public Diplomacy Conference held in Brussels, Belgium, on Thursday, 21 February 2013.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총서 28

2013 동아시아
평화와 협력을 위한 대화

PeaceNet
Series



제2부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 II

- The European Union and a Nuclear-free Korean Peninsula:
An European Perspective
 - 중국의 시진핑 시대 개막과 한중관계 전망
 - 중국의 대북 전략논쟁과 한국 주도외교의 방향
 - 북한의 핵실험과 한중 양국의 공조방안
 - Japan's North Korea Adventure
- Currency Swaps Move South Korea Closer to China, away from Japan
 - 일본의 군사적 보통국가화와 동북아 안보환경
- 2013년 동아시아 지역 정상회의 결산: 한-아세안 안보 대화와 미-중 경쟁
 - 몽골과 일본의 북한정책





The European Union and a nuclear-free Korean Peninsula: An European Perspective



Ian ANTHONY

SIPRI

Whe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or North Korea) announced that it had conducted a third test of a nuclear explosive device in February 2013, it was only the latest development in more than two decades of long effort to ensure the implementation of the 1991 Joint Declaration on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fact, the issue of nuclear weapons and the Korean peninsula has deeper roots, because throughout the Cold War the United States stationed nuclear weapons in the Republic of Korea (ROK or South Korea) in the context of the bipolar confrontation with state socialist

countries that was the main feature of the international system prior to 1991.

The European Union (EU) was created at almost exactly the same time as the crisis erupted over the serious concerns about the orientation of the North Korean nuclear programme. Developing an international system based on respect for multilateral rules that states have voluntarily agreed to apply is the cornerstone of the EU approach to foreign and security policy. When North Korea refused to permit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 to carry out the inspections needed to explain discrepancies in the information reported to the Agency by the DPRK it was a challenge to the preferred EU approach. When the DPRK then announced its intention to withdraw from the NPT rather than meet its obligations under the treaty it was an issue in which the EU decided to become engaged via participation in the Korean Peninsula Energy Development Organisation (KEDO).

A great deal has changed since the crisis of the early 1990s, but the fundamental interest of the EU is still the same: to resolve nuclear issues on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peaceful means that assure full implementation of agreements leading to nuclear disarmament.

One of the most important changes that has occurred in two decades since the crisis of 1992 - 93 has been the development of EU - South Korea relations. The EU and South Korea have very compatible interests and approaches to financial and trade matters, but they also agree on the right way to develop a peaceful and stable international

system that can be the framework for positive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The similarities in view have led to the strengthening of the EU - South Korea relationship in the 2009 Free Trade Agreement and the 2010 Political Framework Agreement.

Since the EU and South Korea quite rightly see their partnership as a positive contribution to the successful development of global solutions to many problems, they should work closely together to develop common approaches that can be the basis for their collaboration in multilateral forums.

The unresolved issue of the nuclear weapon programme of the DPRK is an obstacle in that a local crisis is absorbing attention and resources that should be better used elsewhere.

How should the EU approach this?

First, the recent decision, after the February test, to reiterate unequivocally the EU requirement for nuclear disarmament on the Korean peninsula, was the right one. It was necessary for the EU to make it clear that there is no “middle ground” or “third solution” possible,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remains the objective.

Second, the EU should underline its support for South Korea in a deteriorating security environment. This does not mean that the DPRK is an adversary of the EU and, while removing any possible misunderstanding that it could be seen as an intermediary or “honest broker” – our support for South Korea is unequivocal – the EU could usefully

reiterate that the door is open for improved relations with North Korea once denuclearization is achieved.

Whether there is any European role in the direct process of denuclearization is perhaps more questionable. There are one or two things that could be considered. First, as noted above, historically there were US nuclear weapons based in South Korea. These were removed by the United States in the framework of the so-called Presidential Nuclear Initiative of George H. W. Bush in 1991. However, the removal was never verified—it was simply a unilateral statement from the US President.

Given the nature of the political relationship, it is perhaps reasonable for the North Korean leadership to have some doubts about the truthfulness of the US statement. Measures could be explored, would allow European countries that are friends of the United States, and therefore trusted in Washington, but not members of NATO (and therefore not in any way connected to extended nuclear deterrence) to provide some assurance that the removal of US weapons has taken place.

Building on that approach, European countries could begin thinking about a possible role in the verification of a nuclear weapon free Korean peninsula. A verification system would have to be applied equally on the territory of North and South Korea and would have to include participation by outside powers (certainly China and the United States) to be credible. However, the process should probably be monitored by

a third party with the technical and administrative capacity to make independent judgements on implementation as well as a distance to the immediate political environment. This might be a possible role for the European Union in the future.



중국의 시진핑 시대 개막과 한중관계 전망



방수옥

복단대학교

중국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리커창(李克強) 총리 체제를 공식 출범시키고 3월 17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폐막했다. 이번 전인대를 통해 중국은 국가주석과 총리 외에 부총리, 국무위원, 각 부 부장 및 국가위원회 주석, 인민은행장, 심계서장 등 국무원 조각을 완료했다. 전인대 상무위원장은 장더장(張德江)이 선임되는 등 입법부 구성도 마무리 됐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지난해 총서기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에 오른 데 이어 이번 전인대에서 국가주석과 국가중앙군사위원회 주석에 선출됨으로써 당·정부·군 등 3대 권력을 모두 장악하게 돼, 공식적

인 시진핑 통치 시대를 열게 된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체제 하에서의 중국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며, 한중관계가 어떻게 설정될 것인지도 세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 시진핑 시대 중국의 청사진

3월 17일 중국의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폐막식에서 시진핑 주석은 국가주석 취임 첫 연설에서 “본인을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으로 선출하고 각 대표와 각 민족이 신임을 보내준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 표시한다”며 “항상 조국과 인민에 충성하고 모든 열정과 시간을 쏟아 인민에 봉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연설에서 ‘중국의 꿈’, ‘중국의 길’을 특별히 강조했다. 약 25분간의 연설에서 중화민족은 9번, 중국의 꿈은 8번, 인민은 44번이나 되풀이 하면서 중국의 꿈을 강조하는데 상당부분을 할애했다. 시진핑 주석은 “개혁·개방 30년, 건국 60년, 반 만 년 역사를 통해 구축한 중국의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것이 중국의 꿈”이라며 “전면적인 소강사회 건설과 부강한 민주 문명을 갖춘 조화된 사회주의 현대화국가의 건설을 통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실현할 것이며, 중국인들의 역량을 집중적으로 모아 ‘중국의 꿈’을 이루어 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또 “앞으로 국민 개인이 국가와 함께 성장하고 진보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진핑 주석의 ‘중국의 꿈’ 언급은 18일 령춘잉(梁振英) 홍콩 행정장관과 추이스안(崔世安) 마카오 행정장관을 접견하는 자리에서도 이어졌다. 그는 “홍콩, 마카오와 본토의 운명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며 “장단점을 서로 보완하며 발전하고 위험이 닦졌을 때는 함께 중국의 꿈을 건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진핑 주석과 함께 향후 10년 중국을 이끌어 갈 리커창 총리도 17일 기자회견장에서 자신에 찬 목소리로 “개혁은 반드시 이뤄야 한다.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고 강조하면서 “향후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유지해 2020년까지 평균 7.5% 성장세를 이룰 것”이라고 말해 중국의 고성장은 지속될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이로써 중국의 새로운 주석과 총리가 향후 중국의 갈 길과 목표점을 제시한 것이다. 신화통신 등 중국 관방매체들은 중국의 부흥과 굴기가 바로 중국의 꿈이라면서 새 지도자들의 꿈에 해몽을 덧붙이기도 하였다. 중국의 새 지도부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중국의 꿈’을 실현해 갈 것인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 한반도는 중국의 국가 부흥과 안보에 중요한 지역

한반도는 그 지정학적 위치의 특수성으로 인해 중국에게 있어서 독특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 지역이다. 한반도와 중국은 순망치한의 관계로서 역사적으로 매우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역사적 요인과 지정학에 기초한 전략적 고려, 여기에 중국이 현실적으로 남북한 양측과 맺고 있는 특별한 이해관계 등이 결합되어 중국의 국가 부흥이나 안보에 있어 한반도는 매우 중요한 지역으로 평가된다.

중국의 시진핑 정부 출범과 함께 외친 ‘중국의 꿈’을 이루기 위해 평화롭고 안정적인 국제환경이 필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및 중국의 한반도에서의 영향력의 지속은 중국에게 있어서 더욱 중요하다. 중국이 만일 한반도에서의 영향력을 잃게 되고 한반도가 중국을 포위 봉쇄하는 전략적 전초기지가 된다면 중국의 안보에는 치명적인 위협이 될 것이다. 중국의 제일 중요한 중공업 기지인 동북 지방은 전략적 완충지대를 상실하게 되어 직접적으로 중국에 적대적인 세력에게 노출되게 될 것이다. 또한 중국의 심장인 베이징과 톈진 지역의 전력적 방어 공간도 대폭 감소될 것이고, 발해만과 황해를 연결하는 교통로도 직접적인 위협을 받게 된다. 또 한반도를 배후 기지로 하는 강력한 해군력은 유사시 중국의 동부 연해 지역 수출입 해상 교통로를 교란하거나 심지어 봉쇄할 수도 있고, 중국 북해 함대와 동해 함대의 유기적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등 화동 지역 안보에도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는 곧 중국에게는 매우 민감한 문제인 타이완 문제와도 직결될 수 있는 중대한 사항인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 정세는 중국의 국가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중국의 다변외교에도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시진핑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며 한반도에서의 영향력을 과시하고자 할 것이다.

■ 시진핑 시대의 동북아 정세와 한중관계

2013년은 동북아에 있어서 새로운 기회이기도 하다. 동북아 5개국의 지도자가 모두 바뀌었고, 미국도 오바마 집권 2기를 맞이하여 동북아 안보와 관련된 6개국 모두 새로운 국가전략과 국내정치를 준비하고 관련국의 신정부와 국제정치에 대한 새로운 관계설정을 모

색해야 하는 공통의 과제를 안고 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한반도는 지리적 위치의 중요성, 특수한 전략적 지위, 남북 간 대치가 지속되고 있는 현 상황 및 한반도에서의 주변 강대국의 전략적 이익 추구 등 복잡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동북아 국제정치와 안보 문제에 있어 전략적으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해 왔기에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볼 때, 늘 강대국들의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으며 주변 강대국들로 하여금 한반도에서의 세력을 확장하고자 하는 유혹을 느끼게 한다. 이런 점에서 한반도는 지역 질서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한국과 중국은 동북아의 중요한 두 국가로서 양국관계의 지속적인 진전은 한반도 및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동북아의 다자안보협력체제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한중 수교 이후 양국관계는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정치·군사·외교·경제·사회·문화 등 제반 분야에 걸쳐 급속한 진전을 가져왔다. 물론 양국관계에는 여러가지 문제에서 인식의 차이점을 보이기도 하였다. 특히 현실적으로 가장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북한 핵문제를 처리함에 있어 양국간에는 입장의 차이를 보이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지도자들은 한국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필요성 측면에서도 한국과 교류를 강화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특히 한중 FTA의 추진으로 제도적으로 양국관계가 더욱 긴밀해 질 것이며, 국익과 지역 이익 증진을 위해 북한 핵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공조체제를 마련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평화와 안정은 시대적 요구이다. 시진핑은 연설에서 “중국은 평화, 발전, 협력의 가치를 들고 변함없이 평화 발전의 길을 걸어갈 것”이라며 “국제적 책임과 의무도 이행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평화는 일국의 힘으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고 각국 지도자와 국민들의 지혜가 필요하며 또한 국제공조와 협력이 필요하다. 향후 한국과 중국 사이의 협력관계는 다차원에서 더 돈독해 질것으로 믿고 있다.



중국의 대북 전략논쟁과 한국 주도외교의 방향



황병무

국방대학교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제3차 핵실험으로 야기된 중국 인권 단체와 네티즌 중심의 반핵 규탄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영향력 있는 외교 전문가들 사이에는 중국정부의 대북 전략을 둘러싸고 논쟁이 일고 있다. 관련 전문가들은 중앙당교 교수, 당교 기관지 편집인, 국무원 연구원, 대학 교수들이다. 당국이 민감한 북한의 핵과 체제문제를 해외 주요 일간지나 당 기관지 인민일보 국제시사 자매지인 환추(環球)시보에 게재를 허용하는 등 공개논쟁을 묵인한 것도 대북전략의 변화를 찾고 있다는 조짐이다. 하루아침에 중국이 정책기조를 뒤집을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시진핑 체제가 외교 기조로

신형대국관계를 내걸고 책임 대국의 역할을 수행하려 한다는 점에서 우리 주도 외교에 시사점이 크다.

논쟁의 핵심은 이렇다.

첫째, 북한 핵개발은 中朝 조약 제1조와 제4조에서 규정한 ‘양국의 공동 이익과 관련한 일체의 중대한 국제문제에 대해 협상을 진행한다’는 조항을 위반했다. 북한이 협의는 커녕 마지못한 통보에 그쳤고 중국의 우려 표명 등 만류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강행했다.

둘째, 중국은 북한의 잦은 무력도발이나 정전협정의 일방적 폐기 선언 등으로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이 일어날 때 또는 미국이 북핵에 예방적 선제타격을 가할 때 자동개입 할 위험성이 크다. 따라서 中朝 조약을 폐기해야 한다.

셋째, 북한체제의 생존은 핵무기보다는 인민생활의 안정에 있다. 생산력 증대를 위해서는 개혁 개방이 필요하다. 하지만 김씨 가족 정권하에서는 개혁·개방이 영원히 불가능하다. 중국 원조만으로 북 정권의 장기적 생존을 보장할 수 없다.

넷째, 북한은 이념과 전략적 완충지대라는 면에서 지정학적 자산이 기보다는 부담이 되고 있다. 북핵은 언젠가는 중국을 위협할 수 있다. 북의 핵 포기는 한반도 평화체제 필수 조건이다. 중국은 북핵 포기를 위해 적극 개입해야 한다. 중국은 북한을 포기하고 한반도 통

일을 유도해야 한다. 미군의 한반도 철수가 보장된 한반도 통일은 미·일·한의 전략적 유대를 약화시키는 데 도움이 돼 중국의 국가전략에도 이롭다. 통일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경우 차선책으로 북한에 親中 정권을 세우는 게 북한의 안전보장과 핵 무기 포기, 정상적 국가로의 발전에 유리하다. 중국의 대북 원조 방법을 바꿔야 한다.

이러한 주장에 대한 경계론이 만만치 않다.

‘북한 포기 주장은 미국을 도와주는 것이다.’ 북핵 문제로 북을 압박하여 중북 관계를 해쳐서는 안 된다.’ ‘북한이 미국에 대한 비난과 위협공세를 일삼지만 북미관계 개선을 희망한다.’ ‘북핵은 미국에 대해 안전한 자주와 평화를 만드는 수단이다.’ 2009년 북한의 제2차 핵실험 후 강도는 낮았지만 이와 유사한 내부논쟁이 있었다. 하지만 중국의 대북 정책기조에는 변함이 없었다.

중국은 안보리 결의(2087,2094호)의 준수를 공언 했다. 하지만 중 외교부장은 러시아 외교부장과 회담 후 안보리의 제재가 한반도에 대한 군사개입 명분으로 쓰이면 안 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중국은 북한이 제3차 핵실험 이후 연이은 추가도발 위협을 강행하는 엄중한 상황 속에 일단 한미 훈련에 이례적으로 침묵을 지키면서 남북 대사를 불러 한반도에서 긴장고조에 대한 우려를 전하고 긴장완화를 촉구했다. 중국은 당장 북한에 특사파견을 고려하고 있지 않으나 대북제재의 수위를 조정하고 있다. 북한에 대한 제한된 금융제재와 통관업무 강화, 북한 노동자 비자 신청을 거부하면서도 북한과

진행하고 있는 경제협력 사업은 지속하고 있다. 북·중 접경지대를 있는 철도, 도로, 항로 노선을 늘리고 있음이 그 예이다. 중국 지도 부에는 內憂가 外患을 불러온다는 전통적 안보관이 자리 잡고 있다. 향후 중국은 정책의 우선순위를 북한체제의 생존에 두면서 북핵 문제를 북미, 북일 관계 정상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연계해 추진 할 것이다. 미국은 북핵 문제 해결의 피로감에도 불구하고 비핵화와 미북 관계 정상화를 연계하리라 본다.

대중 한국 주도외교의 방향은 북핵 문제 해결을 포함해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신뢰구축에 모아져야 한다.

첫째, 우리는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태롭게 하는 북한의 군사도발과 전쟁협박을 자제토록 중국에 대북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요청할 필요가 있다. 우리도 북한 도발에 대한 과잉 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다. 이 문제는 양국의 공동 안보이익에 해당된다.

둘째, 북한 유사시 대응에 대한 양국간 신뢰구축이다. 한국은 북한 스스로의 안정화 노력을 존중하며 유관 국가와 긴밀히 협의하고 단독 또는 제3국과 함께 군사개입을 하지 않을 것이며 흡수통일의 기회로 이용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한다. 중국은 親中 정부 수립이나 난민 월경을 막기 위해 군사개입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 양국은 미국과 더불어 北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방지책을 협의한다. 우리는 평화통일을 강조하되 중국은 한중 수교 조항에 규정된 남북 간 평화통일을 존중하고 통일 한국의 주한 미군의 수, 배치, 역

할에 대해서는 양국가가 긴밀히 협의하기로 합의한다.

셋째, 북한 비핵화 의제 설정에 대한 협의이다. 2005년 9.19일 제4차 베이징 6자 회담에서 도출된 공동성명으로 복귀이다. 이 성명은 ‘한반도의 검증가능 한 비핵화’라는 대 원칙아래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계획’을 포기하는 대신 5개 참가국은 경제지원을 하고 북미, 북일 간 관계 정상화를 규정하고 있다. 북한이 헌법에 핵 보유를 명문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핵무기를 협상의 대상으로 한다는 합의는 매우 중요하다. 양국은 미국을 포함해 적절한 포럼에서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하기로 합의한다. 한중은 차관급 외교·전략 대화와 1.5트랙의 대화체의 병행 운용이 바람직하다.



북한의 핵실험과 한중 양국의 공조방안



진행남

제주평화연구원

북한이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3년 2월 12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지역에서 제3차 핵실험을 강행함에 따라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북한은 이번 핵실험으로 '사실상의(de facto) 핵보유국'에 성큼 다가서면서 한반도의 군사력 균형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동시에, 동북아의 안보환경이 질적으로 달라지는 이른바 'Game Change' 국면이 도래하면서 그 대응에 있어서도 패러다임 전환이 요청되고 있다.

이에 이 글은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의 의도를 짚어보고 북한 핵실험 후 한국의 대북정책을 전망한 뒤, 한중 양국의 공조방안을 모색

하고자 한다.

■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의 의도

첫째, 핵보유야말로 북한의 체제유지를 위한 ‘최후의 보루’로 확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김정은의 경험 부족 등 리더십에 대한 의구심을 불식시키고, 내부결속을 다지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하겠다.

셋째, 미국을 압박해 북미 양자협상에 나서도록 함으로써, 주한미군 철수 등을 겨냥한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포석으로 볼 수 있다.

넷째, ‘갑’의 지위에서 남북관계를 일방적으로 끌고 나가기 위한 협박의 신호로, 특히 대규모 경제 지원을 강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구본학, 2013).

다섯째, 핵 능력을 과시해 재래식 국지전을 주도하면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켜 나가려는 의도도 깔려 있다고 본다(이정철, 2013).

■ 북한 핵실험 후 한국의 대북정책 전망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본격적인 가동도 해보기 전에 시험대에 서게 됐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당장은 대화 보다 제재에 무게를 두는 게 불가피

해졌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2월 25일 취임사를 통해 “우리가 처한 안보상황이 너무도 엄중하지만 여기에만 머물 수는 없다”며 새 정부의 대북정책을 강경 일변도로 흐르지 않게 하겠다는 의지도 아울러 밝혔다(연합뉴스, 2013년 2월 25일자). 즉, 박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 브랜드인 ‘신뢰’ 원칙의 외교 기조 아래, 전임 이명박 대통령과는 달리 대화와 압박을 병행하는 대북 ‘투트랙(Two-track)’ 전략을 강화할 전망이다.

2013년 3월 27일 외교부와 통일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북한의 비핵화를 남북협력과 상호보완적으로 추구해, 남북회담시 북핵문제를 의제화하고 6자회담 등 비핵화 협상에 동력을 주입키로 했다. 비핵화와 남북협력의 보완추진은 ‘북핵 불용’이라는 원칙은 고수하면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포함된 각종 유인책으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려는 것이다.

■ 한중 양국의 공조방안 모색

2010년 천안함 폭침·연평도 포격시 양국관계의 전례없는 악화를 경험했던 한국과 중국은 2013년 새 지도부의 본격적인 출범으로 그간 소원했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호기를 맞았다. 한국과 중국은 2008년 양국관계를 한 차원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설정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명실상부하게 현실에 구현해 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를 위해 양국은 전략적 이익의 공유를 심화·공고화하

는 게 바람직하다. 특히 한국과 중국은 다양한 수준의 대화를 통해 ‘북한의 미래’에 대한 인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중국이 북한을 미국 견제의 전략적 자산으로만 여기는 한, 대한반도 정책의 대폭 수정은 기대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그러나 양국은 이러한 문제를 포함해 보다 허심탄회한 대화를 거쳐 공감대를 넓히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따라서 양국 정부간 기존의 차관급 전략 대화를 장관급으로 격상시키는 한편, 정책 입안자와 전문가가 함께 참가하는 1.5트랙의 대화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고 위기상황을 관리하기 위해 양국 사이에 긴밀한 협의 채널을 조기에 확충하는 게 시급하다(차창훈, 2013).

중국은 여전히 6자회담이라는 대화의 틀에 북한을 끌어들이므로써 6자회담을 한반도의 긴장구조를 관리하는 기제로 삼으려 하지만, 북한은 대미 ‘직접 담판’을 추구하고 있는 만큼, 당장 6자회담에 응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에 따라 6자회담이 앞으로도 상당기간 공전할 경우, 대안적 해법 마련 차원에서 ‘한·미·중 대화’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북핵문제에 대한 압박 수위와 접근방식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지만 3국 모두 누구보다 한반도의 불안정을 원하지 않고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원하기 때문이다.

동북아에서는 다자안보협력이 바람직하지만 제도화가 쉽지 않은 만큼, 한반도를 둘러싼 소다자주의적 안보협력의 기제로서도 이러한 한·미·중 전략대화는 시도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참고 문헌

구본학(2013), “북한의 3차 핵실험과 우리의 대책”, 『안보현안분석』 Vol. 80,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이정철(2013), “북한 핵실험의 의도와 내구력 게임의 한계”, 성균중
국연구소 긴급 대토론회 『북한 핵실험 이후, 중국과 동북아』 발제문.

차창훈(2013),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책임대국과 시진핑의 대북정
책 딜레마”, 2013년 한국국제정치학회 기획학술회의 발표자료집.

朝鮮核試驗和韓中兩國協力方案

秦幸男 (濟州和平研究院)

朝鮮不顧國際社會的反對，于2012年2月12日在咸鏡北道吉州郡丰溪里地區强行进行了第三次核試驗，因此，围绕韩半島的东北亞局势骤然变得更加紧张。随着朝鮮通过此次核試驗向“事實上的有核國”迈出了一大步，韩半島的整个军事均衡受到威胁。同時，东北亞的安保环境也发生了根本性变化，且迎來了所谓的“Game Change”局面，因此，在應對当前问题的方式上也需要轉變模式。

笔者希望通过这篇文章，首先，仔细分析朝鮮强行进行第三次核試驗的意图；其次，展望朝鮮核試驗之后韓國的對北政策，最后，探索韩中兩國の協力方案。

朝鮮强行进行第三次核試驗的意图

第一，似乎把拥有核武当作维持朝鮮体制的“最后的碉堡”。

第二，打消诸如金正恩缺乏經驗等對其領導能力方面的怀疑，并且有意加强内部团结。

第三，向美國施壓，迫使美國出席朝美双边會谈，并且為签署包

括驻韩美军撤军等内容的和平协议做铺垫。

第四，是在“甲”的位置上為單方面推进南北關係而做出的威胁信号，尤其是，似乎在强调大规模的经济援助。（具本鹤，2013）

第五，通过炫耀核能力來主導传统的局部戰，且也有贯彻自己想法的意图。（李正哲，2013）

朝鮮核試驗后韓國對北政策的展望

由于朝鮮的第三次核試驗，使得朴槿惠政府對北政策的基调“韩半島信赖程序”，尚未嘗試啓动就面臨了嚴峻的考驗。因朝鮮實施核試驗，比起對話，当前不得不把重心放在制裁上。

但是，朴槿惠在2013年2月25日的就職儀式中提到，“虽然我們所面臨的安全形勢很嚴峻，但絕不能只停留在这里。”可見，朴槿惠總統不希望新政府的對北政策出現一邊倒的現象(聯合通訊，2013年2月25日)。預測朴總統會利用以自己的政治品牌“信賴”為原則的外交基调，加強與前任總統李明博有所不同的對話和施壓并存的對北“Two-track”（雙軌）戰略。

2013年3月27日，韓國外交部和統一部的總統業務報告書中也提到，要把朝鮮的無核化跟南北協力同步推進，且把朝核問題定為南北會談的議題，向六方會談等無核化協商注入動力。無核化和

南北协力的相互推进，是在坚持“不容许朝核”的原则下，利用“韩半岛信赖程序”所包含的各种诱导政策，努力促进朝鲜的变化。

韩中兩國的协力方案

在2010年天安号袭击和延坪岛炮击事件中，经历史无前例矛盾的韩中兩國，随着2013年新一届领导班子的登场，迎来了可以改善兩國关系的绝佳时机。韩国和中国面对的重要课题，就是要名副其实地实现在2008年为了进一步加强兩國关系而设定的“战略合作伙伴关系”。为此，兩國必须加强和巩固战略性利益的共享。尤其，韩国和中国需要通过多层对话，寻求对“朝鲜的未来”的看法达成共识。

如果中国认为朝鲜只是牵制美国的战略性资产，那么就很难期待中国的韩半岛政策出现大幅度的修改。但是，韩中兩國需要通过彼此之间开诚布公的对话，努力扩大纽带。因此，兩國不仅要把兩國之间原有的次长级战略对话升级为部长级，而且，需要更加积极地推进决策者和专家同席的1.5 track 对话。尤其，为了抑制朝鲜的突袭和管理危机情况，兩國之间急需扩充协商渠道(车昌勋，2013)。

中国依然想把朝鲜拉入六方会谈对话框架，且把六方会谈当作管理韩半岛紧张局面的机制。但是，朝鲜已经开始追求与美国“直接谈判”，所以回应六方会谈的可能性很小。因此，如果六方会

谈长期停滞不前，需要從對策和解決方案的角度去研究“韩美中對話”。虽然，在朝核问题的施壓程度和處理方式上多少有些差异，但是三个國家谁都不希望韩半岛不穩定，而是希望朝核问题的和平解決。

在东北亞地區實施多邊安保协力較為合适，但實現制度化則比較困难。作為围绕韩半岛的小型多邊主義型安保协力的基调，韩美中戰略對話值得嘗試。

參考文獻

具本鶴(2013), “朝鮮第三次核試驗和我們的對策”『安保問題分析』Vol. 80, 國防大學 國家安全保障問題研究所

李正哲(2013), “朝鮮核試驗的意圖和持久力遊戲的局限”, 成均館中國研究所緊急討論會「朝鮮核試驗之後, 中國和東北亞」發表資料

車昌勛(2013), “中國的對韓半島政策：責任大國和習近平對北政策的困境”, 2013年韓國國際政治學會企劃學術會議 發表資料

* An earlier version of this essay was presented at the Jeju Peace Institute-Tianjin Academy of Social Sciences joint conference held in Tianjin, China on Wednesday, 17 April 2013.



Japan's North Korea Adventure



PARK Cheol Hee

Seoul National University

Trilateral cooperation among the U.S., China, and South Korea is under development in order to address the North Korean question in a renewed fashion. Until the advent of Xi Jinping's leadership, China often tends to advocate North Korean position, putting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as a diplomatic priority. This actually meant that denuclearizing North Korea comes after stable management of the Kim regime in North Korea. However, the third nuclear test by the new North Korean leadership in February, 2013, altered the situation. Despite Chinese persuasion that North Korea should avoid provocative actions against international society, North Korea went on their way. After that, Chinese showed an open consent to the U.N. resolution against North Korea. As North Korea raised the tensions on

the Korean peninsula, China literally applied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including the closure of North Korean bank in China. The United States showed firm security commitment to South Korea by displaying high-tech weapons system to deter North Korean provocations. South Korean president Park repeatedly announced that North Korea's bad behavior would never be compensated. Also, she said she would cut a vicious circle of North Korean provocation followed by dialogue and assistance and then falling again into the trap of suddenly cutting the deal and returning to the provocation.

Now three country leaders - Obama, Park, and Xi- are in agreement that, without attitudinal change that complies to international norms and standards, North Korean gesture of dialogue can hardly be embraced. Alarmed by the delicate change of mood, North Korean leader dispatched Choi Ryong Hae to China as a special envoy. However, Xi told him that North Korea should be denuclearized. North Korea suddenly made a suggestion for an inter-Korean dialogue on June 6, just two days before the U.S.-China summit meeting, which ended up with an abortive attempt. When Obama and Xi met in the U.S. on June 8, both leaders confirmed that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is in the common interest of the two countries and North Korea's nuclear status can never be accepted. Irritated by the diplomatic isolation, North Korea suggested a dialogue with the United States on June 16. However, despite this North Korean endeavor to disguise their provocative outlook, South Korea and China are likely to agree upon the principle of denuclearizing North Korea at a summit meeting scheduled on June 27.

The fact that three countries confirmed their will to denuclearize North Korea is a remarkable development. This will hamper North Korean adventure to take advantage of different positions revealed by six party talk participants. Though North Korea claims that it is a nuclear state and that dialogue should be advanced on the basis of acknowledging North Korea's new nuclear status, all the six party talk member countries except North Korea are not going to accept North Korea's indulgent claims.

It seems that North Korea is well aware of the newly developing consensus among the neighboring countries. That is why North Korea suddenly changed its attitude and suggested dialogues with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lso out of an endeavor to make an outlet for diplomatic impasse, North Korea invited Mr. Iijima of Japan to test the possibility of opening a new chapter in North Korea-Japan relations. However, the hurdle for improving bilateral ties between North Korea and Japan is too high, because Japan is interested in resolving abductees issues first. However, both parties understand that it is neither free of charge nor politically safe. North Korea learned a painful lesson in 2002 that, if they release Japanese abductees to their home country, that would only aggravate the situation by provoking anti-North Korean emotion among the ordinary Japanese rather than finding a new breakthrough. Also, Japan is fully aware that North Korea would demand huge amount of money or diplomatic normalization as a price for redressing the issue.

Therefore, both North Korea and Japan utilized the Iijima's visit for domestic and international political gesture. North Korea sent a signal

to other countries that it can open underutilized channel of communication if trilateral cooperation advances to put pressure on North Korea. North Korea wants to use Japan as an escape route for downgrading diplomatic isolation. On the other hand, Japanese leader condoned Iijima's move on the assumption that his visit can show a political willingness of Abe to resolve the abductees issue during his tenure at least to the Japanese domestic audiences. Though the issue can hardly be resolved by one time deal, the Abe cabinet can open an independent dialogue channel with North Korean counterpart. Also, Japan can send a diplomatic signal that it has its own way of handling the North Korea issue, though three countries - South Korea, U.S., and China- neglects Japan's role. However, Japan's adventure has been criticized by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s an untimely and uncoordinated action which can give a wrong signal to North Korea. It may end up with providing an exit when sanctions and pressures are on the move.

It is all too often desirable to open a dialogue with North Korea as long as North Korea is sincere enough to talk about denuclearizing the country. However, if the aim of the dialogue is to get international approval of its nuclear status or just to shirk away the moment of crisis, dialogue for dialogue should never be accepted positively. As the three countries leaders agree, denuclearizing North Korea should be a firm consensus on which dialogue or negotiation should be opened. Japan should not be an exception, because denuclearized North Korea serves the interest of Japan as well. Rather than taking an independent course of action, Japan should be willing to jump on the ship of newly developing consensus in Northeast Asia.



Currency Swaps Move South Korea Closer to China, away from Japan



HAN Intaek

Jeju Peace Institute

New strategic choices manifest themselves in many different ways. In July, the currency swap arrangement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reached its lowest level since 2006. Following the recent lapse of a US\$3 billion currency swap contract and the lapse of a US\$57 billion currency swap in October 2012, their bilateral currency swap is now equivalent to a mere US\$10 billion, down from US\$70 billion in October 2011. There is more behind this change than historical disputes or mere apathy. South Korea is starting to realise that its strategic and economic future lies more with China than Japan.

But wasn't currency cooperation one of the success stories of regional

cooperation in Asia, with Japan its most vocal proponent? After all, it was Japan who first proposed an Asian Monetary Fund, and the memory of the Asian Financial Crisis still haunts South Koreans, making them unusually supportive of currency cooperation.

Officially, both countries say that there was no particular need to renew currency contracts.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s over, and credit ratings for South Korea have improved greatly, returning to the pre-crisis levels. In 2010, South Korea let its currency swap arrangement with the United States expire without much negative impact.

Many analysts think historical disputes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explain the reduction in the value of currency swaps. This made sense in 2012, when the total value of agreements was reduced from US\$70 billion to \$13 billion. This downgrade came after then President Lee Myung-bak became the first sitting South Korean leader to visit the Dokdo Islands, a group of islets that Japan calls Takeshima. He then demanded the Japanese emperor apologise to those Koreans who perished while fighting for independence. In response, Japan's Chief Cabinet Secretary and Finance Minister threatened a review of the size of its bilateral currency swap with South Korea, and finally on 19 October 2012 both countries announced that their currency swap agreement would be reduced. So last year, currency co-operation was clearly a casualty of disputes between the two countries over history.

But this year's lapse is a different story. True, tensions still run high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over the issues of enforced sexual


slavery and the Dokdo Islands. But South Korea's new president, Park Geun-hye, has not visited Dokdo, nor has she demanded an apology from the Japanese emperor. It is unlikely that Japan is taking aim at the new president for the acts of her predecessor. And the size of the downgrade, US\$3 billion, is relatively insignificant, especially if Japan meant to hurt South Korea. But if not discord over history, what would have led the two countries to reduce the value of their currency swap arrangements?

In early May, in accordance with the tradition set by her predecessors, President Park made the United States her first overseas destination. A month later, however, she broke away from the path trodden by her predecessors, choosing China over Japan as the destination for her second overseas trip. At the invitation of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President Park made a state visit to China in late June, where she was welcomed with unusual hospitality. In her two days in Beijing, President Park spent as much as seven-and-a-half hours with President Xi, conversing occasionally in Chinese and creating a bond with China's new leader. President Park's state visit to China, according to Yonhap News, 'offers one of the best promises yet to upgrade relations with a nation that has the greatest leverage over North Korea and trades heavily with the South'. This is no overstatement. Relations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have improved greatly following President Park's visit to China.

In the joint communiqué issued after the summit meeting, South Korea and China pledged to bolster cooperation on a wide range of issues. In

particular, the two countries agreed to renew their currency swap contract ahead of schedule and extend it to 2017. This decision follows the 2011 agreement by both countries to double the size of their currency swap arrangement to US\$56 billion. The countries are expected to further increase the bilateral currency swap and lengthen its duration.

President Park's decision to visit China before Japan, South Korea's decision to renew its currency swap deal with China ahead of schedule, and its decision not to seek an extension of its currency swap agreement with Japan are hardly unrelated choices; nor are they merely reactions to historical discords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Rather, they represent new strategic thinking. Together, they suggest that South Korea is realigning its relations with major powers. Having leaned heavily toward the United States and, to a lesser extent, Japan in the past, South Korea is now balancing itself closer to China, its largest trading partner and also the country with the greatest influence over North Korea. By allowing its currency swap deals with South Korea to wither, Japan has only hastened South Korea's diplomatic realignment and, probably, the internationalisation of the Chinese currency.

 * This article is concurrently published on the East Asia Forum (<http://www.eastasiaforum.org/2013/07/18/currency-swaps-move-south-korea-closer-to-china-away-from-japan/>).



일본의 군사적 보통국가화와 동북아 안보환경



조양현

국립외교원

탈냉전 이후 일본의 방위안보정책은 독자적인 방위력의 확충과 국제적 안보 역할의 확대, 그리고 미일안보조약의 재정의를 통한 미일 동맹의 재편·강화를 추구해 왔다. 일본 본토의 소극적 방위에 한정했던 1976년의 ‘방위계획대강(防衛計畫の大綱)’, 주변지역의 방위로 확장을 시도한 1995년의 대강, 국제안보환경의 개선 등 글로벌 차원의 역할 확대를 추구한 2004년의 대강, 그리고 일본 열도의 남서방면의 방위력 강화를 강조한 2010년의 대강을 거치면서 일본 방위정책의 관심대상이 일본 본토에서 주변지역 그리고 국제무대로 확장되었다. 이 과정에서 일본 방위전략의 근간이었던 ‘전수방위(專

守防衛)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전수방위란 외부의 공격을 받은 후에 군사력을 행사하며, 그 정도는 자위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고, 상대국에 대한 선제공격이나 전략공격을 금지하며, '미즈기와(水際)' 즉, 자국 영토 혹은 주변에서만 작전하며, 상대국의 침공이 있을 때마다 격퇴한다는 것으로 지극히 사후적이고 수동적인 군사전략이다. 따라서 무기체계에 있어서도 '기본적(基盤的) 방위력' 즉, 자위(自衛)에 필요한 최소한의 방위력의 보유에 한정되며, 탄도 미사일, 장거리 전략폭격기, 미사일 탑재 원자력잠수함, 항공모함 등 공격형 무기의 보유는 금지되었다.

전후 일본의 방위전략이 일본 본토의 소극적 방위에 국한될 수 밖에 없었던 배경에는 '평화헌법'이 있다. 연합국의 점령 하에서 제정된 일본 헌법은 전력불보유(戰力不保持)와 교전권부인(交戰權否認)을 명시하고 있는바, 공식적으로 일본은 군대를 보유할 수 없고 국제분쟁의 해결 수단으로서 전쟁을 할 수 없다. 그렇지만 미소냉전 하에서 미일동맹체제에 편입된 일본은 소련으로부터의 침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물리력이 요구되었다. 따라서 평화헌법의 이념과 본토 방위의 필요성이라는 현실 사이의 타협이 바로 전수방위 원칙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탈냉전과 21세기 국제안보환경 변화를 배경으로 일본의 방위계획대강은 방위정책의 기본 목표로서 일본에 대한 위협 방지 외에 국제적 안보환경의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 및 동맹국과의 연대행

등을 추가함으로써, 자위대의 임무를 일본 방위 및 주변지역 활동을 넘어 국제무대로까지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일본 방위, 재해에 대한 대응, 미군과의 협력, 그리고 국제평화협력활동 등 다양한 요구에 부합하도록 방위력의 탄력적인 운용을 위해 MD 및 정찰위성의 운용과 정보수집·분석 능력 강화, 공중급유기, 대형 수송함·호위함, 신형 수송기 등의 장거리 투사능력의 확충 등 예방적, 적극적 대응이 가능한 방위력의 확충이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탈냉전 이후 ‘북한 위협론’과 ‘중국 위협론’은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를 위한 논리적, 실제적 근거를 제공하여 왔다. 1993년 노동 미사일 발사는 일본에서 북한을 실제적 안보위협으로 인식시킨 직접적 계기가 되었다. 1998년 8월 대포동 미사일 발사 이후 일본 정부는 당시 반대여론으로 인해 도입이 불투명하던 미사일방어(MD) 시스템 및 4기의 정찰위성 도입을 결정하였고, 5척의 이지스함과 4대의 공중급유기를 실전배치할 수 있었다.

2010년과 2012년에 발생한 다편다오(釣魚島)/센카쿠(尖閣) 열도 사건을 계기로 일중 관계는 크게 악화되었고, 이를 계기로 일본에서 ‘중국 위협론’이 크게 확산되었다. 2010년의 방위대장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동중국해 등에서 확대되고 있는 중국의 해양진출에 대응한 남서방면의 방위력 강화이다. 즉, 가고시마(鹿兒島)에서 오키나와에 이르는 남서제도(南西諸島)에서의 육상자위대 주둔과 해상·항공 자위대 수송력 증강 등을 통해 도서 방위에 필요한 ‘동적(動的) 방위력’을 강화하여 해상수송로의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2013년 말에 새로운 방위계획대강을 채택할 예정인데, 최근 이에 대한 자민당 안(案)이 제시되었다. 이에 따르면, 고도화하고 있는 북한의 핵, 탄도미사일 능력을 감안하여 자위대에 의한 적 기지공격능력(敵基地攻撃能力)의 보유를 검토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남서방면의 방위를 위해 육상자위대에 해병대의 기능을 부여하여 수륙양용부대를 신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공격능력을 갖지 않고 방어에만 전념하겠다는 전수방위원칙과 모순된다.

한편 미일동맹에 있어서도 냉전기의 미일안보체제가 일본 방위와 주변지역에서 유사사태가 발생할 경우의 일본에 의한 기지 제공을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면, 냉전 이후에는 주변사태 및 글로벌 차원의 안보환경 개선을 위한 미군과 자위대의 공동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종래에는 소련에 의한 일본 본토 공격을 염두에 두고 미국의 주된 역할과 일본의 보조적인 역할이 규정되었던 데 반해, 21세기에는 테러, 핵 확산 등 비전통적 안보 위협의 등장이라는 안보환경에 맞추어 미일동맹은 재편되었고, 일본 본토 방위에 있어서 미군과 자위대의 역할이 역전되었다.

일본은 독자적 방위력의 정비, 헌법개정(혹은 헌법해석의 변경)을 통한 자위대의 군대화 및 집단적자위권 행사의 확보와 함께,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의 재개정을 통해 북한의 핵·탄도 미사일과 중국의 해양진출에 대응하기 위한 미일 간 역할분담의 재조정 및 병력운용의 통합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미일 양국은 미일 간 공

동훈련·연습의 확대, 시설의 공동 사용, 정보 공유 및 공동의 정보 수집·정찰 활동의 확대는 물론 호주, 한국, 인도 등과의 안보협력을 추구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대로, 일본은 냉전기의 비무장 경제중심의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방위안보정책에서 탈피하여 한편으로는 미일동맹의 재정의를 통해 미군과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독자적인 방위력을 확충하고 자위대의 활동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동아시아와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군사·안보 역할 확대를 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군사적 보통국가화’로 정의할 수 있다. 일본은 이제 전후의 평화헌법체제나 ‘요시다 독트린’과 같은 국제적인 기준에서 볼 때 비정상적인 정책에서 벗어나 정치·군사적 의미에서의 정상적인 국가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향후 일본의 국가노선으로 가장 현실성 있는 시나리오는 미일동맹의 유지를 전제로 한 보통국가론인바, 이의 실현을 위한 군사적 보통국가화 작업이 진전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현재의 미일동맹의 강화 추세를 보건대,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안보전략의 핵심을 구성하는 일본의 전략적 가치는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부상과 북한 핵·미사일 사태로 지역 안보질서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으로서도 미일동맹을 대체할 수 있는 현실적인 선택지는 많지 않다.

일본의 군사적 보통국가화는 동아시아 안보질서와 관련하여 이중성

이 내재되어 있다. 이는 지역안보에 대한 일본의 건설적 역할 확대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특히 미국의 영향력 감소를 시야에 넣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일본은 냉전 이후 경제력과 군사력을 비약적으로 증대시키고 있는 중국이 지역질서를 혼란시키지 않고 연착륙할 수 있도록 견제하는 중요한 세력이 될 수 있다. 반면 최근의 일본 방위안보정책의 방향은 미일안보협력의 강화를 통한 중국 견제로 향하고 있는 바, 이는 지역 내 군비경쟁과 패권경쟁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일본의 군사적 보통국가화는 한반도와 동북아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우선,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대비해 한미동맹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헌법개정과 집단적자위권 문제 등은 기본적으로 일본의 주권 사항이며, 이에 대한 한국의 영향력은 제한적이다. 그렇다고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선택한 일본에 대항하여 한국이 중국과의 안보협력을 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미일안보체제는 일본의 독자적인 군사대국화를 견제하는 기능이 있으므로, 한미동맹의 강화를 통해 미일동맹의 대일 견제적 성격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으로, 한일간 전략대화 및 안보 교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 유사사태 발생시 일본에 의한 대미(對美) 후방지원이 가능해진 상황에서 한일간 안보 관련 대화채널을 갖추는 것은 중요하다. 대중(對中)관계 설정 및 대북정책에 나타난 한일의 입장 차이는 양

국의 전략적 연대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던바, 이에 대한 한일 간의 인식 공유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층적인 다자협력체제를 통한 한반도 주변 강대국과의 균형 잡힌 외교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양자관계를 보완하는 의미에서 복수의 다자협의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를 통해 지역 강대국인 일본과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면서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를 평화로운 지역질서 유지에 건설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한중일 3국간 안보 협력 외에 한미일, 한미중 및 한중러 전략대화를 병행해서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13년 동아시아 지역 정상회의 결산:

한-아세안 안보 대화와 미-중 경쟁



이재현

아산정책연구원

2013년 동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정상외교 이벤트가 막을 내렸다. 매년 동아시아 정상들은 아태경제협력(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아세안 정상회의, 아세안+3 정상회의 그리고 동아시아정상회의(East Asia Summit: EAS)를 잇달아 연말에 개최한다. 올해도 10월 7일부터 약 일주일 간 일련의 정상회의들이 펼쳐졌다.

2013년 정상회의들에서는 두 가지 중요한 발전 혹은 변화들이 눈에 띈다. 한 가지는 한국과 아세안 간의 안보 대화를 신설하기로 한 점

이고, 다른 한 가지는 중국과 미국 사이 지역에서 전략경쟁에 일정한 변화가 감지된다는 점이다. 여기서는 이 두가지 변화의 의미와 한국의 전략에 대해서 언급하려 한다.

■ 한-아세안 안보 대화

올해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은 한국과 아세안 사이에 안보 대화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한-아세안 간 안보 대화는 지금까지 아세안을 둘러싼 지역협력들이 안보 관련 협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례적이다. 더욱이 아세안이 보다 지역안보 문제에서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는 중국이나 일본과 안보 관련 대화체를 가지고 있지 않고, 한국이 처음으로 공식화된 안보 대화를 아세안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우리 쪽에 유리하게 해석하자면 아세안이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한국은 매우 민감한 사안인 안보 문제에 까지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편한 상대, 신뢰할 만한 상대로 여긴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지금부터이다. 이 안보 대화 안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라는 질문들이 매우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세 가지 정도의 제안이 가능하다. 우선 한-아세안 안보 대화는 비전통안보, 인간안보와 관련한 기존 한-아세안 협력을 모두 담아내고, 다양한 비전통-인간안보 분야 협력을 조정하는 창구의 역할을 해야 한다.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이슈를 가진 비전통-인간안보 협력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파편화된 협력이 일어나기 쉽다. 따라서 한-아세안 안보 대화체는 이를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두 번째로 한-아세안 안보 대화체는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강대국 경쟁에 대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인가에 관해 한국과 아세안이 공동의 지혜를 모으는 장으로 역할 해야 한다. 지역 중소 국가인 한국과 아세안은 강대국 경쟁으로부터 전략적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이를 공동의 노력으로 대처하는 전략을 한-아세안 안보 대화를 통해 모색해야 한다. 세 번째로 이런 대화와 합의의 과정에서 한-아세안 간 전략적 신뢰를 높여야 할 것이다. 대화체의 설립 자체가 신뢰구축의 최종단계는 아니며 안보 관련 협의 속에서 더욱 신뢰를 공고히 할 여지가 있고 또 그래야만 한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당부해야 할 점은 이미 안보 대화를 설치하기로 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이 대화체가 내실 있게 발전하도록 관련 의제를 재빨리 준비하고 제도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많은 동아시아에서 협력의 제도들이 시작 당시에는 큰 관심을 모으지만, 관련 당국의 느린 움직임으로 인해서 초기 추동력을 잃고 의미 없는 제도로 전략하는 일이 많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한국은 아세안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의제를 제안하고 콘텐츠를 채워 나가야 한다.

■ 미-중 경쟁

두 번째로 주목해볼 내용은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의에 불참 하면서 더욱 증폭된 미국의 대(對) 아시아 피봇에 관한 의문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국내 경제문제로 인해 이번 정상회의에 불참 하면서 이번 정상회의는 중국의 독무대가 되었다는 평가들이 많았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의 불참과 관련하여 이번 정상회의의 자체만을 볼 것이 아니라 최근 일 년간 중국과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취한

전략을 돌아보며 양국 경쟁의 큰 그림을 해석해내는 것이 필요하다.

오바마 2기 국무장관을 맡은 존 케리(John Kerry)는 취임 초기부터 그가 아시아 피봇 정책을 잘 이끌 수 있는 인물인가에 대해 의심받아왔다. 그리고 취임 이후 행보를 볼 때도 아시아 보다는 중동 문제에 더 큰 관심을 보였다. 이런 케리의 행보는 아시아 피봇을 강력히 추진했던 전 국무장관 힐러리 클린턴과 대비되어 더욱 도드라졌다. 2013년 중동에서 벌어진 일련의 중요한 변화들, 즉 시리아 사태의 악화, 이집트에서 군부의 쿠데타 등으로 인해 미국의 관심은 더욱 중동으로 향하게 되었다. 이런 변화 속에서 동남아 국가를 중심으로 미국의 피봇 정책이 여전히 유효한가에 대한 의문이 크게 제기되었다.

반면 남중국해에서 자기 주장 강화로 인해 동남아 국가들의 안보 불안을 일으키고 미국의 아시아 피봇 정책, 특히 군사적 관여 정책에 빌미를 주었던 중국은 태도를 바꾸고 있다. 적어도 최근 1년여 정도 기간에 중국은 남중국해 문제에서 동남아 국가들에게 훨씬 유화적인 태도를 취해왔다. 남중국해에서 큰 충돌을 회피하면서 동남아 국가들이 꾸준히 요구해 온 남중국해 행동규약(Code of Conduct) 논의에 대해서 이전에 비해 보다 유연한 입장을 보여 왔다. 나아가 중국의 대(對) 동남아 매력공세(charm offensive)를 다시 연상시키게 할 만큼 동남아 국가들에게 다양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아세안 국가들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동남아 국가들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아시아 피봇 정책이 행동 보다는 말에 그치고 있고,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보다 유연한 정책을 구사할 때 미국의 군사적 관여가 이전처럼 그리 매력적인 선택은 아니다. 미국의 군사적 관여를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이전에 비해서 강력하게 미국의 진입을 찬성할 필요 역시 없다. 보다 장기적으로 동남아 국가들은, 긴급한 안보 문제만 아니라면 역시 경제성장이 가장 중요한 국가 과제이다. 이때 중국과 미국 중 어느 편이 자신들의 경제성장에 보다 도움이 될 것인가를 계산할 것이다. 이번 일련의 정상회의, 지난 일 년간의 미-중 동학으로 볼 때 중국이 동남아 지역에서 다시 미국에 대해서 잃어버린 우위를 빨리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에서 강대국 경쟁으로 인한 지역 질서의 유동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은 지역 국가들에게는 전략적 부담이 된다. 한국과 아세안의 안보 협력은 양자의 이익을 위한 협력을 넘어서 미-중 간 지역의 전략적 유동성에 공동 대처하는 동시에 지역 전체에 안보, 전략적 공공재를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몽골과 일본의 북한정책



Julian DIERKES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

Otgonbaatar BYAMBAA (와세다 대학교)

초기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차 엘벡도르지 몽골 대통령이 김정은과 만나지는 않았다고 하지만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을 방문한 최초의 국가원수가 되었다.

아베 일본 수상은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많은 정치적 자본을 투자해왔으며, 적어도 그 일부를 몽골의 중재에 걸고 있다. 하지만 몽골 정부가 오랫동안 부글거리던 위기의 해결책 마련에 일조할 의지와 역량을 갖추고 있을까? 이에 대한 대답은 'Yes'이다. 북한을 끌어들이는 방법을 모색함에 있어서 중재역할의 담당이야 말로 몽골의 외교정책과 잘 부합된다. 역사적으로나 현재 진행 중인 북한과의 관계를 볼 때 몽골은 조심스럽게 중재를 밀어 붙이거

나 또는 일조하는데 유리한 위치에 놓여 있다.

지난 이십여 년 동안 몽골은 중국과 러시아라는 강력한 이웃의 영향력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 다른 나라들과의 우호 관계 구축을 시도한 ‘제3의 이웃’ 외교정책을 추구해왔다. 이로 인해 몽골은 국제적 현안들에 있어서 단지 3백만 명의 작은 인구의 내륙국가라는 지위에 맞지 않게 두드러져 보여 왔다. 일본은 상당한 개발원조 및 몽골 기업에 대한 몇몇 제한된 투자를 통하여 이러한 활동에 부응해 왔다.

미국과 한국, 특히 일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몽골은 북한과의 오랜 관계가 남침문제를 해결하려는 아베 수상의 노력에 대한 협조를 유도하는데 즉시 사용될 수 있으며, 동시에 몽골에게 그 수단을 제공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해왔다. 몽골정부가 북한과의 관계를 지속하고 아마도 이를 확대하려는 역량이 보탬이 될 몇 가지 요소들이 있다.

첫 번째 요소는 역사이다. 몽골은 소련 다음 두 번째로 북한을 인정한 나라였다. 올해는 북한과 몽골의 외교수립 65주년을 기념한다. 한국전쟁 동안에 몽골은 225,000마리의 소와 고기, 의복, 밀을 북한에 지원하였으며, 수백 명의 북한 어린이들이 울란바토르의 특별고아원으로 대피하여 양육되었다. 이로 인해 몽골어를 구사하고 몽골에 대한 좋은 추억과 고마움을 갖고 있는 북한인 집단이 만들어졌다.

몽골은 소련의 붕괴 및 몽골 민주화 혁명에도 불구하고 처음엔 주로 관성에 의해서이지만 1990년대 내내 북한과의 관계를 유지하였다.

이 시기에는 또한 몽골로 대피했던 북한 핵심간부들의 영향력이 높았을 수도 있다. 2000년대의 한동안 이 관계는 몽골로의 탈출에 성공한 탈북자들로 인해 다소 위협을 받기도 했으나, 이러한 흐름은 최근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남한과 몽골 간 관계진척에 대한 우려로 잠깐 울란바토르의 북한대사관을 폐쇄하였으나 2004년 8월에 다시 열었다.

몽골은 2000년대에 들어와 북한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전략적 잠재력을 깨닫기 시작했다. 이러한 잠재력은 울란바토르 6자회담의 주최를 반복적으로 제안했을 뿐만 아니라, 2007년 9월과 2012년 3월 및 12월 북일회담을 주최하면서 매우 현저하게 드러나고 있다. 북한지도부는 몽골이 중립적인 협상의 장을 제공할만한 친구라고 보는 것 같다.

오늘날 몽골과 북한의 접촉은 공식적 및 덜 형식적인 토대 하에 유지되고 또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양국 군인 간 교류뿐만 아니라 의사, 유치원 직원, 체육 관료 등도 정기 교류를 하고 있다. 또한, 몽골기업에 계약되어 있는 북한노동자들도 있는데, 이 문제는 과거에 인권에 대한 우려를 야기한 적이 있다.

앞날을 내다보자면 북한과 몽골의 경제협력은 미실현된 잠재력을 갖고 있으며, 양국 경제에 상호보완적으로 보일 수 있다. 해양 접근이 막혀 있는 몽골은 천연자원을 세계시장에 수출할 대체 경로의 개발을 예민하게 추구하고 있다. 러시아 오일에 대한 몽골의 의존 또

한 바로 옆의 이웃들 외에 다른 나라들에게 시선을 돌리게 만들고 있다. 지난 7월에 몽골 오일회사 HB Oil은 북한 북동부의 나선자유 무역지대에 있는 성리 정유공장 지분의 20%를 매입하였다. 성리는 러시아 철도를 통해 멀리 몽골과 연결되어 있으며 일 년에 이백만 톤의 정유용량을 보유하고 있다.

평양에서 10월 30일에 열린 몽골-북한 기업인 포럼에서 엘벡도르지는 양국 간에 존재하는 사업기회를 강조하였으며, 양측이 합작투자 회사를 설립하는데 동의했다고 발표하였다. 그는 상호 교류가 보다 빈번해지면 양국 수도 간 정기 항공편이 개설될 수도 있다는 암시를 주었다.

몽골 지도부에 의한 북한정부의 보다 깊은 참여는 일본만 고마워해야 할 일이 아니다. 동아시아의 모든 이웃국가들은 김정인에게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것 같으며, 따라서 건설적 참여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떠한 기회라도 고마워할 수 있다. 한국과 일본, 미국은 건설적 참여가 당장은 가능할 것 같지 않은 한 구석으로 다시 돌아가 버렸다. 러시아는 대체로 관심을 잃은 것 같으며, 중국은 북한의 터무니없는 행동에 때론 지친 것처럼 보여 왔다.

하지만 납치라는 중차대한 이슈에 대하여 몽골 지도부가 아마도 일본과 북한 간 직접 협상을 중개하는 것을 넘어서 어떠한 해결책을 만들어 낼 수 있을지는 전혀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몽골 커넥션이 일본과 북한 간의 참여를 증진할 것이라는 몇 가지 조짐이 보이고

있다. 현 주일 몽골대사 쿠렐바타르는 이전에 평양에 배치되었었다. 현 주몽골 일본대사 다케노리 시미즈는 울란바토르 대사관에 네 번째 배치되어 몽골을 매우 잘 알고 있으며 몽골정부 내에 훌륭한 연결을 갖고 있다. 또한, 도쿄 조총련(북한계열 재일거주민 총연합회) 본부 건물 경매의 응찰에서 몽골이 일본 정부의 바람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추측도 있다. 경매에서 몽골의 유한회사 아바르가 최고 응찰가를 제시했지만, 이 회사는 종이호랑이인 것으로 보인다.

몽골은 일본의 요청을 수용해왔으며, 엘벡도르지의 북한 방문은 몽골의 관점에서 볼 때 매우 전략적이다. 향후 수 주일 동안 몽골정부는 북한과의 협상에서 어떤 구체적인 움직임으로 향할 것인가를 보여주어야 하겠지만, 아베 총리가 이러한 몽골의 노력에 믿음을 주는 것은 올바른 선택인 것 같다.

* 이 글의 원본은(원제목: “Japan’s Mongolian Connection in North Korea”) *East Asia Forum*에 게재된 것으로, 제주평화연구원과 *East Asia Forum*과의 협약 하에 국문으로 번역하여 배포한다. 이 글에 포함된 의견은 저자 개인의 의견으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하다.

제3부

안보와 협력의 새로운 영역

- 사이버 시대의 국가 안보
 - 사이버 안보와 미중관계
- Sport and Corporate Diplomacy
- 사이버 안보 국제협력과 국가전략
 - 「DMZ세계평화공원」 추진방향





사이버 시대의 국가 안보



한인택

제주평화연구원

■ 사이버 시대에 맞는 안보인식의 필요성

북한의 ICBM급 장거리 미사일 발사 성공과 곧 있을 것으로 보이는 3차 핵실험을 앞두고 안보분야를 총괄조정하는 관제탑(control tower)으로써 국가안보실 설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가안보실 설치를 지지하는 견해는, 안보관련 제도와 조직의 편제 구조가 정부의 안보정책능력을 좌우한다는 전제 아래, 위기관리 능력의 향상, 그리고 나아가 중장기적인 안보전략의 준비를 위해서 안보관련 제도와 조직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전제와 주장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어느 분야가 되든 정부의 제도와

조직의 편제구조는 그 분야에서의 정부 정책능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안보실을 신설하는 형태가 되든지 기존의 외교안보수석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식이 되든지 간에 어떤 식으로라도 정부의 정책능력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제도와 조직을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제도와 조직의 개편 못지 않게 인식과 사고의 발전도 정부의 안보정책능력의 향상을 위해서 필요하다. 아무리 잘 짜인 제도와 조직이라도 인식하지 못하는 위협과 경험해 보지 않은 위기에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제도와 조직 개편의 논의 과정에서 인식과 사고의 발전을 언급하는 이유는, 현재의 논의가 주로 기존에 확인된 위협을 최소화하고, 과거 경험한 위기의 반복을 막으려는 강한 동기에서 진행되기 때문이다. 물론 북한의 핵무기, 장거리 미사일, 서울을 사정거리에 둔 장사정포는 당연히 안보에 위협이 된다. 또 천안함 침몰이나 연평도 포격은 명백히 중대한 안보위기를 낳았다. 하지만 이렇게 알려진 위협과 경험해 본 위기에 잘 대응하도록 개편되는 제도와 조직이 반드시 새로운 위협과 위기에 잘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기술관리를 비유로 들자면, 기존의 아날로그 기술을 잘 다루는 조직이 반드시 새로 등장하는 디지털 기술을 잘 다루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안보적 위협을 신속하게 인식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조직과 제도의 개편은 물론 기존의 안보개념으로부터 전향적으로 진화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안보 개념은 ‘단선적’이고 ‘물리

적'이다. 국경선, 휴전선, NLL 등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안'과 '밖'을 구분하고, 그 경계선을 강화하거나 물리적으로 침범되지 않게 하는데 주력하였다. 최근의 변화들은, 특히 국제화와 정보화의 진전은 경계선의 의미를 많이 퇴색시켰고, 사이버 공격이 물리적 타격 못지 않게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새로운 안보 개념은 이러한 경계의 약화나 비물리적 위협의 등장을 반영하여야 한다.

■ 최근의 사이버 공격사례

새로운 안보적 위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사이버 공격을 살펴보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 아래는 최근 들어 사이버 '피공격의 대상지'로서 그리고 사이버 '공격의 진원지'로서 급부상하고 있는 중동지역에서 발생한 사이버 공격의 주요사례들이다.

- Stuxnet 공격: 2010년 상반기에 처음으로 확인된 이란 Natanz 소재 우라늄 농축시설에 대한 악성코드 공격. 이 공격으로 이란이 갖고 있는 원심분리기 5,000개중 약 1,000개 정도가 파괴되었고, 이란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이 약 18개월에서 2년 정도 지연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Stuxnet 공격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합동 작전으로, 이로 인해 사이버 무기 사용에 대한 국제적 '금기'가 깨지게 되었다는 인식이 다수.
- Flame 공격: 2012년 5월 발견된 Flame은, 소리, 화면, 키보드 동작, 네트워크 활동, 나아가 블루투스가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의 경우 그 주변에 있는 블루투스 기기의 활동과 데이터까지도 탐지하는 종합적인 첩보 프로그램으로, 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투입은

- 이란에 대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합동작전으로 알려져 있음.
- Shamoon 공격: 2012년 8월에는 사우디 아라비아의 국영석유회사 Aramco와 카타르의 RasGas에 대한 바이러스 공격이 발생하여 수만 대 컴퓨터의 데이터가 파괴됨. 이란이나 이란의 비호를 받는 세력이 공격한 것으로 추정됨.
 - 아울러 최근 들어서는 미국의 금융기관과 언론사, Google에 대한 증동발 사이버 공격도 증가하고 있음.

이제 사이버 공격은 통상적인 군사공격이나 테러공격과 함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새로운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이버 무기는 그 특성상 사용이 특정 지역에 제한되지 않고, 대상에 있어서도 전후방의 구분이 없으며 군과 민간도 잘 구분하지 않는다. 더욱이 사이버 무기는 은밀하게 이전도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 정책적 시사점

새로운 기술의 등장은 새로운 안보적 위협과 문제, 그리고 기회를 낳고 국제관계의 성격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러한 기술의 예로서, 핵미사일이나 인공위성, 최근에 들어서는 무인비행기 드론과 사이버 무기를 들 수 있다. 사이버 시대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사이버 안보전략을 미리 수립해 놓을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새로운 기술이 주는 안보적 위협과 기회를 예측하기란 쉽지 않다는 데에 안보당국의 고민이 있다. 이러한 면에서 앞에서 살펴본 최근 사이버 공격의 사례들은 우리의 사이버 안보전

략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준거점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다른 나라보다도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의존도가 높아서 사이버 공격에 특별히 취약하다. 만약 일부의 견해처럼 북한과 이란 간에 군사협력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중동에서 발생한 사이버 공격이 한반도에서도 재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사이버 안전전략의 수립이 그 어느 나라보다도 시급하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될 안보 제도와 조직의 편제 개편은 전통적 안보뿐만 아니라 사이버 안보도 증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새로이 등장하는 안보 위협을 신속히 인식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안보를 담당하는 기구는 무엇보다도 “학습하는 조직(learning organization)” 일 필요가 있다.

사이버 시대의 안보 위협과 기회에 대처해야 하는 것은 단지 우리나라의 과제만은 아니다. 대개의 나라들이 최근에는 사이버 안보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으며, 국제적으로도 사이버 공간의 평화적 사용이나 사이버 분쟁의 평화적 해결 등에 관한 규범이 아직 발달하지 못한 상태이다. 우리나라는 2013년 제3차 사이버 스페이스 총회의 개최국으로서 사이버 공간에 관련된 국제적 규범을 창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사이버 스페이스 총회에서 참가국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허용되는 정당방위는 무엇이고, 사이버 무기의 군축을 위한 원칙과 절차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견해를 교환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면 우리의 안보증진뿐만 아니라 국제적 위상도 높아질 것이다.



사이버 안보와 미중관계



장노순

한라대학교

국제안보구조는 패권국과 도전국의 관계가 발전하는 과정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패권적 질서를 담당하는 국가가 도전국가의 부상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기존의 패권국과 도전국의 관계가 전쟁을 통해 재조정되는 경우가 패권전쟁이고, 미소 냉전은 다른 형태의 패권경쟁 구도였다. 미소 냉전은 과거와 같은 강대국간 직접적인 무력충돌을 피하였고 경제협력도 미미했던 장기적인 평화체제 기간이었다. 핵무기는 미국과 소련의 두 초강대국이 전쟁을 통해 우위를 가르기에는 공멸의 결과를 초래하는 파괴력 때문에 냉전체제의 핵심적 요소였다.

소련 해체이후 중국은 미국의 위상에 가장 빠르게 위협하고 있는 도전국이다. 중국은 경제 규모면에서 근접하고 있다지만 미국의 국제 경제 지배력에 아직은 밀리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국내외 경제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만큼 중국의 위상이 높다. 이 때문에 미국과 중국은 경제적 협력이 서로의 이익을 높인다는 점에서 갈등적인 대결보다는 협력을 선호하고 있다. 그렇지만 중국은 미국의 기술력을 따라잡기 위한 격차 줄이기 전략이 필요하다. 군사력도 중국이 미국에 비해 한참 열세이다. 중국은 국제규범을 지키고 미국과 공정한 경쟁을 통해 미국의 국력과 세력 균형을 이루기 어렵다. 규칙도 없는 게임에서 반칙은 어찌면 당연하다. 사이버 공간이라는 제대로 된 규칙이 없는 영역에서 미국과 중국은 양국의 세력판도를 조정할 기선을 잡기 위한 적극적인 탐색전에 돌입했다. 이런 미국과 중국의 위상과 전략적 목표가 다른 상황에서 양국은 초강대국 관계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핵테러의 위협을 제외하면, 사이버 공격은 미국이 가장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위협이다. 그 중에서도 오바마 행정부는 중국의 사이버 위협이 전략적 인내심의 한계를 넘어섰다고 여긴 듯하다. 미국은 지금까지 중국의 사이버 위협을 양국의 외교적 현안이 아닌 비공식적으로 조용하게 다루어왔다. 중국은 미국에 비해 열세에 놓인 산업기술, 통상전략, 무기체계 등 기밀을 사이버 스파이를 통해 수집할 필요성이 강했고, 그런 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였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처음으로 사이버 안보가 의제로 설정될 만큼 미국의 위기의식은 컸지만, 미국과 중국은 사이버 공격세력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크게 좁히지 못했다. 결론은 예상했던 수순을 밟았다.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의 사이버 위협이 미중관계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시진핑 주석을 강하게 압박했다. 반면에 중국은 사이버 공격으로 중국도 피해자라는 주장을 되풀이 했다.

미중관계에서 사이버 안보는 어떤 전략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일까? 첫째, 중국과 미국의 사이버 전략을 통제할 수 있는 국제규범이 없다. 두 초강대국은 사이버 공간을 규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제도나 레짐을 공식 혹은 비공식으로 합의한 과정이 없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사이버 공간을 윤곽이 불분명한 영역이라고 언급하였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위협은 전통적인 안보 수단이나 위협의 수준과 전혀 다르다. 전통적인 무력공격이나 무기에 관한 국제규범들은 국가의 행위를 제어하고 통제하는 일정 역할을 하고 있다. 과거 미국과 소련은 국제안보구조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런 국제법과 레짐을 조성하려고 꾸준히 노력했다. 사이버 위협은 사이버범죄 혹은 사이버테러 수준을 넘어서 적대 국가가 상대국의 국익과 안보에 치명적인 피해를 가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른 것이다. 미국과 중국은 새로운 안보 영역에서 상대방의 위협을 억제하거나 안보 공조의 틀을 자국에 유리하도록 제도화하는 작업을 시작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

둘째, 사이버 안보는 전통적 군사안보와 비군사적 안보의 성격을 모두 지닌 복합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사이버무기는 핵무기 혹은 미사일처럼 군사적 목적의 수단이 되지만, 경제적 혹은 정치적 수단으

로 활용될 수 있다. 미국의 한 공식 보고서는 중국이 미국에서 2,000억 달러 이상의 지적재산권 정보를 매년 절취하고 있고, 이는 20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빼앗아가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또 다른 보고서는 지난 수년간 중국은 미국의 최첨단 군사기술을 훔쳤고, 결과적으로 수천억 달러의 비용이 소요된 미국 무기체계의 허점이 드러나고 중국의 개량된 대응무기체계가 구축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때문에 역사상 최대의 부 이동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미국이 유지하고 있는 경제의 창의성과 경제력의 규모는 국부의 근간이다. 따라서 미국은 사이버 공격으로 유출되고 있는 기밀이 중국의 군사 및 경제적 경쟁력을 매우 빠르게 신장시키고 있고, 이런 정도의 위협이 계속된다면 군사적 우위와 경제적 지배력이 급격하게 약화될 것을 우려한다. 미국이 미중 정상회담의 최우선적 의제로 사이버 안보를 설정했던 것은 그 만큼 중국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미국의 심각성을 반영하고 있다.

셋째, 사이버 위협 혹은 사이버 공격은 전략적 의미가 다른 유형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사이버 전복, 사이버 스파이, 사이버전은 성격과 전략적 목적이 다르다. 사이버 전복은 상대방 정부의 정당성과 통치를 약화시키기 위한 사이버 공격이다. 사이버 스파이는 상대방의 기밀을 절취하는 것이 목적이고, 사이버전은 상대방의 시설을 파괴하려는 사이버 공격이다. 국가기간 시설에 대한 파괴를 목적으로 사이버 무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군사공격과 유사한 파괴력과 인명피해를 예상할 수 있다. 반면에 사이버 스파이는 군사 혹은 산업 기밀을 은밀하게 절취하는 사이버 공격으로 피해가 직접적인 시설과

괴와 인명 살상의 가능성과는 거리가 멀다. 사이버 안보에 대한 중국과 미국의 입장은 사이버 공격의 유형에서 다르다. 미국은 최강의 사이버전 공격력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사이버전 공격력은 효과적인 사이버 방어를 보장해 주지 못한다. 미국이 중국의 해킹 시도를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이유이다. 아무리 미국의 사이버 무기가 위력적이라고 하더라도 중국의 해킹을 무력화하는데 아직은 제한적 효과만을 기대할 수 있다. 중국이 사이버 안보의 국제규범을 발전시키는데 협조하고 준수하도록 전략적인 유인이 필요하다.

넷째, 사이버 안보는 전통적인 안보와 달리 국가의 통제가 훨씬 느슨하다. 다양한 행위자가 사이버 공격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전통적인 안보위협은 국가가 중심 위치에 있다. 국가처럼 초국가적 행위자들은 국제안보를 위협하는 수단을 갖게 되었고, 그 대표적인 방식이 사이버 공격이다. 에스토니아와 조지아의 사이버 공격에서 잘 드러났듯이, 러시아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는 해커조직들이 공격을 주도했다. 초국가적 행위자들의 사이버 공격은 상대국가의 안보만을 위협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은 초국가적 행위자들의 사이버 위협이 양날의 칼이 될 수 있음을 지적했던 것이다. 이들은 자국 정부를 정치적 목적으로 공격할 수 있고, 범죄 목적에서도 사이버 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이 중국발 사이버 공격을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한 이유는 중국인민해방군이 배후 세력이라는 여러 정황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 차원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사이버 스파이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혐의는 중국 정부의 사이버 전략을 통제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없

다고 미국이 판단한 것이다. 미국에서는 금년에 인터넷보안업체, 국방부, 정보기관, 의회, 민간 진상조사위원회 등 여러 기관들이 중국에서 시작된 사이버 공격의 주체, 공격 방식, 피해 등을 광범위하게 조사한 보고서를 공개함으로써 사이버 위협에 대한 미국 정부의 심각성을 중국에게 공개적으로 신호를 보냈다.

미국과 중국은 사이버 안보를 두고 어떤 전략을 펼쳐나갈까? 사이버 균형(cyber balance)을 이루고 싶은 중국과 사이버 우위(cyber primacy)를 유지하려는 미국은 사이버 공간에 대한 통제 레짐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를 두고 본격적인 줄다리기를 시작했다. 새로운 안보 수단의 등장은 국제안보질서의 구조에 충격을 가하기 때문에 기존 질서의 안정성을 원하는 국가들은 제도를 통해 여파를 최소화하고자 한다. 이런 관점에서 비대칭적 위협에 처한 미국은 중국의 사이버 위협을 제어하기 위해 세 가지 방식의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첫째, 미중 양자 협상 방식이다. 미국은 지난 해 중국 정부 대표들과의 접촉에서 중국의 해킹에 대한 중국 내의 규제와 통제를 요구하였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이를 공개적으로 압박하겠다는 미국의 전략 변화가 가시화된 것이다. 물론 미국은 중국의 해킹으로 엄청난 군사적, 경제적 손실의 피해를 입고 있고, 오바마 행정부의 내부 분위기를 반영하는 보고서가 최근 계속해서 공개되고 있다. 특히 금년 초 Mandiant 보고서가 중국인민해방군(61398부대)의 배후를 명확하게 적시한 이후, 해킹 활동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가 최근 재개되었다. 시진핑 주석은 오바마 대통령의 압박에도 일단은 정부 차원의 책임을 부인했다. 다만 미중은 사이버 안보 공조를 합의

했고, 중국은 정상회담 이전에 사이버 안보 실무그룹을 신설하기로 함으로써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었다.

둘째, 미국의 사이버 안보전략 강화이다. 미국의 사이버 안보전략은 효과적인 방어와 억지전략을 마련하는 것이다. 재래식 군사충돌이나 핵공격은 미국의 압도적인 전력 우위로 억지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사이버 억지전략의 효과는 핵억지력 만큼 보증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사이버 억지전략의 일환으로 사이버 공격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과 사이버 부대의 활동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2년 ‘대통령정책지침’을 통해 안보관련 부서를 갖추고 미국의 국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이버 선제공격의 전략과 전력을 갖추도록 지시하였다. 공격용 사이버 무기개발과 전략은 군사작전을 지원하는 역할도 하겠지만, 사이버 해킹과 기밀 수집 활동에 대해서도 적용하겠다는 의지와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미국의 사이버 사령부는 사이버 활동 범위를 군사 영역의 범위를 벗어나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 이는 중국을 포함해서 잠재적인 사이버 공격자들에 대한 억지효과를 기대하고, 나아가서 실질적인 효과를 얻기 위한 전략이기도 하다. 미국의 사이버 전략, 공격력 수준, 사이버 무기 등에 관한 정보가 아직 충분치 않기 때문에 억지전략의 실질적인 효과를 가늠하기 어렵다.

셋째, 국제적인 사이버 안보 통제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국제사회는 10여 년 전부터 사이버 위협에 공동대처하려고 시도하고 있고, 미국은 사이버 안보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중국은 참여하지 않지만 80개국 이상이 참여하고 있는 부다페스트협약(Budapest Convention on Cybercrime)이나 서구와 비서구 국가사이에 국제규범의 방향을 둘러싸고 입장 차이가 드러난 사이버스페이스총회(Conference on Cyberspace)에서 미국은 자국의 의중을 관철하기 위한 세규합에 열중하고 있다. 군사안보 수준에서 사이버 위협에 맞서려는 다자간 제도화는 아니지만, 치안과 범죄 수준의 사이버 공격을 통제하려는 국제협약은 미국 정부와 기업이 추진하고자 하는 전략적 목표와 부합한다. 미국은 사이버 무기개발과 공격력을 강화하려는 사이버 무기경쟁을 통제하려는 의도이기보다는 자국의 사이버 공간과 기간시설을 보호하는데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사이버 위협을 포함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다른 국제범죄를 규제하려는 접근방식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다. 중국은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및 주요 국가들이 참여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처하려는 제도적 장치를 논의하는 것에 동의했다. 사이버 위협을 통제하려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직접 참여하려는 태도 변화의 조짐이 있다.

미국과 중국은 양극체제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 두 강대국은 패권전쟁과 냉전이 아닌 복합적인 상호의존성 속에서 협력과 경쟁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였다. 사이버 안보는 미중 양극체제의 신모델이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 보여줄 최적의 이슈이다. 국가 차원의 사이버 공격력을 강화하려는 양국의 전략은 단기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오르기 어렵다. 미소 양국은 핵개발 초기 단계에서 핵감축과 통제를 협상하지 않는 이유와 마찬가지로. 그러나 사

이러한 사이버 위협은 인터넷 의존도가 높은 국가에게 비대칭적 취약성이 높다. 이런 사이버 위협의 억지는 미국의 외교 공세의 목표이고, 중국도 장기적으로 타협점을 모색할 것이다. 문제는 미중의 갈등과 대립으로 한반도가 분화구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사이버 공간의 분쟁 영역에 한국을 끌어들이고 있다. 중국을 통제하려는 국제 규범은 자칫 한국의 사이버 방어력을 미국에 대한 의존성을 심화시키는 계기가 될까 우려되는 시점이다.



Sport and Corporate Diplomacy



Steven J. JACKSON

University of Otago

Although some traditionalists continue to argue that sport should be apolitical the reality is that it has always been a tool through which power has been negotiated both within and between nations. Indeed, throughout history, sport has served as a strategic vehicle to demonstrate the ideological, political and military superiority of one nation over another. Today, sport occupies a unique position within nation-states - beyond serving as a symbol of nationalism, it is also linked to: the promotion of health, community development, and as a key economic driver through tourism. With respect to the latter, nations continue to invest enormous funding and resources in order to secure hosting rights of sport mega-events such as the Olympics and FIFA World Cup. These events not only have the potential to attract tourists

but the associated global media coverage provides a platform through which to reach large segments of the world's population along with potential business investors. Today, international sport organisations such as the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IOC) and Fédération Internationale de Football Association (FIFA) occupy strategic positions as global arbiters between governments, major media corporations and corporate sponsors. Thus, it should come as no surprise that sport features prominently in contemporary international relations not only with respect to peace keeping and cultural understanding but in relation to what Jackson (2013) calls 'corporate diplomacy'. The concept of 'corporate diplomacy' recognises a major transformational shift from state diplomacy to new economically-driven forms of diplomacy operating under the guise of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trade agreements. So, what is 'corporate diplomacy'? While there are no doubt others, three basic forms of 'sport-related' corporate diplomacy have been identified: (1) Global Sport Organisations and Sport Mega-events (2) Sport Industry and (3) Sport Celebrities. Each of these is briefly discussed in turn.

Sport mega-events such as the Olympics or FIFA World Cup provide valuable insights into nature and power of 'corporate diplomacy'. Both bidding for, and hosting, the Olympics or World Cup are expensive. Citizens are told of the huge economic impact of the event emerging from tourism and trade opportunities, the "legacy" of new infrastructure development, and the unrivalled global media coverage which will maximise 'nation brand' exposure. Yet, despite all the claims the evidence of tangible benefits and how they will improve the lives of

everyone are conspicuously absent. The compliance regulations and costs established by the IOC and FIFA are a challenge to all nations who host such sport mega-events. There is perhaps no better example of this than the forthcoming 2014 FIFA World Cup in Brazil. We are already witnessing one aspect of ‘corporate diplomacy’ with respect to the relocation of poor people from their homes (favelas) in an effort to create ‘clean’ spaces that not only provide an idealised image of Brazil but also FIFA and its corporate sponsors. But FIFA’s ‘corporate diplomacy’ extends much further. In order to protect the commercial interests and rights of one of its major World Cup Sponsors, American beer company Budweiser, FIFA forced Brazil to make a change in their laws that prohibited the sale of alcohol in sports stadiums since 2003. According to FIFA General Secretary, Jerome Valcke: “Alcoholic drinks are part of the FIFA World Cup, so we’re going to have them. Excuse me if I sound a bit arrogant but that’s something we won’t negotiate. The fact that we have the right to sell beer has to be part of the law” (‘Beer “must be sold” at Brazil World Cup, says Fifa’, January 19, 2012). This demonstrates the power of an international sport organisation to literally dictate the laws of nations – laws which have presumably been developed with careful consideration, over time and in the interests of citizens.

With respect to the second form of corporate diplomacy, the ‘Sport Industry’, we need look no further than Nike, Adidas, Reebok and other global sportswear manufacturers whose production factories are located in developing nations – a source of cheap labour. There is a lot at stake for these transnational corporations who are constantly seeking

new markets and play a central role in lobbying for the inclusion/exclusion of particular sports. New sports offer new opportunities not only for sponsorship but the sale of sports equipment and fashion. For example, the introduction of Rugby Sevens at the 2016 Rio Olympics is already raising the profile of the sport, influencing sport policy in many nations and also attracting interest by corporate sponsors. Notably, while transnational corporations such as Nike are regularly critiqued for a range of reasons, including the exploitation of child labour, they have strategically responded by developing public relations campaigns, including a wide range of ‘corporate responsibility’ initiatives. These serve to highlight the positive contributions of the company while masking a wide range of questionable industrial practices which may be causing harm.

Finally, in relation to Sport Celebrities and Corporate Diplomacy consider former NBA star Dennis Rodman’s 2013 trip to North Korea. While we can only speculate, there are at least two motivations for such an initiative. From the perspective of North Korea it was an opportunity to show North Koreans how international celebrities pay homage to Kim Jong-un, while also appealing to his fascination with basketball. From the perspective of Dennis Rodman, it was an opportunity for him to promote a new American television series Vice which is described as “a variety of mind-melting stories from around the globe and immersive detours into the scariest, most absurd, and flat-out unbelievable cultures and situations around the globe” (www.vice.com) along with his own personal business interests.

Rodman's 'diplomatic mission' was not sanctioned by the USA government which has its own sport-related initiatives. For example, the US State Department has developed Sports United which advances the United States' foreign policy goals by engaging with people from around the world. However, we cannot overlook the fact that this initiative is sponsored by corporations who are no doubt seeking to forge important business links.

Corporate diplomacy signals a major change in the nature of diplomatic relations. Within the context of sport - international sport organisations such as the IOC and FIFA are now strategically positioned to serve as the key intermediaries who negotiate between nation-states and transnational corporations raising serious questions about the implications of non transparent, non-democratically elected organisations holding so much power.



사이버 안보 국제협력과 국가전략



김소정

ETRI 부설연구소

지난 3월 20일 사이버테러 공격에 이어 6월 25일 한국이 또 다시 사이버 공격을 받았고, 이는 공격 주체가 국가인 사이버 안보 위기 발생 시 국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체계가 없음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 정부는 지난 공격의 배후를 지목했으나, 공격행위에 대한 처벌이나 제재에 대해 논할 수 있는 국제적 논의의 장은 없었다. 또한 특정 국가가 공격을 주도했음을 입증하는 증거를 갖고 있더라도 규탄, 제재, 처벌 등이 불가능했기에 에스토니아 사태 이후 지속적으로 유사한 악의적 행위들이 반복되고 있다.

국제사회는 국가가 주도한 사이버 공격 행위를 어떻게 규제 및 저지

할 것인지에 대한 국제적 규범을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정립하고자 치열히 경쟁하고 있다. 그간 미국과 영국으로 대표되는 서방측과 중국과 러시아로 대표되는 非서방측은 인터넷 공간을 규율하는 규범 및 원칙 설립에 큰 이견을 보여 왔었다. 우선 서방측의 주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이버 공간과 인터넷 표현의 자유, 개방, 신뢰 등 기본 원칙이 존중되어야 한다. 둘째, 사이버 공간을 사용하고 있는 개인, 산업계, 시민사회 및 정부기관 등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견이 수렴된 국제적 규범을 제정해야 한다. 셋째, 기존의 국제법이 인터넷 및 사이버 공간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므로 유엔헌장 등이 사이버 공간을 규율하는 국제규범의 모태가 되어야 한다. 넷째, 상호간 사이버 공간상의 위협 요소 감축 및 신뢰 증진을 위한 사이버 공간에 적용 가능한 신뢰구축조치(CBMs: Confidence Building Measures)의 이행이 필요하다.

이러한 논의의 이면에는 중국 및 러시아 등이 언론의 자유 통제 등에 인터넷을 이용하는 등 국내 정치의 안전성 확보에 사이버 공간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숨겨진 의도가 있다.

이에 대립하는 중국 및 러시아 등 非서방국가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이버 공간에서도 국가주권은 인정되며 필요시 정보통제가

가능한 공간이다. 둘째, 기존의 인터넷 체계를 구성하고 주도해 온 서방측의 의도대로 인터넷과 사이버 공간을 규율하는 체제를 수용할 수 없다. 셋째, 신뢰구축조치 발굴이나 이행보다는 국가의 인터넷 통제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 국제정보보안 행동수칙에 대한 합의가 시급하다. 즉, 사이버 공간에 대한 기존 서방측의 기득권을 어느 정도 제한하는 동시에 비서방국가들의 의도가 반영될 수 있는 사이버 공간상의 새로운 세계질서 구축을 원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양측의 견해 차이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고 신뢰가 능한 사이버 공간 질서확립이 더욱 중요하다는 기본원칙을 염두에 두고 상호간의 이견 차이를 좁히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왔다. 이에 주요국들은 사이버 안보 확립을 위한 협력을 양자 간 협력, 지역 안보기구를 통한 협력, 다자간 협력 등 3분야로 나누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첫째, 양자 간 협력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미국은 러시아와 사이버 안보 확립을 위한 사이버 핫라인 개설 등을 협의한 사이버 안보 상호협정을 체결했으며, 일본과는 지난 5월 “미-일 사이버 안보 대화”를 하고 “미-일 사이버 안보 대화에 따른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중국과는 시진핑 국가주석과 오바마 대통령간 정상회담 주요 주제로 사이버 안보가 다루어졌으며 최근 불거진 스노든 사태에도 불구하고 상호 지속적인 협력을 계속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미국은 영국, EU, 호주 등 주요 우방국들과도 양자 간 사이버 안보 협력 체계를 구축했으며 영국도 일본과 사이버 안보 협력 체계 구축에 나

서고 있다.

우방국들 간 양자 간 협력체계 구축으로 전세계 차원의 협력에 대비해 공통의 가치를 추구하는 국가의 수를 늘렸다. 또한 IT수준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국가들인 주요 서방선진국들간 협력이 구체화됨으로써 IT인프라에 기반한 과학기술정책 추진 및 안보정책 추진에 있어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선진국들간 협력체계 우선 구축은 정보통신기술 의존도가 높은 저개발국가 및 개발도상국가들에게 큰 의미를 부여한다. 서방 선진국들 대부분은 IT인프라 구축 및 인터넷 활용에 있어서 우수한 국가들이며 동시에 관련 기술, 제품 및 서비스 면에서도 최첨단의 국가들이다. 결국 이들 간 협력과 결속이 강화되면 향후 도래할 미래인터넷 서비스와 관련된 기술 및 정책이 이들에 의해 결정될 것이고 저개발국가 및 개발도상국가들의 발전은 IT 선진국들의 과학기술정책 및 전략에 구속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된다.

특히 최근 G20 등 주요 국제회의마다 역량강화(CB: Capacity Building)를 모토로 저개발국가 및 개발도상국 IT수준 향상과 보안을 고려한 IT인프라 구축을 유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 커진다. 일각에서는 역량강화 노력이 겉으로는 저개발국가와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듯 보이나 결국 IT 강국들의 제품과 서비스, 정책과 법제도 등을 모두 일괄적으로 수출하기 위한 시장 확보의 일환이 아니냐는 부정적 시각도 있다.

두번째 형태의 협력은 지역안보기구를 통한 협력체계 구축이다.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와 아세안지역포럼(ARF: ASEAN Regional Forum)의 활동이 여기에 해당된다. OSCE는 사이버 안보 확립을 위한 신뢰구축조치 확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물론 군축과 사이버 안보는 본질적인 측면에서 다르기 때문에 일방적인 군축 개념을 사이버 안보분야에 적용시키기 어렵다는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특히 핵무기 등 전통적 안보개념에서는 억지력 확보 및 신뢰구축조치 향상으로 인한 예측성 강화가 결정적인 요소였으나 인터넷과 사이버 분야의 특성상 억지력 확보와 예측성 강화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시각이다.

하지만 결국 사이버 안보 확보를 위해서도 국제적 수준의 안보차원에서 사이버를 활용한 안보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일정 수준까지의 예측성 강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신뢰구축조치 확보 및 투명성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최근 OSCE는 사이버 안보분야 CBMs 확보를 위한 작업반을 구축하여 연내 혹은 내년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OSCE가 유럽 중심의 활동이라면 ARF는 아태지역 중심으로 CBMs 확보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의 활동을 펼쳐왔다.

세번째 형태의 협력은 정부 간 국제기구를 통한 협력체계 구축이다. 국제연합(UN) 군축 및 국제안보위원회(Disarmament and International Security Committee)의 활동이 여기에 해당한다. 동 위원

회는 UN 총회의 6대 위원회 중 하나로 핵확산 방지 문제, 대량살상 무기 문제, 우주공간 군축(disarmament of outer space) 문제 등을 다루면서 국제안보 및 평화 증진에 기여해 왔다.

군축 및 국제안보 위원회에서 사이버 안보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진 것은 1998년 러시아가 “Developments in the field of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s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security” 라는 결의안을 UN에 제출하고 이를 총회에서 채택한 후이다. 동 결의안에 대해 미국은 처음부터 동조하지 않았고, 이후로도 소극적으로 사이버 안보 관련 국제협력에 대응해 왔다. 이후 동 위원회는 국제안보 차원에서의 사이버 안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2004년부터 “국제안보 맥락에서의 IT 분야 개발에 관한 UN 정부전문가그룹(Group of Government Experts on Developments in the Field of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s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Security)” 회의를 지속해왔고 현재 3차 전문가그룹회의 까지 진행되었다.

우리나라는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GGE 활동에 참여해 왔다. 기존 회의에서는 인터넷의 국가통제를 강조하는 중국과 이에 반대하는 미국 간에 극명히 대립했었으나, 지난 6월 개최된 회의에서는 러시아를 포함한 전체 참여국들이 온라인상에서도 기존의 국제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 합의하고 이러한 규범이 국가의 행위와 국가 주도의 정보통신기술 사용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연구하기로 하였다. 또한 회원국들은 정보통신기술을 이

용한 범죄 행위 및 테러행위를 근절하고 프록시를 이용한 악의적 행위에 자국 정보통신기술이 이용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기로 했다. 동시에 민간영역과 시민사회도 정보통신기술의 적절한 사용과 보안 향상을 위해 적절한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인식하고 신뢰구축 조치 확보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각국의 노력도 촉구했다. 상호간의 의견차이를 극복하고 기존의 국제법이 인터넷과 온라인에도 적용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최근 UN GGE 결과는 향후 구성될 인터넷의 미래와 사이버 안보 정책에 큰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을 10월 17~18일 한국에서 서울 사이버스페이스 총회(Seoul Conference on Cyberspace 2013)가 개최된다. 사이버스페이스 총회는 1차 런던(2011), 2차 부다페스트(2012)에 이은 제3차 회의로 사이버 공간상의 신뢰구축을 기반으로 글로벌 인터넷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번영을 위하여 사이버 안보에 대한 국제적 협력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서울 총회에서는 △ 경제성장 및 복지, △ 사회·문화적 혜택, △ 사이버 보안, △ 국제안보, △ 사이버 범죄, △ 역량개발 등 6개 분야에 대한 토론과 그 결과를 담은 결과문서가 발표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6개 소의제 중 사이버 안보 관련 국외 동향 및 이에 대처하는 각국의 입장은 국제안보 분야에서 다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안보 분야 논의를 통해 각국은 UN GGE 회의결과를 반영한 새로운 사이버 공간 규범을 재구성하고 자국의 국가전략에 알맞은 형태의 사이버 공간을 구성하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러한 국제안보 환경에 대해 우리나라는 사이버 안보 문제를 어떤 입장에서 다루어야 할지에 대해 명확히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다. 기존에 수립되었던 국가사이버 안보마스터플랜 및 테러 발생 시 수립된 종합대책은 국가차원의 사이버 안보전략으로 보기에는 어렵다. 향후 우리나라가 사이버 안보 확립을 통해 얻고자 하는 목표와 이를 어떻게 얻어갈 것인지, 국내 체계와 국제 협력 방향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를 위해 정부, 산업계, 국민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지 등에 대해 협의하고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정보통신기술과 인터넷 경제의 발전 측면에서 선도국의 위상을 인정받고 있으며 IT 문제에 있어 상당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나라이다. 긍정적 영향력과 부정적 피해를 모두 크게 경험했기에 전세계 사이버 공간에 기반한 미래 구상에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 사이버스페이스 총회를 계기로 우리의 위치를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실질적 결과를 도출하고 해결이 가능한 방법론을 모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DMZ세계평화공원」 추진방향



손기웅

통일연구원/한국DMZ학회

■ DMZ 평화적 이용의 의미

DMZ는 6·25전쟁 기간 피아가 가장 치열하게 전투를 벌려 당시에 초토화되었던 지역이다. 그러나 이후 60여 년간 인간의 침입이 제한되면서 인위적으로 훼손되었던 생태계가 지금은 스스로 회복하여 다양한 특성을 지닌 생태계로 전변되었다. 전쟁 이후 남북이 대치하는 과정에서 군사적 요구에 의해 부분적으로 손상된 부분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DMZ는 희귀 동·식물과 어류가 서식하고 조류가 도래하는 자연생태계의 보고라 할 수 있으며, 수질, 대기, 토지의 오염이 없는 청정지역이다.

한편 DMZ는 그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교류·협력의 피할 수 없는 접점이자 통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DMZ는 남북한의 정치·군사적 이해가 마주치는 곳일 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문화 나아가 환경 등 쌍방의 모든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지역으로서 그 동안 서로의 이해가 대립하여 교류·협력사업에 활용될 수 없었던 것 또한 현실이었다. 다만 철도·도로 연결 시 제한적인 협력이 이루어졌고,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위한 통과지로서 활용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한이 DMZ를 평화적으로 이용하는데 합의한다는 사실은 바로 서로가 정치·군사·경제·사회·문화·환경 등 포괄적 측면에서 협력관계를 형성하여, 남북관계를 평화공존의 단계로 전이케 하는 결정적인 디딤돌을 마련함을 의미한다.

■ 「DMZ세계평화공원」의 의의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 5월 8일 미국 의회에서 천명한 「DMZ세계 평화공원」의 구상은 바로 이러한 DMZ 평화적 이용의 의미를 천착한 바탕 위에 제안되었다. 「DMZ세계평화공원」에서 ‘평화’의 개념은 인간과 인간 간의 평화, 인간과 자연환경 간의 평화를 포괄적으로 의미한다. 한 때 치열하게 싸웠던 국가·국민들은 물론, 평화를 염원하는 모든 세계인들이 화합하고 교류하는 무대, 인간에 의해 초토화되었으나 자연 스스로의 치유력으로 회복하여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하는 이 지역을 이제 인간과 자연환경이 함께 공존하는 생명의 공간으로 만들고자 한다.

DMZ 내 「DMZ세계평화공원」 조성을 통해 DMZ를 전쟁을 도발하는 장소가 아니라 전쟁을 고발하고 반성하는 장소, 남북이 대립하고 갈등하는 장소가 아니라 화해하고 협력하여 하나가 되는 장소, 국제적 대결의 장소가 아니라 국제적 화해와 협력의 지역으로 변화시키고자 한다. 나아가 인간에 의해 파괴되었으나 스스로 회복한 자연과 생태계가 잘 보전될 수 있도록, 인간과 자연환경도 화해·협력할 수 있는 장소로 가꾸고자 한다.

즉, 「DMZ세계평화공원」은 평화에 대한 적극적 의지의 표현이다. 대립과 갈등의 공간인 바로 그 DMZ를 신뢰와 협력의 공간화 하겠다는 결단의 표명이다. 갈등과 대립의 상징지역인 DMZ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남북 간 평화적 이용에 대한 합의 없이는 어떠한 남북 간 약속과 협력사업도 정치·군사적 상황 전개에 따라 사상누각(砂上樓閣)이 될 수 있으며, 그 상징적 예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이다.

한편 「DMZ세계평화공원」 구상은 경색된 남북관계를 뚫으려는 동력이자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구체적 실천전략이다.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 개성공단 폐쇄위협은 모두 갈등과 대립의 상징인 DMZ와 연계선 상에 놓인 사안이다.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은 바다의 DMZ라 할 NLL의 인근에서, 개성공단은 DMZ와 맞닿은 북쪽 접경지역에서 발생하였다.

북한이 현 상황에서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 개성공단 폐쇄위협을 사과할 리 없고, 그렇다고 우리가 물러설 수 없고 물러서서도 안 된다.

참여한 평행선이 지속될 여기서 돌파구를 찾을 수 없다면, 우회로를 DMZ 내에서 찾을 수 있다. 남북한이 협의를 통해 “비록 해상에서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겨져 있고, 개성공단에 대한 입장의 차이도 있지만, 남북한은 한반도에서 새로운 남북관계의 형성을 위해 쌍방의 모든 이해관계가 참여하게 얽혀있는 점점이자 대결선인 DMZ 내의 일부 제한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DMZ세계평화공원』 조성에 합의하고 추진하기로 했다”고 남북한이 공동성명을 발표한다면, 쌍방이 대립 속에서도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명분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의 정상화는 물론, DMZ·접경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경협모델(예: 남쪽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남북 산업단지 조성) 창출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현 단계 남북관계의 가장 큰 화두는 북핵문제의 해결이지만, 북핵문제 해결은 장기적 과정을 거칠 것으로 판단된다. 핵문제 해결의 과정에서 남북한이 상호 신뢰를 회복하고 평화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전략으로서 『DMZ 세계평화공원』이 중심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것이다.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총서 28

2013 동아시아
평화와 협력을 위한 대화

PeaceNet
Series



제4부

변화속의 세계정치

- Russian–Chinese Political Relations: General Overview
 - 시리아 사태와 중견국가 한국의 전략
 - 이란 신정부의 과제와 전망
- Korea–Middle East Cooperation: Comprehensive Partnership towards a New Horizon
 - 한중동 협력: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포괄적 파트너십
 - 이란 핵 협상 타결과 전망
 - 미중 ‘신형 대국관계’로 가는 길
 - 한·중관계의 미래





Russian–Chinese Political Relations: General Overview



Vladimir PARAMONOV & Aleksey STROKOV
Central Eurasia Analytic Group

The political relationship between Russia and China in the post-Soviet period has thawed and shows signs of increased momentum. In the early 1990s, the relationship was still lukewarm; however, it improved markedly in 1996 and received a substantial boost in 2000 with the election of Vladimir Putin.

Early 1990s

In the early 1990s, a new relationship between Russia and China slowly developed. The new political elite in Russia came to power in 1991 and was headed by Boris Yeltsin; however, it made very little headway in any aspect of foreign policy, the relationship with China was no

exception. Russia's main interest was a closer integration with the West. There was also some uncertainty in China about their relations with Russia, after the sudden and largely unexpected collapse of the Soviet system.

The developmen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during this period was limited to the issuing of joint declarations such as “the need to expand areas of mutually-advantageous cooperation”. At the end of President Yeltsin's visit to China in 1992, a joint declaration was issued to express the intention of both sides to develop bilateral relations as “relations between friendly countries”. A return visit to Russia by Chinese leader Jiang Zemin in 1994 saw another joint declaration issued to confirm the successful development of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now described as a “constructive partnership.”

Mid to late 1990s

Russia re-defined its foreign policy priorities in the mid-1990s based on the “construction of a multipolar system of international relations”; subsequently, political interaction with China was enhanced considerably because this concept coincided with the Chinese leadership's own strategic interests and worldview.

Boris Yeltsin and Jiang Zemin issued a joint statement that described the bilateral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as a “strategic partnership” at the end of a Russia-China summit meeting in Beijing in

1996. This declaration described aspirations rather than the real situ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however, it reflected the desire of both countries to strengthen their foreign policy positions through a dialogue with the West (especially the USA) and provide a counterweight to American global influence.

This seems to have been the catalyst for a further improvement in Russian-Chinese cooperation. For example, annual meetings between the heads of the two governments were established in 1996. A direct phone link was also established between the Russian State Duma and the State Council of China.

In the late 1990s, the two countries made determined efforts to resolve their border problems and deal with the issue of harmonization of cross-border trade. Subsequently, in 1999 the Russia-China border was legally registered and identified throughout its entire length (except for only three disputed islands on the Amur and Argun rivers) By 1999, more than 100 bilateral agreements had been signed that covered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Russian and Chinese regional authorities.

In the late 1990s, cooperation between Russia and China evolved into new cooperation over inter-regional issues. In 1998, in no small part due to the support of China, Russia became a member of the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 forum that allowed for participation in an organization that dealt with key Asia-Pacific problems.

Current relations

Political relations between Russia and China received a substantial boost at the start beginning of the 2000s. Russian foreign policy became distinctly more pragmatic under Vladimir Putin. Russia began to devote more attention to improved relations with China and saw this as a key strategy to rebuild Russia's foreign policy standing in the world, which had been undermined in the 1990s. China also saw a closer relationship with Russia as an opportunity to enhance its regional and global position.

Other factors that helped strengthen relations between Russia and China were NATO's military operations in Yugoslavia in 1999 as well as the subsequent military activities of the USA and its allies in Iraq and Afghanistan. These factors encouraged Russia and China to coordinate their efforts to establish an alternative centre of gravity to counterbalance the West, especially the United States.

Moscow signed *The Treaty of Good-Neighborliness and Friendly Cooperation* in 2001 showed the interest of both countries to increase the establishment of bilateral relations.

Another equally significant event in the political, or even geopolitical, rapprochement between Russia and China, was the formation of the Shanghai Cooperation Organisation (SCO) in 2001, which included Russia, China, Kazakhstan, Kyrgyzstan, Tajikistan and Uzbekistan.

This acted as a further impetus to Russian-Chinese dialogue. There were now bilateral meetings approximately three times a year that

included official visits, in addition to the contacts within the framework of APEC and the SCO. Particular attention was devoted to cooperation on security issues in the Central Asian region, which is in close proximity to important economic and military infrastructure in both Russia and China.

* * *

The widening and deepening political interaction between Russia and China was recognition by the ruling elites in both countries to cooperate and pursue common priorities and the creation of a multipolar world.

A further reason for increased cooperation between Russia and China is their common interest in areas such as terrorism, extremism and separatism. For Russia, this refers principally to the North Caucasus, and for China to Xinjiang. Another field of cooperation is the mutual support over a range of foreign affairs issues.

Simultaneously, it seems that the developing political cooperation between Russia and China has an insufficient foundation and is confined to the topic of the construction of a multipolar world order that is mainly motivated by a reaction to the geopolitical entanglements of USA and NATO, rather than by objective requirements for the development of a bilateral political dialogue. Subsequently, it is not impossible that Russian and Chinese relations could once again be dominated by narrow short-term national interests and/or the ambitions of ruling elites if the right combination of circumstances present themselves.



시리아 사태와 중견국가 한국의 전략



장지향

아산정책연구원

2011년 초 튀니지에서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반 독재 민주화 혁명이 발발하면서 주변국 시리아에도 ‘아랍의 봄’이 시작되었다. 시리아의 혁명이 점차 내전으로 변해갈 때도 많은 이들이 바샤르 아사드 대통령 역시 튀니지, 이집트의 독재자와 마찬가지로 곧 부와 권력을 포기하고 물러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적어도 내전이 본격화되면 리비아의 카다피처럼 반군에 의해 최후를 맞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시리아의 부자 세습 체제는 의외로 강고했다. 시민혁명이 시작된 지 2년이 지나고 사망자가 8만 명을 넘고 있으나 아사드 정권이 언제 몰락할지, 몰락한 후의 시리아는 어떤 모습일지 오리무중이다.

시리아의 독재 정권이 정확히 언제 무너질지 예측할 수는 없지만 특별한 전조 현상 없이 돌연 붕괴할 것은 확실하다. 아사드 정권은 본질적으로 매우 취약하며 폭발 직전의 불안정을 일시적으로 억눌러 현재의 내구성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겉으로 보이는 안정은 인위적인 탄압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아사드 정권의 내구성과 시리아 내전 장기화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강권기구를 장악하고 있는 집권 엘리트가 정권의 생존을 위해 강한 응집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1970년 하페즈 아사드가 바아스(Baath)당 내부 권력투쟁 과정에서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이래 지배 엘리트는 한 번도 지도자를 선출해본 적이 없다. 따라서 이들은 불확실한 미래보다 현재 바샤르 아사드가 이끄는 세습 독재를 선호한다. 도시 비즈니스 엘리트도 실현가능한 대안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현 정권을 지지하고 있다. 사실 대표적 반 아사드 야권 세력인 자유시리아군(Free Syrian Army)은 탈영한 정부군 사병이나 군 경험이 전혀 없는 민간인으로 이루어져 오합지졸에 가깝다.

둘째, 중국, 러시아, 이란이 아사드 정권을 꾸준히 지원해온 것에 비해 반 아사드 국제연대의 자유시리아군 지원은 체계적이지 못하다. 역내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가 무기와 자금을, 터키가 난민 거처를 지원하고 있으나 대상이나 경로를 둘러싸고 혼선을 빚고 있다. 또한 미국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의 피로감으로 인해 아시아 중시정책('pivot to Asia')을 천명한 후 뒤에서 이끌겠다('leading from behind')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유럽 역시 재정

위기 때문에 시리아 사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지휘 체계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반군을 지원하는데 드는 노력과 비용은 아무리 무너져가는 정권이라 할지라도 현 정권의 유지에 비해 훨씬 크다.

하지만 아사드 정권은 분명히 붕괴할 것이고 그 시나리오는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아사드 정권 내부 엘리트 간의 분열로 인해 쿠데타가 일어나는 것이다. 국가는 이미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고 국제적 압력이 계속되는 현 상황에서 시간은 집권 엘리트의 편이 아니다. 둘째, 자유시리아군이 외부로부터 대대적인 무장 지원을 받고 전투력을 정비하여 수도 다마스쿠스를 함락하는 것이다. 셋째, 반아사드 국제연대가 아사드 정권에 대한 압박 수위를 즉각적인 군사 개입 선까지 높여 퇴진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시나리오가 가능하려면 소극적인 미국과 유럽 대신 역내 국가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하다. 최근 지역 리더인 터키,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의 4개국 공조 없이는 시리아 사태의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다만 문제는 이란에게 아사드 정권 지지를 중단하고 세 국가와 함께 포스트-아사드 체제를 구상하는 협상 테이블에 참여하도록 유인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가능한 유인책으로는 아사드 이후 시리아에 급진 순니 정권을 세우지 않겠다는 약속 정도가 될 것이다.

글로벌 중견국으로 15년 만에 유엔안보리에 돌아온 한국이 이사국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국제 리더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시리

아 사태에 대해 다자주의, 인도주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 2013-2014년 임기를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의장국이 된 우리나라는 긴박한 중동 현안을 중심으로 안보리를 이끌었다. 시리아 사태와 관련해 ‘무력분쟁 하에서 민간인 보호’에 대한 의장 성명을 채택하여 전시 민간인 보호가 안보리의 주요 책임임을 공표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사바(AI Sabah) 쿠웨이트 국왕이 공동 개최한 인도적 지원 고위급 회의에서는 시리아 난민 지원을 위한 총 15억 불 모금액 중 300만 불 제공을 약속했다. 이로써 우리나라의 시리아 난민 지원 규모는 총 500만 불에 달하고 있다. 큰 액수는 아니지만 매우 고무적인 변화이다.

이러한 다자주의, 인도주의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강대국 편승 전략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리는 종종 한반도 의제와 한미 공조를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국제무대에서 우리의 행동반경을 스스로 좁혀왔다. 하지만 우리가 중견국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고 해서 한미 공조가 약화될 일은 없다. 오히려 아랍 독재정권을 비호하여 민심을 얻지 못했던 미국 대신 우리가 중동에서 독자적인 중견국의 역량을 인정받으면 한미 공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도덕적 권위를 중시하는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여 국제무대에서 입지를 강화하면 한반도 의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다룰 수도 있다.

최근 대표적인 중견국으로 급부상하며 시리아 사태 해결에서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는 터키와 공조는 매우 효과적인 전략이다. 터키는 ‘주변국과 아무런 문제없이 지내겠다’(zero problems with

neighbors’)’는 독자 노선을 표명하며 강대국과 확연히 구별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시리아 사태 초기에는 아사드 대통령과 수차례 대화를 통해 조기 해결을 시도했고 현재는 아사드 정권의 계속되는 민간인 학살에 항의하며 난민에게 인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또한 걸프협력회의국 가운데 유일하게 소프트 파워를 보유한 카타르도 협력 대상국이다. 카타르는 알 자지라 방송국을 설립하여 중동의 독립적인 시각과 목소리를 키우는데 기여해왔다. 아랍의 봄 직후 리비아 내전에서 반 카다피 시민군을 후원했고 현재 자유시리아군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물론 터키와 카타르는 미국의 우방으로 견재하며 동시에 이란 핵문제 협상의 중재자로도 활약하고 있다.



이란 신정부의 과제와 전망



이상철

前 주이란 대사 / 現 계명대학교

8월 중으로 예정된 이란의 로하니(Hassan Rowhani)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내외적인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는 2009년의 보수 강경파인 아마디네자드의 재선과는 달리 온건 개혁파로 분류되며 전 핵협상 대표였던 로하니가 새 대통령에 당선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대내적인 점진적 개혁과 대외적으로는 건설적인 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해 왔다.

2005년 이후 8년간 집권하여온 보수강경파 아마디네자드 전 대통령은 종교적 신앙심이 투철한 저소득층 유권자들의 지지를 기반으로 강경 이슬람 민족주의 노선을 추진한 결과 의미있는 변화를 가져오

지 못하였다. 오히려 그의 인기영합주의적 정책추진은 경제의 비효율적인 운영과 더불어 이란을 국제적인 고립에 처하게 만들었다.

이란이 현재 안고 있는 가장 큰 대내적인 문제는 경제악화이다. 이란 경제의 비효율적인 구조적인 문제도 있기는 하나, 이란의 핵무기 개발과 관련한 서방측 즉 미국과 EU측의 경제제재가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고 있기 때문 이다. 이란 외화 수입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 원유 수출도 2011년 대비 약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이며, 투자여건 악화로 대 이란 해외 투자도 기피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다 보니 생필품 품귀현상과 공장의 폐쇄 등 실업 문제는 이란 체제에 대한 정치적 압박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로하니 대통령 당선자는 이란의 인플레이션이 실제로는 42%에 달하며 지난 2년 간 이란 경제가 1980년대 이란-이라크 전쟁 후 처음으로 마이너스성장에 머물렀음을 지적하면서 지난 정부의 경제운영을 비판하였다. 또한 그는 교육받은 청년실업자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조만간 대학졸업 실업자가 450만에 달할 것으로 내다 보았다. 인터넷 등을 통한 서구문화의 유입 등으로 이란 젊은 세대의 삶의 질에 대한 기대와 서구사회에 대한 동경심은 폭발성을 내포한 것으로서, 현 이슬람체제가 당면한 가장 큰 과제 중의 하나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이란은 1979년 혁명 이후 호메이니 전 최고지도자의 출산 장려 정책으로 30세 이하가 인구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젊은 인구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란 핵문제는 2002년 8월 이란 반정부 단체에 의한 이란 내 핵개발과 관련된 2개의 IAEA 미신고 시설의 존재사실 폭로로 국제사회에 대두되고 난 후 지난 8년간 보수강경파인 아마디네자드 대통령 재임기간 중 미국과 EU 등 서방측과의 대립구도 속에서 첨예하게 대립되어온 사안이다. 핵무기 개발과 관련한 대 이란 제재 이후 이란이 우라늄 농축 중단을 거부함에 따라 2006년 이후 부과된 안보리의 제재와 미국 및 EU의 일방적 제재, 그리고 미국의 개별교섭에 의한 우방국들의 대 이란 제재 등으로 크게 구분될 수 있다. 가장 엄격한 제재는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미국 및 EU의 금융제재로 이란의 석유수출에 대한 제약은 물론 노후한 석유시설에 대한 외부의 투자기피 등 매우 실질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현재 이란 대 P5 (미, 영, 러, 중, 프) + 1(독일)의 형태로 협상이 진행되어 왔으나 별다른 진전이 없어 온 상황이다.

미 정보당국에 의하면, 이란은 아마디네자드 대통령 시절 핵무기 개발을 적극화, 앞으로 1년이면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농축우라늄을 확보할 수 있고, 아울러 장거리 미사일(Shahab-3)에 탑재할 수 있는 핵탄두의 소형화기술을 가속화해 나갈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또 다른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의 양도 내년 말쯤이면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저런 상황에 비추어 이란은 로하니 대통령의 출범을 계기로 핵 협상을 비롯한 대 서방 관계개선에 적극성을 보일 것이다. 그러나 다음의 요소를 고려할 때 이란 핵협상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첫째, 이란은 지역 강국 및 지역 안정자로서의 역할을 계속 자처해 왔으며 이런 전략적 입장을 계속 강화해 나가고자 할 것이다. 이란은 역내 강국인 이스라엘에 대응(counter balancing)할 수 있는 유일의 지역강국임을 자처, 반 이스라엘 대결 구도를 구축해 왔으며 핵을 가진 이스라엘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핵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주장해 왔다. 특히, 근래 중동의 제반 사태 진전과 관련, 이란은 과거 어느때보다도 자신들의 전략적 위상이 강화되어 가고 있다고 자칫 판단할 수가 있다. 즉, 이라크와 아프카니스탄에서 미국이 수행한 미완의 전쟁으로 이란이 접하고 있는 좌우 세력의 약화, 현재 진전중인 이집트와 시리아의 불안정 사태 등 이란은 자신의 역할이 더욱 부각될 수 있는 계기로 판단할 수가 있다.

둘째, 이란은 이미 상당량의 핵물질을 개발, 비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농축 우라늄의 경우 20% 농축된 중준위(MEU: Medium Enriched Uranium)우라늄을 근 250kg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원자로를 통한 3~5%의 저농축도 병행함으로써 플루토늄의 생산도 아울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핵 시설을 거대한 암벽 사이 등 전국 각지의 10여개의 장소에 분산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다. 이는 외부 공격에 대비할 뿐만 아니라 IAEA 등의 사찰에 대비하는 의도도 내포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서방과의 관계 개선을 주장하는 로하니가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서 이란의 체제가 바뀌는 것이 아님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란은 신정체제(theocracy)로서 신의 대리자인 최고지도자(supreme

leader)가 중요한 국가의 정책 방향을 결정하며 혁명수비대 등 권력 기관이 최고지도자를 보위하고 있다. 물론 로하니 대통령이 과거부터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최고지도자로서 신정정치의 정당성과도 연계된다고 여기는 핵무기의 유혹을 떨쳐버리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이란이 핵협상을 통하여 완전 비핵화의 길을 간다는 것은 상정하기가 곤란해 보인다. 대선과정에서 로하니는 핵문제 해결에 우선순위를 두겠지만 이란의 핵농축권리 또한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그는 이 상반되는 두가지 문제에 어떻게 균형을 취할지에 대해서는 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았다. 결국 어느 선에서 타협이 이루어지느냐의 문제로 보인다. 미국으로서는 이란이 보유하고 있는 제반 핵시설들에 대한 IAEA의 특별사찰 수용, 우라늄 농축의 5%대 제한, 20%이상 농축된 비축 우라늄의 해외 이전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이란은 우라늄 농축 권리 자체는 인정되어야 하며 이란에 대한 금융제재와 석유 수출 제한 조치가 즉각 해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양측의 협상 입장에 비추어, 이란 핵문제 협상은 상생(win/win)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란으로서는 이란의 핵물질 보유는 인정을 받되 무기화까지는 가지 않는다는 선에서 타협을 시도하고자 할지 모른다. 즉, 상황에 따라 핵무기 제조가 가능한 수준에서 동결하고자 하는 것이나 미국 입장에서는 이를 용인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결국 양측의 입장이 어느 선에서 정치적으로 타협하느냐의 문제로 보인다. 그러나 갈등상황에 있는 양측이 타협이라는 좁은 맥락에서 또 다시 지리한 협상을 지속하는 것보다는, 중동지역의 안정과 세력 균형이라는 보다 큰 맥락에서 상호 포용하는 전략적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이란의 핵문제는 북한핵문제와는 또 다른 측면이 있다고 본다. 4강에 둘러싸인 동북아에서의 북한의 핵문제는 4강세력의 개입 등 어느 정도 억지가 가능하다고 보나, 이란의 문제는 중동지역 전체의 세력균형과 안정이라는 보다 큰 전략적 관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또한 로하니의 정부의 출범으로 핵협상 타결에 대한 서방측의 기대감이 고조된 것이라면 그 기대감에 걸맞게 신정체제의 대통령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만들어 주는 것은 서방측의 몫이 되어야 한다.



Korea–Middle East Cooperation: Comprehensive Partnership towards a New Horizon



YUN Byung-se

Foreign Minister, Republic of Korea

The bond between Korea and the Middle East can be traced back to thousand years. Over the past few decades, we have also built and nurtured a relationship of win-win structure. For Korea, the Middle East was the reliable partner that supplied energy so critical to its economic development. For the Middle East, Korea was the trustworthy and diligent partner that provided the skills and the manpower needed for its modernization and infrastructure development.

However, it is also true that as our relationship has been focused mainly in the economic interests of both sides, the relative importance

of the partnership went through the cycle of ups and downs reflecting the market condition of the given times.

In view of the political and social transformation in the Middle East and the economic achievements in Korea over the last decade, it is time for Korea to ‘revisit the Middle East’ and the Middle East to ‘rediscover Korea.’ In other words, it is time for us to recalibrate the character of our relationship so that we may elevate it to reflect the progress we made over the years and fulfill the potential to bring a more prosperous future.

With a view to meeting such demands and challenges of our time, I would like to characterize Korea’s policy towards the Middle East as the “Comprehensive Partnership towards a new horizon.” Under this new partnership, we will seek to create a relationship that is less vulnerable to the capricious changes of the times. We will seek to create a relationship that contributes to the common prosperity of the region and the world - this coincides with the vision of promoting the well-being and happiness of the global community put forward by the new government of Korea.

To begin building this partnership, I believe three Cs are needed: mutually “complementing” economic relations, mutually “contributing” political relations, and mutually “communicating” cultural

relations.

First, let me address the mutually complementing economic co-operation.

Today, the Middle East is reaching beyond its traditional role as the global supplier of energy and the major player in the global financial market. The region is making preparation for the post-oil era by looking into possible new growth in areas such as renewable energy, information technology (IT), nuclear energy, and the health and medical industry. Korea welcomes such policy direction of the Middle East and hopes that this will, in turn, lead to an opportunity to foster a more future-oriented and multi-faceted partnership with the Middle East.

In this regard, there are already Korean nuclear power plants being built in the UAE, and hundreds of Middle Eastern patients are arriving in Korea for medical treatments in Korean hospitals. I believe that such new and diverse trends in our bilateral cooperation show the path we should take toward the future.

Next, let me address the mutually contributing political relations.

In international relations, it is hard to maintain a long-term relation-

ship without firm and mutual trust. Furthermore, the peace and stability of the Middle East is inseparable from the peace and stability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world. Our relationship is no longer defined only as the supplier and buyer of petroleum. Events occurring in global hot spots such as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Middle East affect the strategic calculations of key stake-holders that shape the larger contour of the global security landscape.

Thus, as a stake-holder in maintaining the peace and stability in the Middle East, Korea is making active contribution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efforts in places like Iraq, Lebanon, Somalia, and South Sudan, safeguarding and making peace. Also, as a member of the UN Security Council, Korea is looking for ways to make positive contributions in the process of resolving the Syria crisis, for example, by hosting the third Working Group Meeting on Economic Recovery and Development of Syria in few weeks time.

Furthermore, Korea is reaching out to engage not only individual partners, but also regional organizations through strategic dialogues in an effort to deepen its relationship with the Middle East. For example, on the occasion of the UN General Assembly, I held the first Foreign Ministers' Meeting with Gulf Cooperation Council (GCC) during which the two sides agreed to hold regular strategic dialogues in the future, and also held the first Ministerial Meeting with the Arab League

during which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was signed establishing a high-level channel of dialogue.

Finally, let me address the mutually communicating cultural relationship.

Korean art and culture is receiving an enthusiastic reception throughout the world, a phenomenon often referred to as the Korean Wave. The Korean Wave is also occurring in the Middle East. Perhaps, the fact that there are many similarities between our two cultures - such as the common emphasis on the importance of family and friendship, and the preservation of tradition - make the Korean Wave more receptive in the Middle East. At the same time in Korea, the 140-thousand-strong muslim community has become a sturdy bridge that links our two peoples and cultures.

In this vein, I believe that our younger generations are invaluable assets for our two cultures that will one day become the catalysts for a more prosperous common future together. It is with such belief that we included the session for the next generation in this year's Forum.

This year marks the 40th anniversary of the arrival of the first group of Korean construction workers in the Middle East. In commemoration of this historic event, Korea and Saudi Arabia are jointly launching an

initiative tentatively called the “Saudi Homecoming Day” - a series of events for retired Korean construction workers to visit Saudi Arabia to witness for themselves their legacy and contribution. Through such an initiative, we hope to deepen our ties with our friends in the Middle East by recalling our contribution in laying the groundwork for economic growth.



* Jointly organized by the Jeju Peace Institute, the Korea-Arab Society, and the Emirates Center for Strategic Studies and Research, the 10th Korea-Middle East Cooperation Forum was held in Seoul, Korea, October 22-23, 2013.



한중동 협력: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포괄적 파트너십



윤병세

외교부 장관

한국과 중동과의 인연은 천 년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며, 근래에 들어서는 상호 윈-윈의 협력 구조를 수립·발전해 왔습니다. 한국에 있어 중동은 경제발전에 필수적인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수입할 수 있는 파트너였고, 중동에 있어 한국은 중동의 현대화와 인프라 건설에 필요한 신뢰할 수 있는 기술과 성실한 근로인력을 제공할 수 있는 파트너였습니다.

그러나, 그간 한·중동 관계가 경제협력에 중점을 두다보니, 한국에게 중동은 주어진 시장상황에 따라 경제적 이해가 민감해 지면 중요

지역으로 부상하였다가도, 민감도가 저하되면 약화되는 취약성을 보여준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 10여년간 중동지역에서의 정치·사회적 변화와 한국의 경제발전은 서로에게 ‘중동의 재발견(revisit middle east)’과 ‘한국의 재인식(rediscover korea)’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 축적되어 온 양자관계의 진전과 보다 풍요로운 미래 구현을 위한 잠재력을 감안하여 우리의 관계를 한 차원 높은 단계로 업그레이드하려면, 서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해야 합니다.

본인은 이러한 시대적 요청과 변화에 부응하여, 앞으로 한국의 대중동정책 방향을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포괄적 파트너십(Comprehensive Partnership towards a new horizon)’으로 설정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파트너십은 정세변화와 관계없이 지속적인 관계발전과 지역적·범세계적인 공영을 추구하는 관계를 의미하며, 이는 한국의 신정부가 추구하는 ‘지구촌 행복’의 비전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3가지 요소(the three Cs)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보완적인(complementing) 경제관계, 둘째 기여하는(contributing) 정치관계, 마지막으로 소통하는(communicating) 문화관계가 그것입니다.

먼저, 보완적인 경제협력 문제입니다.

오늘날 중동 지역은 세계 에너지의 핵심 공급자이자 금융시장의 중요 행위자로서의 지위를 넘어, 포스트 오일 시대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IT 산업, 원자력, 보건 및 의료 산업 등 분야에 큰 관심을 기울이면서 새로운 발전을 모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 중동지역의 이러한 정책방향을 적극 환영하며,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다면적인 협력관계 구축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UAE에서는 한국의 원전이 건설되고 있고, 중동 국가의 많은 환자들이 치료를 위해 한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이러한 새롭고 다양한 협력 수요가 우리의 나아갈 바를 경험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기여하는 정치협력 관계의 강화입니다.

정치분야에서의 굳건한 신뢰와 상호 협력 없이는 장기적인 관계가 지속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중동지역의 평화와 안정은 국제사회는 물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과도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한국과 중동지역의 관계는 원유 수급과 같은 단순한 경제 문제에 머물지 않습니다. 한반도 또는 중동과 같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상황은 주요국들(key stake-holders)의 전략적 계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면서 국제 안보지형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동의 평화와 안정에 관한 이해 관계자로서 한국은 이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간 이라

크, 레바논, 소말리아, 남수단 등지에서 평화를 지키고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시리아 사태의 해결을 위해서도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 건설적인 역할을 다해 나가고자 하며, 이를 위해 조만간 서울에서 시리아 경제재건 작업반 회의를 개최하여 시리아 재건 방안을 국제사회와 함께 협의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한·중동 관계의 심화를 위해 중동 개별 국가들은 물론 역내 대표적인 지역협의체들과의 전략 대화를 활성화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유엔총회 계기에 본인은 걸프협력이사회(GCC)와 최초로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하고, 향후 정기적 전략대화를 추진키로 하였으며, 아랍연맹(Arab League)과도 최초의 장관급 협의를 갖고, 고위급 대화채널 마련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통을 통해 상호 융성하는 문화관계의 심화입니다.

한국문화는 한류라는 이름으로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으며, 중동도 예외가 아닙니다. 가족과 친구를 소중히 여기며, 전통을 사랑하는 중동 문화는 한국 문화와 유사성이 큼니다. 한국에서도 이제 14만 명의 이슬람 인구를 기반으로 이슬람과 중동지역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는 한·중동 관계의 미래로서 함께 비전을 실현해 나가는 중요한 공동의 자산입니다. 오늘 한·중동 포럼 10주년을 맞이

하여, 차세대간 대화의 시간을 마련한 것도 그러한 이유입니다.

금년은 한국 근로자들의 중동진출 40주년을 맞이하는 뜻 깊은 해이며, 한국과 사우디는 한국 근로자의 사우디 초청 사업, 일명 ‘사우디 Homecoming’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절 경제 성장의 초석을 다지도록 해준 중동 친구들의 도움을 잊지 않겠다는 우정의 표현입니다.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이러한 작은 노력이 서로의 우정을 확고히 다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 제10차 한중동 협력포럼은 제주평화연구원, 한국-아랍 소사이어티, 에미리트 전략문제연구소의 공동주최로 10월 22-23일 서울에서 개최되었음. 이 글에 포함된 의견은 저자 개인의 의견으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하다.



이란 핵 협상 타결과 전망



유흥태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동연구소

2013년 6월 15일 밤, 테헤란 거리는 경적과 환호성으로 가득했다. 실용주의 중도개혁파 하산 로하니 후보가 예상을 뒤엎고 대통령에 당선된 것을 축하하는 이란 국민들의 기쁨의 표시였다. 그로부터 5개월 뒤 이맘 호메이니 국제공항은 또 한 번 환호성으로 가득했다. 제네바에서 개최된 3차 협상에서 합의서를 작성하고 돌아오는 핵 협상단을 맞이하는 이란 국민들의 환대였다. 현재 이란에서는 경제 제재로 인한 오랜 경기침체를 마치고 새로운 발전의 시대로 변화될 것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고 있다.

지난 8월, 로하니 신임 대통령 취임 후 이어진 그의 행보는 이란 국

민과 서구 국가들에게 기대감을 주었다. 미국과 국교단절 후 처음 이루어진 역사적인 오바마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 미국통인 자바드 자리프 외무장관의 임명, 적극적인 핵협상 자세, 최고 종교지도자 하메네이와의 교감 등은 오랜 경제제재로 피폐해진 이란 국민들과 지루한 핵 협상에 지친 서구 국가들의 마음을 변화시켰다. 그동안 유엔 결의안에 따른 제재와 미국, 유럽 및 기타 국가들의 독자적 제재를 통해 이란 내부의 경제 사정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었다. 여기에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적 압박으로 인해 이란 정부는 막다른 골목에 있었다. 이러한 대내외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하메네이와 로하니의 지지를 얻은 협상단은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했고 6개월 잠정적 합의지만 첫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이번 합의서를 통해 이란은 향후 6개월간 5% 이상 우라늄 농축 중단, 20% 농축 우라늄 중화, 아라크 중수로 건설 중단, 파르친 군사 기지와 포르도 지하 농축시설을 포함 국제원자력기구(IAEA) 조사단의 일일 사찰 허용, 추가 우라늄 농축용 원심분리기 생산 중단 등을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P5+1(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과 독일) 측은 해외 동결된 이란원유 수출대금 일부 인출 허용, 석유제품, 귀금속, 자동차 및 항공부품 무역거래 허가, 외국에 거주하는 이란 유학생 송금 등을 약속했다. BBC의 분석에 따르면 이를 통해 6개월간 약 70억 불에 달하는 금액을 이란이 얻게 되었다. 6개월간의 한시적 합의지만 10여 년간 끌어온 이란 핵협상의 첫 결과물이라는 의미가 있다.

‘역사적 합의’ 라는 미국의 평가에 협상에 참여했던 영국과 프랑스, 러시아, 중국, 독일은 ‘역사적 첫걸음’을 조심스럽게 환영했지만 여전히 의문을 표하는 국가들도 있다. 협상을 주도한 미국의 의회조차도 새로운 제재안을 내놓고 6개월 동안 합의서가 이행 되는지 지켜보고 불이행시 더 강력한 제재를 할 것을 경고했다. 몇몇 상원의원들은 벌써부터 이란에 너무 많은 양보를 한 것이라는 비판을 하고 있다. 미국의 최우방국 이스라엘의 심기도 불편하다. 네탄야후 총리는 ‘역사적 합의’가 아닌 ‘역사적 실수’로 이번 협상을 규정하고 이란이 핵 무기화 하는 시간을 벌여준 격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언제든 지 군사적 공격을 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중동에서 이란과 지역 패권을 다투는 사우디아라비아도 마찬가지다. 수니파 이슬람의 수장으로 시아파 이슬람 핵심국가인 이란의 득세가 기분 좋을 리 없다. 겉으로는 많은 국가들이 협상타결을 환영하지만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따지고 있다.

이란 내부에서는 대체로 반기는 눈치이다. 최고 종교지도자(Supreme Leader)인 하메네이가 협상단의 수고에 감사를 표했고 로하니 대통령도 하메네이의 지지로 인해 타결했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일반 국민의 기대감은 정치권의 반응보다 뜨겁다. 공항에 마중 나온 사람부터 일반 국민들까지 모두가 오랜만에 밝은 얼굴로 경제 회복을 바라고 있다. 합의서 이행에 대한 구체적 시기와 방안들이 나오지 않았지만 경제 회복의 기대 심리가 벌써 작용하기 시작했다. 정치에 민감한 환율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1달러에 30,000 리알 하던 환율은 타결소식이 전해진 다음날 28,800 리알로 떨어졌다. 지난 1

년간 80% 가까이 급락한 리얄화 가치가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수년간 지속된 미국과 EU, 유엔의 경제제재로 인해 수입품을 포함한 생필품 전반에 걸친 인플레이션이 이란 국민들의 삶을 어렵게 만들었다. 중산층이 사라지고 양극화가 심해진 불안정한 경제구조로 만들었다. 이번 협상타결로 서민들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6개월만 적용되는 한시적인 협상안이기 때문에 양측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이행이 중요하다. 이스라엘의 우려처럼 만약 이란이 협정을 파기하고 핵개발을 지속한다면 돌이키기 힘든 결과를 낳게 된다. 미국의 중동지역 영향력은 감소할 것이 명백하고 협상을 통한 외교적 해결이 아닌 군사력을 통한 핵 억지 의견이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북핵 협상을 통해 학습한 미국이 이란의 핵의 사항 이행을 검증 또 검증할 것이다.

핵 농축 권리에 대한 서로 간의 이해도 문제이다. 하메네이 최고 종교지도자와 로하니 대통령, 자리프 외무장관은 핵 농축 권리를 세계로부터 인정받았음을 선언했다. 5% 이상 농축 중단을 이란 측은 5% 이하 농축에 대한 권리 인정으로 해석하고 있고 미국은 핵 농축 권리를 인정하지 않다고 맞서고 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는 반목의 불씨가 될 수 있다. 물론 완전 합의를 위한 세부 협정이 계속 이어지겠지만 작은 부분에서부터 검증하고 확인해 봐야 할 문제이다. 이제 완전타결로 가는 문이 열렸다. 지속적인 대화와 합

의서 이행을 통한 신뢰 쌓기가 중요하다.

우리는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 이란 변화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1962년 공식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50년 넘게 전통적인 우방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1977년에는 ‘테헤란로와 서울로’라는 양국 수도의 이름을 딴 거리를 지정하면서 더 깊은 우호관계로 발전했다. 특히, 이란-이라크 전쟁에서 끝까지 남아 수주한 공사를 마무리하며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을 심어주었다. 그러나 2010년 독자적 대이란 제재안을 발표하면서 정치적으로 양국관계가 소원해졌다. 북한과 대치하며 북핵이라는 민감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지만 서운함을 가지고 있는 이란과의 관계를 풀기 위해서는 지속적 교류가 중요하다. 이미 한류를 기반으로 한 양국 간의 문화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문화적 노력과 비 제재 분야의 지속적인 경제교류를 통해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그 어느 때보다 좋다. ‘Made in Korea’가 찍혀 있는 상품에 대한 이란 국민의 믿음이 있다. 핵 협상의 잠정적 타결은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문화적 교류를 넘어 경제적, 정치적 교류가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란은 경제적으로는 석유와 천연가스를 포함한 다양한 천연자원과 8천만의 인구를 가진 국가로 중동에서 가장 매력적인 시장이 분명하다. 건설을 필두로 산업 전 분야의 기업들이 앞다투어 진출할 것이다. 그러나 잠시 숨을 고르며 접근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번 타결은 미국과 이란의 정치적 필요가 맞아 합의되었다는 시각

도 존재한다. ‘오바마케어’ 법안 처리로 미국 내 정치적 입지가 약해진 오바마 대통령과 경제제재로 인한 극심한 경제난으로 내부적 위기에 봉착한 하메네이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왜 지금 이 시점에 타결이 되었는지 곰곰이 생각할 대목이다. 이번 타결은 내부 저항을 상쇄시킬 외부적 성공 사례인 것이다.

특히 이란은 로하니 대통령이 이끄는 행정부보다 종교와 군부를 기반으로 한 최고종교지도자의 권위가 더 높은 곳이다. 모든 결정권이 정부 위에 존재하는 절대 권력(Supreme leader)에서 나오며 그 결정에 따라 언제든지 바뀔 가능성이 있는 곳이다. 또한 아직도 이란 내부의 복잡한 정치 문제가 존재한다. 2009년 대선불복종으로 시작한 반정부 시위의 핵심세력인 무사비와 카로비 전 대통령 후보가 여전히 가택 연금 중이다. 중도파 로하니 대통령이 핵 협상 타결을 바탕으로 내부 정치적 변화를 주도할 가능성이 있다. 정치적 급변이 예상되는 측면이다. 경제구조 측면에서도 환율 시장은 외부 정치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고 제조업 분야는 대부분 수입 원자재에 의존하는 허약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국내외 정치적 결정에 영향이 큰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둘러 접근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6개월은 짧고도 긴 시간이다. 합의사항이 이행되는 것을 지켜 보면서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이란의 정치, 경제, 문화와 이란인들의 습관을 하나하나 배워두는 지혜도 필요하다.



미중 ‘신형 대국관계’로 가는 길



Patrick CRONIN

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

미국과 ‘신형 대국관계’의 수립은 최근 중국외교정책의 초석이지만 여전히 취약하다. 이 용어는 후진타오 전 주석이 처음 언급했으나, 4개월쯤 전에 시진핑 주석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캘리포니아 서니랜즈 정상회담 이후 그 중요성이 승격되었다. 일부 미국인들에게 이 개념은 베이징의 공기만큼이나 흐릿할 텐데, 이는 수많은 중국 인사들과 장황한 토론을 하고 난 뒤에도 마찬가지이다. 이 문구를 엄격하게 (또는 적어도 덜 막연하게) 정의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 더 좌절감을 느끼게 마련이다.

안정성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이 표현은 양자 관계가 제로섬적 전략경쟁으로 추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시도일 수 있다. 북경대학교

왕지시 교수는 이러한 추락 경향에 대하여 경고하였다. 시진핑은 중국 지도자의 지위에 오르면서, 세계 최강대국과 세계최대 부흥국 간의 관계에서 출발하여, 주요 강대국 관계를 안정시킬 방법을 모색하였다. 미국과의 대립관계는 ‘차이나 드림’의 실현을 약화시킬 수 있는데, 이 개념 역시 모호하지만 2021년의 공산당 일백 주년 및 2049년의 중화인민공화국 일백 주년 기념에 있어서 경제적 준거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다른 분석의 수준에서 보자면, 새로운 형태의 강대국 관계란 미국과 중국을 완전히 대등한 위치에 두려는 시도일 수 있는데, 이를 동등성의 추구라고 명명할 수 있다. 미국의 쇠퇴는 멈출 수 없고 중국의 상승은 막을 수 없다는 중국인들의 인식이 만연하고 때론 승리주의적이어서, 이러한 주장을 부채질하고 있다. 일부 중국학자들은 미국경제의 펀더멘털에 주목하여 미국 경제의 많은 장점을 인정하고, 다른 학자들은 중국경제에서 심각한 장애물들을 발견한다. 하지만, 세기 중반쯤에 미국을 따라 잡을 때까지 중국이 상승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는 매우 강렬하고 인기 있는 전망이어서 시진핑은 이를 미국과의 관계에서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두 가지 관점 외에, 미국의 합리적 정책결정자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세 번째 해석이 존재하는데, 말하자면, 그 문구는 내용이 없고, 뚜렷한 목적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며, 임기응변적이라는 것이다. 너무 많은 도전에 시달리고 있고 내심 질서와 안정에 집중하는 중국의 지도자들은 그 문구를 평화공존이론의 재탕 정도로만 사

용하고 있을 수도 있다. 중국은 장기 전략적 사고로 유명하지만, 오늘날 중국의 지도자들은 단기적 환경을 걱정하느라 대전략의 호사를 누릴 수 없다. 물론 이 해석은 지구화된 세계와 더욱 상호 연결된, 성장하는 중국의 미래 궤도를 설명하지는 않는다.

새로운 형태의 강대국 관계가 매우 다양한 수준에서 해석될 수 있다고 해서 유용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중국과 미국은 안정적이고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여 지역적으로나 지구적으로 더욱 커다란 평화와 번영으로 나아가기 위해, 관계를 맺고 일을 할 수 있는 전략적 틀을 필요로 한다. 최고위층 관료들이 그 틀에 대하여 숙고하겠지만, 훨씬 더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양국 정부 및 사회가 그 내용을 채우는 것이라고 하겠다. 작금의 의제는 기후변화, 에너지, 환경으로부터 무역, 투자 및 지적재산권에 이르기까지 매우 폭넓고 모든 것을 망라하고 있어서, 단 하나의 급속한 위기로 중미 관계를 탈선시킬 수도 있는 그러한 사안들을 놓치기 쉽다.

세계 최강대국과 최대 부흥국 간 관계의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중미관계의 협력 또는 갈등의 정도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지구를 통하여 갈수록 다원화 되어가는 세계에서조차 파문을 일으킬 것이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중국의 근대화 및 경제정치적 발전을 인정하고 대체로 박수를 보내는 반면에, 평화적 협력은 공동의 규칙과 규범, 존중이라는 토대 하에 구축되어야만 한다고 믿고 있다. 중국은

단순한 규범 준수자가 아니라 규범 설정자가 되도록 용인될 것이지만, 이는 시간을 두고 적절한 방식으로 또한 다른 나라들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중국의 외무장관은 정의와 국제법에 초점이 맞춰진 새로운 정책에 대해 이야기 해왔는데, 그러한 이상 속에는 더 커다란 공동안보의 감각을 거둘 여지가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새로운 형태의 강대국 관계는 기껏해야 열망적인 것이며 최악의 경우엔 중국의 성장을 더디게 하는 의제를 납치하기 위해 고안된 위장막이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은 거칠고 군사안보적인 도전들에 대하여 진전을 이룰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들은 위협의 감소와 관리 및 불필요한 전략무기 경쟁을 피하기 위해 고안된 일련의 조치들에 걸쳐서 효과적인 협력을 구축하여, 안정이라는 공동 목표를 향해 함께 가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분명히 경제, 환경, 외교, 개인 대 개인 관계에 충분한 초점을 둔 포괄적 의제 속에서 생겨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필자는 군사안보적 도전들을 주목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것들은 상당한 기회비용을 야기시키고, 의도하지 않은 갈등의 위험을 높이고, 전략무기 경쟁을 자기 충족적 예언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군사안보 의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세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첫째, 미국과 중국은 해상 위협 감소 조치에 대한 협상을 두 배로 늘릴 필요가 있다. 중국은, 미국이 '수정주의적' 동맹국 일본을 '훈육'시켜서 동중국해의 분쟁을 인정하도록 만드는 것이 새로운 동반

자 관계의 시금석이란 사실을 미국인들이 받아들일 것인가를 탐색하는 중이다. 게다가 이웃 국가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관대한 경제적 유인책을 포함하여 중국의 에너지에 다시 초점을 맞춘다면 약간의 일반적 이익이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이웃 국가들이 부상하는 중국의 미래 의도에 대하여 품고 있는 우려를 제거할 것이다. 일본과 필리핀을 고립시키려는 접근 방식은 쓸모도 없고 실패하게 마련이다.

영토분쟁이 곧 해결될 것은 아니므로, 다루기 힘든 차이점을 관리할 최선의 방법은 모든 당사자들이 현상을 바꾸기 위한 무력의 사용을 삼가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다. 해양에서의 위협을 줄이고 관리하기 위해 고안된 수많은 조처들은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커지고 있는 긴장의 억제력을 보장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조처들이 센카쿠/다이아오유 열도를 둘러싸고 중국의 빈번한 침범과 일본의 대응이 분쟁으로 폭발하지 않도록 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어떤 중국인 교수는 필자에게 2020년 이전에 무력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쌍무적 장치들과 ASEAN 중심의 다자간 기구들에 대한 지원은 중국과 미국의 많은 투자를 필요로 한다.

둘째, 미국과 중국은 핵확산의 위협을 저지할 필요가 있다. 김정은의 북한은 아시아 평화에 가장 심각한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 베이징과 워싱턴은 6자회담 복귀 움직임을 검토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할 필요가 있다. 만약 북한이 네 번째 핵실험에 착수한다면, 두

강대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배치하거나 수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무력과 국제적 연합을 동원할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페르시아만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이란의 핵확산이 많은 불안정한 중동국가(페르시아만 국가)들의 핵무기 구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중국이 이해해야만 하는데, 이러한 지역 환경은 중동오일에 점점 더 의존하고 있는 중국이 원하는 바가 아니다.

셋째, 미국과 중국의 관리들은, 사이버공간이나 우주공간과 같은 영역들에 있어서, 전략적 대화를 구축하고, 전략무기 경쟁을 제한할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만 한다. 미국은 추가로 핵무기 축소를 시도하고 있고, 중국은 아마도 동등성을 향한 커다란 도약을 고려할 것이기 때문에, 두 나라가 오판의 방지와 회피 가능한 군비경쟁 요인들에 관해 진지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러 문명들이 온전히 조화를 이루지 못할 수도 있고, 새로운 형태의 강대국 관계가 수립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두 최강대국이 갈등보다 협력을 통해 얻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인식하게 될 쌍무적 관계를 구축하는데 한발 더 가까이 다가간 것일 수도 있다.

* 이 글의 원본(원제목: “The Path to a New Type of Great Power Relations”)은 PacNet에 게재된 것으로, 제주평화연구원과 Pacific Forum CSIS와의 협약 하에 국문으로 번역하여 배포한다.
이 글에 포함된 의견은 저자 개인의 의견으로, 제주평화연구원이나 Pacific Forum CSIS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하다



한·중관계의 미래



송민순

前 외교부 장관

근래 동북아 정세가 구조적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역내 국가들은 각국의 행보를 서로 불편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인류 역사상 많은 비극을 불러온 세 가지 조류, 즉 민족주의(nationalism), 영토회복주의(irredentism), 군사주의(militarism)가 동북아에서 결합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은 이 지역 공동의 미래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특히, 최근 동중국해의 파고는 매우 높아지고 있다. 중·일 간의 영토분쟁, 각국의 방공 식별구역 설정과 운영방식의 상충으로 인해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다.

2007년 6월 한·중·일 외교장관들은 처음으로 제주도의 국제컨벤션

센터에 모여 3국 관계와 동북아 공동의 평화와 번영을 논의한 바 있다. 당시 해상안전, 항공연결, 문화서툼, 언론교류 등 비교적 덜 민감한 문제들을 중심으로 매우 협력적인 논의를 가졌다. 그 후 한·중·일 협력사무국 개설, 3국 정상회담의 정례화로 발전된 것은 3국 관계에 있어 의미있는 한 획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지금 동북아의 협력 기류는 6년 전보다 후퇴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현상이 고착되지 않고 일시적인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자적 협력과 함께 한·중관계를 포함한 양자적 관계들이 조화롭게 발전돼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는 동북아 공동의 미래 질서를 구축하는 핵심 축의 하나가 될 것이다.

1992년 수교 이후 양국관계는 실질적 관계 발전에 맞추어 성격 규정도 진화해 왔다. 우호협력, 협력동반, 전면적 협력, 전면적 협력 동반, 전략적 협력 동반이라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다. 금년 6월 박근혜 대통령 방중 시 양측은 이제 이런 성격 규정에 맞게 내실화 시키자는 데에 합의하였다. 이를 위해 양국이 각종 공동위원회 설치와 협력 약정체결에 합의함으로써 관계 내실화를 위한 장치와 제도를 정비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하겠다.

양국은 이미 공동의 전략적 이익에 대한 포괄적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동북아의 평화, 안정, 번영이다. 양국은 이러한 추상적 목표를 위한 실천과제로 대륙과 해양 세력 간 대립을 둘

러싸고 있는 구조적 모순의 극복, 한반도에서 남·북 화해·협력 조성, 북한 핵문제 해결, 주변과 조화되는 한반도 통일 등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실천 방법론을 같이 논의할 단계에 접근하고 있다. 각 과제별로 많은 모순적 요소들을 안고 있기 때문에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 최근 미국 바이든 부통령의 일·중·한 3국 방문 시 나타난 바와 같이 정치인과 외교관들의 상황관리와 무마를 위한 수사들에도 불구하고 근본적 상충 요소들은 그대로 남아 있음을 직시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와 “한·미 21세기 포괄적 전략 동맹”을 조화시키는 문제다. 2008년 4월 당시 부시 미국 대통령은 이명박 한국 대통령과 한·미 전략 동맹을 선언하는 자리에서, 한·미 양국은 중국을 건설적으로도 파괴적으로도 관여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중관계와 한·미관계가 민감하게 교차하고 있음을 보여준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다.

범지역적 문제로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 구축과 한국의 참여가 지역의 평화와 한·중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고 추진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한·미·일을 삼각 안보협력 체제로 묶으려는 움직임과 한·중 전략적 협력이 서로 수용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TPP와 RCEP, 그리고 한·중 FTA, 한·중·일 FTA를 함께 타협시키는 방법은 무엇인지, 한국은 주한 미군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는데 대해 중국은 주한미군의 존재와

운용방식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이념에 대해 한·중이 함께 할 수 있는 가치의 공유면적은 어느 정도인지 하는 것들이 이 범주에 속하는 대표적 문제들일 것이다.

둘째, 동북아 안보의 최대 장애요인 중 하나이고 한반도 문제의 핵심인 북한 핵 문제에 대해 한·중이 전략적 협력을 다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북핵 문제의 실질적 진전과 중국적 해결은 한·중 양국에게 엄청난 국가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지역의 긴장완화를 통해 양국은 각자의 국내 문제에 더 집중할 수 있고, 역내 경제협력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물론, 북한 핵 위협을 구실로 하여 군비경쟁을 도모하는 세력들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미국은 북한에 대해 “선 비핵화조치나 믿을만한 의지를 보여라”고 요구하고, 북한은 그렇게 하기 위해 “미국이 먼저 제재해제나 완화 조치를 취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이란 핵문제의 초기 합의처럼 북한에 대해 제재완화를 시켜주고 바로 북한이 비핵화 초기조치를 취하도록 중국이 보증 역할을 하는 길을 한·중이 공동으로 모색해 봐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핵 문제에 대해 한·중이 사용하는 용어의 차이에 대해서도 좀 더 분명한 자세가 필요하다.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비핵화가 어떻게 다른지, 단순히 중국이 북한을 배려하기 때문인지, 아니면 한국과 중국의 한반도 정책에 있어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한·중 양국은 6자회담에서 남·북과 미·중이 합의할 수 있는 북한

비핵화 방식과 한반도에서의 공존방식을 도출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했다. 그러한 협력은 2005년 9·19 공동성명을 만드는 큰 동력이 되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 합의의 이행과정에서는 그런 동력이 작동하지 않았다. 모두가 여전히 동의하고 있는 이 공동성명의 실천을 위해서는 한·중이 말보다는 행동에 기초한 진정한 의미의 전략적 협력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셋째, 남·북간 화해와 협력의 환경 조성을 위해 한·중이 협력해야 할 것이다. 남·북관계는 북한 핵 문제 해결과 함께 굴러가야 할 두 개의 바퀴 중 하나다. 중국은 대외적으로 대북 영향력이 제한적이라고 설명하지만, 대북관계를 고려한 정치적 판단에서 나온 신중한 발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중 양국은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위한 대외적 환경을 조성하도록 과감한 정치적·경제적 투자를 함께 도모할 필요가 있다. 결국 남·북이 평화·협력적으로 공존하는 가운데 미국과 북한이 수교함으로써 한반도에서 휴전 체제가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문제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병행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 경로에 대해 한·중 간에 높은 차원의 조율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양국 관계가 전략적 협력동반 차원으로 진입하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은 양국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그리고 공유할 때 가능할 것이다. 중국의 국가 발전에 필요한 대외 환경의 안정이나,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인적·물적 교류를 포함한

일상의 양국 관계 증진, 그리고 최근 일고 있는 북한 내부정세 혼란과 앞으로의 불안조짐에 대한 효과적 대처 등 양국 공동의 이슈들 모두가 그 비전을 바탕으로 이루어 질 것이다.

한·중 양국은 세계 어느 양자 관계 못지않게 지리, 역사, 문화, 안보, 경제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역설적으로 그 만큼 많은 현재적 문제와 잠재적 문제들을 안고 있다고 하겠다. 해상 경계, 어업, 역사, 무역, 투자 등에서 갈등의 노출은 한·중이 제도적 장치와 지혜로운 운용을 통해 해결하고 관리해 나가야 할 문제들이다.

동시에, 양국은 오랜 역사를 배경으로 한 깊고 넓은 인문적 유대에도 불구하고 근 1세기에 걸친 관계 단절로 인해 이질화된 요소가 많이 생성되었음도 인식해야 한다. 양국은 서로 확연히 다른 정치 제도를 갖고 있다. 서양 문화에 익숙해진 한국의 세대와 독자적 사회·문화적 환경에서 자란 중국의 세대 간 의식 구조가 다를 수밖에 없음도 직시해야 한다. 그런 가운데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한·중 양국이 안고 있는 어려운 과제들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양국 정부의 입체적 국가 전략이 요구되지만, 양국의 학계, 경제계, 문화계, 언론 등의 역할도 긴요할 것이다.

* 2013년 12월 11일, 제주평화연구원 주최 ‘韓·中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내실화 및 인문유대 강화 방안’ 국제학술회의 기조연설 발췌문이다. 이 글에 포함된 의견은 저자 개인의 의견으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하다.

■ 김성한

現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前 외교통상부 차관. 미국 텍사스대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외교안보연구원에서 교수, 미주연구부장 등을 지냈으며, 국방부 자문위원, 한국정치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

■ 김소정

現 ETRI 부설연구소 선임연구원.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에서 ‘공공영역에서 프라이버시 영향평가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

■ 김중섭

現 任韓國濟州大學翻譯研究所韓中科教授。于台灣政治大學東亞研究所獲得博士學位，主要研究領域為台灣問題、兩岸關係等方面。
現 제주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한중과 교수. 대만 정치대학 동아연구소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주요 연구관심 분야는 대만문제, 양안관계 등임.

■ 방수옥

現 복단대학교 국제문제연구원 부교수. 중국 동북사범대학 정치학과를 졸업한 후, 한국 경남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음. 2002년 6월부터 복단대학교에서 재직 중이며, 연구 관심 분야는 국제안보, 한반도 문제와 동북아 국제관계, 한중관계 등임. 저서로는

『戰後韓國外交와 中國: 理論과 政策分析』(2011), 『朝鮮半島와 國際關係』(2012), 『中國의 外交政策과 韓中關係』(2004) 등.

■ 손기웅

現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연구 분야는 평화(안보) 및 환경문제, 통일정책, 남북한 교류협력, 독일통일문제.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겸임교수.

■ 송민순

現 경남대학교 석좌교수. 외교부 북미국장, 주 폴란드 대사, 외교부 차관보(6자회담 수석대표), 대통령비서실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장관급), 제34대 외교부 장관, 제18대 국회의원(민주당) 등 역임.

■ 신각수

외교통상부 제1차관·제2차관, 주 일본대사, 주 이스라엘대사 등 역임. 서울대에서 국제법 박사학위 취득함.

■ 유현석

現 국제교류재단 이사장.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 주요경력으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 중앙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한국세계지역학회 부회장 등이 있으며, ‘국제정세의 이해’를 비롯하여 다수의 저서와 논문이 있음.

■ 유흥태

現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동연구소 초빙연구원.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에서 중동지역학으로 석사 학위, 이란 이스파한 국립대학교에서 정치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 “이란 에너지 산업 연구: 석유와 천연가스 중심으로,” “A Study of Rural Development in Iran through the White Revolution: Comparing with South Korea’s Rural Development Program(Saemaul Undong)” 등의 논문과 페르시아의 종교, 고대 페르시아의 역사, 이란의 역사, 에스파한 등 다수의 저서가 있음.

■ 윤병세

現 외교부 장관

■ 이상철

前 주이란 대사

■ 이재현

現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호주 Murdoch University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 한국동남아연구소 전임연구원, 외교안보연구원 객원교수 등을 역임. “전환기 아세안의 생존 전략: 현실주의와 제도주의의 중층적 적용과 그 한계” 『동아연구』, “미국의 대 동남아 재관여 정책과 동아시아 지역 협력 참여: 달라진 환경과 새로운 도전” 『외교안보연구』, “Transnational Natural Disasters and Environmental Issues in East Asia: Current Situation and the Way Forwards in the perspective of Regional

Cooperation” IFANS Review 등의 논문이 있으며, 연구분야는 동남아 정치 및 국제관계, 아세안, 동아시아 지역협력, 비전통안보, 인간안보, 개발협력 등.

■ 장노순

現 한라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과를 졸업하고, 미국 Florida State University에서 정치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음. 주요 경력으로 국정홍보처 전문위원을 역임했음. 주요 저서로 『국가정보학(공저)』, 『테러리즘(공역)』 등이 있고, 논문으로 「테러와 정보의 역지전략」, 「정보실패와 미 의회 정보감독의 정파성」 외 다수가 있음.

■ 장지향

現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며 同 연구원 중동연구센터 소장. 외교부 정책자문위원.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학사와 석사 학위를, 미국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 중동정치, 비교정치, 정치경제,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관한 다수의 저술이 있음.

■ 조양현

現 국립외교원 교수.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일본 동경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를 취득. 일본 정치외교, 한일관계, 동아시아 지역주의, 아시아태평양 국제관계 및 외교사가 주요 연구분야이며, 저서로는 *아시아地域主義とアメリカ* (2009), *외교문서 공개와 한일회담의 재조명I* (2010, 공저), *일본과 동아시아* (2011,공저), *현대*

외교정책론(제2판) (2012, 공저) 외 다수가 있음.

■ 주철기

現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 주모로코 대사, 외교통상부 본부대사, 주 프랑스 대사,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한국협회 사무총장 겸 부 회장 등을 역임. 서울대 문리대를 졸업하고 프랑스 국제행정대학원을 수료한 후 벨기에 브뤼셀 자유대 대학원에서 국제정치학 석사학위를 취득.

■ 진행남

現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경희대학교에서 언론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음. 연구 분야는 동아시아 문화 네트워크, 남북관계, 동아시아 다자협력(제주프로세스), 한류와 문화공동체 등임. 최근 연구로 「신한류와 동아시아 문화 네트워크」, 「북한의 한류현상과 독일통일 과정에서의 방송매체의 영향」, 「신한류를 통한 공공외교의 활성화 방안」 등이 있음.

■ 한인택

現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연구 분야는 국제정치경제, 핵전략, 공공외교.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 학사 및 정치학 석사를 취득하고, UC 버클리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음.

■ 황병무

現 국방대학교 명예교수. 연구 분야는 국제정치. 서울대학교에서 학사, 석사를 받고, 미국 캘리포니아대 리버사이드에서 정치학 박사를

취득. 노무현 정부 시 국방발전자문위원회 위원장, 국제정치학회 회장(1995년) 등을 역임. 주요 저서로 ‘신 중국군사론’, ‘한국 안보의 영역, 쟁점, 정책’ 등이 있음.

■ **Ian ANTHONY**

Dr. Ian Anthony is the Director of the Arms Control, Disarmament and Non-proliferation Programme at SIPRI. SIPRI is an independent, international institute located in Stockholm that conducts research on issues of peace and security. Nuclear arms control has been an important element of the research programme since it was founded in the 1960s.

■ **CHO Taeyong**

Ambassador Cho is Special Representative for Korean Peninsula Peace and Security Affairs. Before he was named for the current position, he was ROK ambassador to Australia. His other previous posts include ROK ambassador to Ireland, Director General for the Task Force on North Korea, and Deputy Head of the ROK delegation to the Six-Party talks held in Beijing.

■ **Patrick CRONIN**

Patrick Cronin 박사는 워싱턴 DC에 소재한 초당적 싱크탱크인 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의 Senior Advisor이며 同 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프로그램의 Senior Director임.

■ **Julian DIERKES & Otgonbaatar BYAMBAA**

Julian Dierkes는 캐나다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아시아 연구소의 부교수이며, Otgonbaatar Byambaa는 일본 와세다 대학교 아시아태평양학 대학원 박사후보생.

■ **HAN Intaek**

Dr. Intaek Han is Director of Research at the Jeju Peace Institute. He served as adviser to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and to the Ministry of Unification. Originally trained as an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specialist, Dr. Han has conducted research on nuclear strategy and public diplomacy. Dr. Han earned his Ph.D. in political science from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and his M.A. in political science and B.A. in economics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 **Steve J. JACKSON**

Steve Jackson is a Professor at the University of Otago, New Zealand and is also a Visiting Professor at the University of Johannesburg, South Africa. He completed his Ph.D. at the University of Illinois. The past-President of the International Sociology of Sport Association, Professor Jackson conducts research on globalisation, media and national identity.

■ **Vladimir PARAMONOV & Alexey STROKOV**

Dr. Vladimir Paramonov and Dr. Alexey Strokov are co-directors of

the analytical project “Central Eurasia”, www.ceasia.ru (Tashkent, Uzbekistan). They are also co-authors of the five books on Russian and Chinese policies, dozens of analytical reports, and hundreds of articles on different topics of the international relations in Eurasia.

■ **PARK Cheol Hee**

Dr. Cheol Hee Park is a professor at the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GSI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He is director at the Institute for Japanese Studies at the university. He earned his B.A. in political science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his Ph.D. in political science from Columbia University. His areas of expertise are international relations in East Asia, Japanese politics and diplomacy, and Japan-South Korea relations. His prior posts include assistant professor at the National Graduate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and, from 2002 to 2004, assistant professor at the Institute for Foreign Affairs and National Security. In 2005, Park received the Yasuhiro Nakasone Award for, among other accomplishments, his efforts to build mutual understanding between Japan and South Korea.